

- ❶ 경기, 천년의 문화사 -고려전기
- ❷ 경기, 천년의 문화사 -고려후기~조선전기
- ❸ 경기, 천년의 문화사 -조선후기~현대
- ❹ 경기 천년의 문화사(1~3책 영문판)
- ❺ 경기도 기호학파 문중의 인물과 사상
- ❻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인물
- ❼ 일제강점기 경기도의 재력가
- ❽ 경기도 장시와 포구
- ❾ 경기도 제사유적
- ❿ 경기도 출신 재외동포 항일운동가
- ⓫ 고려왕조와 경기를 보는 시선
- ⓬ 경기도 현대사의 어두운 그늘
- ⓭ 조선후기 도성방어체계와 경기도
- ⓮ 건국의 주역, 경기인물
- ⓯ 100년 전의 경기도
- ⓰ 한 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삼일운동
- ⓱ 경기백성실록
- ⓲ 경기도 근현대 생활문화 1
- ⓳ 경기도 근현대 생활문화 2
- ⓴ 경기도 근현대 생활문화 3
- ⓵ 경기도의 세거성씨
- ⓶ 고고학이 발굴한 경기도
- ⓷ 경기도의 여성인물
- ⓸ 경기도의 6·25
- ⓹ 사방의 근본, 경기관찰사의 성분과 역할
- ⓺ 신증동국여지승람 속 경기도의 고적 산천 사찰 역원
- ⓻ 도시의 두 얼굴 -경기도 신도시의 탄생과 성장
- ⓼ 기전지역의 봉수
- ⓽ 경기도의 태실
- ⓾ 경기도 도시 이야기
- ⓿ 경기도 양명학 산책
- ⓿ 경기도의 다문화
- ⓿ 50만 살의 청춘 -경기 북부로 떠난 시간여행-
- ⓿ 경기도 접경지역 이야기
- ⓿ 경기도의 민선도지사와 문화정책
- ⓿ 신도시 개발로 사라진 경기도의 마을과 유산
- ⓿ 경기백성실록 II

<경기도의 민선도지사와 문화정책>은 지역 일간신문 문화부장으로 지켜본 도지사 문화정책의 맥락을 되짚어보고자 기획한 것으로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도지사들이 추진한 문화정책의 흐름을 정리한 책이다.

오는 2025년은 민선시대 30주년이 되는 해다. 민주주의 제도로서 지방자치제도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민선시대 경기도의 문화역량이 얼마나 축적되었는가는 정확한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

그동안 경기도의 역사와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기도 문화자원이 늘어나고, 경기도만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와 예술의 노력이 기울여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천년 경기’의 핵(코어)은 여전히 확고하지 않아 보인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예술의 창조와 향수 측면에서 몰라보게 변화 발전하였다는 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어딘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도 감추기 어렵다. \_발간사에서

|  |   |
|--|---|
| 1장 지방자치와 문화정책<br>서술 목적과 순서<br>개념정리   | 4장 민선시대 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br>민선 1기<br>민선 2기<br>민선 3기<br>민선 4·5기<br>민선 6기 |
| 2장 민선시대 문화정책의 흐름<br>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변화<br>역대 민선 도지사의 문화공약   | 5장 에필로그<br>- 경기도 문화정책 어디로?  |
| 3장 민선시대 분야별 주요 문화정책<br>경기문화재단 20년<br>경기도 정체성 재정립<br>문화재 발굴·보존·활용<br>문화예술 기반 확충<br>문화예술 진흥과 향유<br>국제교류와 축제·행사<br>문화산업 |   |



경기문화재단  
경기민중문화재단

양훈도

경기도의  
민선  
도지사와  
문화정책

경기그레이트북스 35  
www.ggf.kr



# 경기도의 민선도지사와 문화정책

양훈도

경기그레이트북스 35

집필자

양훈도

현재 인천일보 논설위원이다. 1984~2007년 경인일보에서 기자, 지역사회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다. 늦깎이로 2012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사회문화언론 전공) 학위를 받았다. 2011~2021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시민교육을 강의했고, 2018년부터 수원대학교 사학과에 출강(북한현대사)하고 있다. 2014~2016년 경기문화재단 이사(비상임)를 지냈다. 『거기, 삶이 있었네 - 경기 근현대 자취 답사』(도서출판 글올읽다, 2012), 『경기 근현대 생활문화』 1~3권(경기문화재단, 2019), 공저로 『경기도 도시 이야기』(경기문화재단, 2022)를 썼다.

경기그레이트북스(GyeongGi Great Books)는 경기문화예술의 정수를 소개하고자 경기문화재단에서 간행하는 문화예술총서입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민선도지사와 문화정책



# 경기

경기도의  
민선도지사와 문화정책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경기학센터가 기획하였고 관련전문가가 집필하였습니다.

## ■ 1장 지방자치와 문화정책

1. 서술 목적과 순서 \_ 14
2. 개념정리 \_ 17

## ■ 2장 민선시대 문화정책의 흐름

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변화 \_ 32
2. 역대 민선 도지사의 문화공약 \_ 41

## ■ 3장 민선시대 분야별 주요 문화정책

1. 경기문화재단 20년 \_ 56
2. 경기도 정체성 재정립 \_ 90
3. 문화재 발굴·보존·활용 \_ 106
4. 문화예술 기반 확충 \_ 120
5. 문화예술 진흥과 향유 \_ 130
6. 국제교류와 축제·행사 \_ 138
7. 문화산업 \_ 152

## ■ 4장 민선시대 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

1. 민선 1기 \_ 168
2. 민선 2기 \_ 174
3. 민선 3기 \_ 180
4. 민선 4·5기 \_ 187
5. 민선 6기 \_ 195

## ■ 5장 에필로그 - 경기도 문화정책 어디로?

## 경기도 민선도지사과 문화정책을 발간하며

오는 2025년은 민선시대 30주년이 되는 해다. 민선 8기까지 이르는 동안 민주주의 제도로써 지방자치제도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관선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더는 들을 수 없다. 그러나 민선시대 경기도의 문화역량이 얼마나 축적되었는가는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K-팝, K-드라마처럼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가 오늘날의 ‘K-컬처’ 확산에 기여한 몫이 작지 않다. 민선시대 들어 문화와 예술의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산업에 정성을 쏟은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문화와 예술은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현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민선시대가 요구하는 경기도 정체성 재확립은 어떠한가. 경기도의 역사와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기도 문화자원이 늘어나고, 경기도만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와 예술의 노력이 기울여진 게 사실이지만, ‘천년 경기’의 핵(코어)은 여전히 확고하지 않아 보인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예술의 창조와 향수 측면에서 몰라보게 변화 발전하였다는 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어딘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도 감추기 어렵다.

2021년 초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로부터 민선시대 문화정책을 정리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응했던 이유는 지역 일간지 문화부장으로 지켜 본 문화정책의 맥락을 되짚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시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들은 경기도 문화역량의 신장을 가리키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깨끗이 수공하기 어려운 일말의 아쉬움 같은 것이 늘 감지되는바 이번 작업을 통해 그 진실을 파악해 보자는 욕심도 있었다.

실제 작업에 착수해보니 그야말로 욕심이었다. 경기도 문화역량을 확인할 척도와 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내 한계 밖의 일이라는 것이 금세 드러났다. 고민 끝에 대안으로 그동안 민선 도지사들이 추진한 문화정책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만족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의 작업일지라도 제대로 해 두면 언젠가 발판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를 달랬다. 물론 그마저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이 책에서 다룬 시기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다.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가 재직 중일 때 집필을 시작했기에 민선 7기는 추후 과제로 미뤄두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문화정책의 범위도 핵심적인 영역으로 좁혀 잡았다. 그 광대한 문화의 범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선택한 영역에서도 세밀한 사항까지는 파고들어가지 못하고, 주요하다고 판단한 정책과 사업에 한정했다. 하여, 빠뜨린 대목이 적지 않다. 실수나 착오도 걱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평가를 과감하게 드러낸 대목이 많다. 특히 4장과 5장이 그러하다.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해석과 추론일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문화역량이 질적으로 도약하려면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필자의 단견이 논의의 장을 펼치는 실마리 구실을 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독자의 너그러운 이해와 날카로운 비판을 기대한다.

2022년 10월 15일

양 훈 도 씀



1장

# 지방자치와 문화정책

서술 목적과 순서

개념정리

# 1. 서술 목적과 순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민선 1기 단체장 선거를 앞둔 1990년대 중반은 새로운 천년도 앞둔 시점이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담론이 넘쳐났다. ‘문화의 세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논자에 따라 규정이 달랐으나, 산업적 가치가 중심에 놓이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으니 그 자리를 문화적 가치가 차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소박한 예측이 ‘문화의 세기’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감각이었다. 가장 흔한 예가 “잘 만든 영화 1편의 가치가 자동차 4만 대 수출과 맞먹는다”는 속설이었다. 문화를 경제로 환원한 설명이었으나 문화의 세기는 그런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존재했다.

민선시대가 들어서기 전에도 문화정책은 존재했다.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 통제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기껏해야 지원·관리 수준에 머물렀다. 민선시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화정책이 필요했다. 지방자치제도의 전제인 지역의 정체성 확립부터가 문화의 문제였고, 문화의 세기론과 맞물려 문화적 비전 제시가 요구되었으며, 산업화로 높아진 도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1기에서 6기까지 역대 민선도지사의 도정을 살펴보면 문화정책도 과거에 비해 위상이 높아진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문화에 역점을 둔 지사도 있고, 상대적으로 문화 영역을 소홀히 다룬 도지사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관선시대 문화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민선시대 30년(2025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

민선시대 들어 문화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는가? 민선시대는 문화의 가치를 무엇으로 보았는가? 궁극적으로 지방 문화행정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았는가? 문화 생산과 문화 향유 사이의 선순환과 균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졌는가? 문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었

는가? 민선시대 문화정책의 방향과 성취는 도민을 얼마나 만족시켰는가? 도민의 욕구와 수용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방대한 문화정책의 영역 가운데 어느 부문은 잘 했고, 어느 부문은 미흡했으며, 어떤 과제가 남아 있나? 어느 하나 쉽게 답할 수 없지만 이에 답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

민선시대 문화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문화는 투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다. 특히 문화예술은 다양성이 생명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한정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항상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요구하는 시대에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늘 문제가 된다. 심지어 경제적 수치로 환원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는 문화산업조차도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은 어느 날 갑자기 천재적 감독이 등장해 영화계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게 아니다. 그 영화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영화제작<sup>(단편 영화와 독립영화를 포함한)</sup> 시행착오와 영화계 전체, 나아가 문화계 전체의 역량 축적이 바탕을 이뤄야 한다.

현 시점에서 민선시대 문화정책의 흐름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역대 민선지사들은 어떤 문화공약과 문화담론을 제시했고, 어떤 문화정책을 폈는지 살펴보면 경기도 문화정책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민선시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때, 이 같은 정리는 향후 경기도 문화의 진일보를 위한 통찰과 시사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문화정책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문화예술, 문화재, 문화산업의 하위 영역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세분되는데다 종교<sup>(종무)</sup>, 언론과 출판, 학술이 기본적으로 문화정책의 대상이고, 체육과 여가, 관광까지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모든 영역을 일일이 검토해보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기 때

문에 이 책에서는 핵심적인 영역을 정리하는 데 그치려 한다.

서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책에서 사용하는 문화와 예술, 문화 산업, 문화정책 개념과 이론을 검토한 후 2장에서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정리한다. 경기도 문화정책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과 제도 변화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역대 민선 도지사들의 문화담론과 문화공약을 기수별로 살펴본다. 역대 도지사가 취임 초에 제시하는 도정비전과 정책과제 가운데 문화 분야 비전과 정책을 도지사의 문화 공약이라고 간주했다.

3장에서는 민선시대 수립되고 실행된 주요 정책을 부문별로 정리한다. 문화정책 정리 방식은 민선 기수별로 제시하는 게 가장 간명하다. 하지만 문화정책과 문화와 예술 분야 사업은 연속성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수별 정리가 마땅치 않다. 예를 들어 민선 1기에서 시작되어 민선 4기까지 이어지면서 완결된 사업을 특정 기수의 사업으로 서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영역과 부문별로 정책과 사업의 시말을 정리하고 나서 4장에서 민선 기수별 성과와 한계를 종합하는 방식이 더 균형 잡힌 서술이라고 판단했다.

이 책에서 취한 문화정책의 6개 영역은 문화재 발굴·보존·활용, 문화예술 기반 확충, 문화예술 진흥과 향유, 국제교류와 축제·행사, 문화산업이다. 어떤 정책과 사업이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는 경기도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되, 필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이들 6개 영역의 문화정책을 정리하기에 앞서 경기문화재단 20년<sup>(1997-2017년)</sup>의 흐름을 정리한 절<sup>(節)</sup>을 앞에 배치했다. 경기문화재단은 민선 1기에 설립된 이래 경기도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온 기관이다. 경기도의 문화정책 6개 영역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이 관여하지 않은 정책과 사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이 1997년 설립 이래 구조와 인력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6개 영역에 포함시키기 애매한 경기문화재단의 사업들을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4장에서는 민선 기수별로 취임 초 내세웠던 문화공약과 문화담론에 비추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어떤 한계를 보였는지를 정리했다. 이 책의 목적은 경기도 민선시대 문화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지 않고 그 흐름을 정리하는 데 있다. 정확한 포점은 정밀한 평가 모형을 수립한 후 방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야 가능한 연구 과제이므로,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 책을 출발점으로 그러한 평가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 경기도 문화정책은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했다.

## 2. 개념정리

문화에 대한 논의는 그 안에서 길을 잃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문화’ 개념만 해도 논자에 따라 수백 가지에 이른다. 미로와 같은 문화 담론을 정리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경기도 민선시대 문화정책의 전개와 관련하여 먼저 짚어두어야 할 개념과 이론들만 정리하기로 한다.

### 문화정책이란 무엇인가

국내 주요 문화연구자들이 문화정책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저술을 시작한 시점은 민선 지방자치 시작될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세기에 대한 담론과 지방자치 부활이 겹치면서, 지방의 문화행정과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정의되어야 문화 영역에서 정책 수립자와 집행자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 무슨 일을 진행해야 하

는지 틀을 잡을 수 있다. 주요 문화연구자들이 제시한 문화정책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문화정책 개념<sup>1)</sup>

|                 |  |
|-----------------|--|
| 정홍익(1997)       | 문화와 예술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전통을 승계하기 위한 정책                                     |
| 임학순(1996)       |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문화예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부문에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                       |
| 정갑영(1995)       | 국가 단위가 추구하는 문화에 대한 이상적 목표를 국가 개입을 통해 수행하는 과정   |
| 박광국(2000)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문화예술 부문에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 |
| 김정수(2006)       | 국가의 공권력에 의거하여 문화와 관련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
| 서순복(2007)       | 문화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해 의도된 일련의 수단과 행위   |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8) | 문화와 관련된 공적 목적(공익)의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   |

여러 문화정책 개념 정의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문화에 대한 공공적 개입’이다. 개입의 목적은, 국민들의 문화예술 복지 수준 향상, 국가의 문화적 이상 달성,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문화와 관련된 공공문제 해결, 문화적 공익 등으로 제시된다. 즉, 구성원들의 삶의 수준을 문화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시되는 수단 혹은 행동지침이 문화정책이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문화정책’은 “문화와 관련된 공적 목적<sup>(공익)</sup>의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sup>(한국문화예술진흥원)</sup>에 가장 가깝다.

1) 박혜자, 『문화정책 문화행정』(흔들의자, 2018), 25쪽.

## 문화권 ; 문화정책이 요청되는 이유

적극적 문화정책이 요청되는 근거는 인간이 천부적인 문화에 대한 권리(문화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상에 있다. UN인권선언은 이미 1948년 제27조 1항에서 “모든 사람은 공동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했다. 모든 인간은 문화권(文化權 · Cultural Right)을 가지며, 정치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문화권을 적극 보장해 줄 의무를 진다.

유네스코(UNESCO)는 인간의 문화권을 11가지로 세분하였다. ①신체적 문화적 생존권리 ②문화공동체와 연계하고 동일화하는 권리 ③문화적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 ④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⑤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권리 ⑥의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교육의 선택과 학습에 관한 권리 ⑧문화정책의 내실화에 참여할 권리 ⑨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창조할 권리 ⑩내적인 발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⑪사람들 스스로의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에 관한 권리.<sup>2)</sup>

우리나라 문화기본법도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제5조에서 문화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과 직결되므로 제5조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2) 서순복, 『창의한국과 문화정책』(박영사, 2020), 122~123쪽에서 재인용.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 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적 기본권의 문화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다. 누구나 성별·연령·신분·경제여건·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 모두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중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 모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셋째, 예술인의 권익은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예술인은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공헌자이기 때문이다. 넷째, 문화참여권이 중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들이 행복추구를 위해 생활문화 활동을 포함한 문화 활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들의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의 쾌적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정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에 적극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물론 존재한다. 세금 등 공공재원을 투입해 문화정책을 폈을 때 투입에 상응하여 문화 수준이 높아졌는지 경험적 검증이 어렵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로부터 문화에 투입할 재원을 경제나 사회복지 등에 사용했다면 사회

적 편익이 더 컸을 것이라는 논리가 도출된다.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결여된 사고방식이지만, 현실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주장이다. 문화재정 확충이 더딘 이유는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가들을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창의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있다. 예술가 지원은 창작활동에 전념토록 하여 작품의 수준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지만 예술가들의 내적 의욕을 저하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예술가들이 지원금을 따내는 데만 골몰하고 완성도 낮은 작품만 양산한다는 논리인데, 문화예술인을 모독하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일은 드물다. 이 논리는 검증이 불가능한 추정이며, 비판을 위한 비판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비판은 문화정책이 적극적일수록 문화예술이 발전한다는 논리는 신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다.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장르, 특정 그룹에 몰아주기 지원을 한다거나, 강력한 이익집단이 지역문화예술계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늘어도 정책 효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같은 정책 실패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문화정책을 검토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비판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을 공적으로 지원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흔히 ‘팔길이 원칙’<sup>(Arm's-Length Principle)</sup>이라 일컬어진다. 팔길이 원칙이란 말 그대로 팔 하나 길이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원을 하되, 더 밀착해서 간섭해서는 안 되며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팔길이 원칙은 ‘공적 지원의 책임’과 ‘창작에 대한 불간섭 의무’를 동시에 요구한다.

영국에서 1945년 채택된 이 원칙은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천명되어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중시되고 있다. 하지만 공적인 자금이 지원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부과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지원받는 문화예술인의 공공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사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권 논의에서 한 가지 더 빼놓지 않아야 할 흐름은 ‘문화의 민주화’에

서 ‘문화적 민주주의’로 초점이 이동했다는 사실이다. ‘문화의 민주화’란 문화 권을 누구나 고급스러운 문화를 누구나 누릴 권리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고급문화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화소외 계층에게 훌륭한 문화를 접하게 하고 누리게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지면서, 문화를 민주화할 게 아니 문화적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해졌고, 문화정책의 초점도 문화적 민주주의 추구로 변화했다. 문화적 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여, 어떤 문화 장르에서든지 창조적 소양을 기르고 창조적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문화정책의 주안점을 두자는 발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양자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적 민주주의’ 비교<sup>3)</sup>

| 문화의 민주화      | 문화적 민주주의     |
|--------------|--------------|
|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 |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 |
| 문화의 단일성      | 문화의 다양성      |
| 기관(제도) 중심    | 비공식/비전문가 조직  |
| 기획의 기성화      | 역동적 활성화      |
| 틀(구조) 중심     | 활동 중심        |
| 전문가 중심       | 아마추어 중심      |
| 미학적 질        | 사회적 동등성      |
| 보존           | 변화           |
| 전통           | 개발과 역동성      |
| 향상           | 개별활동         |
| 생산물          | 과정           |

3) 김정수, 『문화행정론』, (집문당, 2017), 91쪽. 김정수는 이 표를 Jorn Langsted의 1990년 논문으로부터 인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문화, 예술, 문화예술

문화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단순화하여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를 예술과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둘째, 문화를 문화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세계관과 인식 등의 정신적인 무엇으로 보는 관점이다. 셋째, 문화를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을 취하면 문화의 영역은 크게 확장된다.

한국 문화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면, 문화를 보는 관점은 첫째 관점에서 셋째 관점으로 이동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올 정도다 “문화정책 현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국이 신설된 1995년까지는 문화=문화예술=예술,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문화=산업,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었지만, 2006년부터는 문화=삶의 총체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sup>4)</sup>

강조를 위한 과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 문화정책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 같은 흐름으로 바뀌어 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4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3조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징의 총체를 말한다.”

물론 ‘문화=문화예술=예술’이라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기는 했어도 제2조 ①항 1에서 문화예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예술로 분류되지 않는 어문을 제외하면, 예술의 전통적인 장르가 ‘문화예술’의 하위 범주로 열거되어

4) 서순복, 앞의 책, 113~114쪽.

있다.

문제는 문화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문화와 예술의 관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문화=문화예술=예술’이던 시대에는 문제 삼을 여지조차 없던 ‘문화’와 ‘예술’이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하거나 심지어 마찰을 빚는 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문화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문제는 한층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별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던 ‘문화예술’의 표기를 ‘문화·예술’로 쓰는 경우가 늘어났다. 두 표기법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문화예술을 대하는 미묘한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 책에서는 ‘문화예술’로 통일했다. 문화=예술이라는 오래된 관점을 견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어도 문화의 정수(精髓)는 예술이라고 보는 견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이다.<sup>5)</sup>

## 문화정책의 영역

문화관광부가 2005년 펴낸 『창의 한국』은 문화정책(문화행정)의 영역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민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 언어, 관념, 관습, 믿음, 종교 등 △문화유산과 예술(Heritage and the arts): 시각예술, 공예, 음악, 연극, 영화, 고고학, 박물관, 도서관, 문서보관소 등 △교육과 학습(Education and learning):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 학습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경관(Natural and man-made landscape): 건물, 공원, 전원 등 △대중매체와 문화산업(Mass media and cultural industries) △관광(Tourism) △스포츠와 레저(Sports and leisure pursuits)<sup>6)</sup>

그런데 문화정책의 영역을 이렇듯 최 광의로 망라하게 되면 인간생활의 대부분 측면이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문화유산과 예술에 초점을 맞추었고, 민선시대 들어 기초가 놓인 문화산

5) 문화산업에 예산과 자원이 집중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지라도, 문화산업의 저력 또한 예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융합이 이루어져야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

6) 김정수, 앞의 책, 98쪽에서 재인용.

업과 관광 영역의 일부 흐름에 주목했다. 교육도 예술교육 영역으로 한정했다.

문화정책의 영역을 문화가 사회적으로 순환하는 구조에 따라 나누어볼 수도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어떤 행정을 펴야 원활한 순환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 책에서는 문화가 생산<sup>(학습 및 창조)</sup> — 유통<sup>(전달)</sup> — 소비<sup>(향수)</sup> — 보존<sup>(축적)</sup> — 교류의 흐름으로 순환한다는 김정수 교수의 모델을 그대로 인용한다.<sup>7)</sup>

생산 측면에서 문화정책은 전문 예술인이든 아마추어 예술가든 창의성과 다양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학습과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창작을 위한 자금지원과 시설·공간 제공도 이 영역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다. 유통 영역에서는 생산된 작품이 적절히 소비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장을 확대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소비 영역에서는 누구나 문화와 예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 향유 능력을 기르도록 경험과 훈련의 장을 넓히는 데 힘써야 한다.

보존 영역에서는 오랜 기간에 축적된 문화적 성취물을 잘 관리·보존하여, 문화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영역에 속한 과제로 문화유산의 보전, 문화원형의 디지털화, 문화주권의 수호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류 영역에서는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 문화의 유입을 통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더욱 자극·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문화권과 폭넓은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일도 문화정책의 목표가 된다.

이들 문화정책의 5대 영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문화정책의 5대 영역

| 영역 | 내용 |
|----|----|
|----|----|

7) 이 모델은 이케가미 준의 '문화의 사회적 순환' 모델을 약간 수정한 김정수의 모델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김정수, 앞의 책 102-105쪽; 표도 이 책에서 인용했다.

|     |                                      |
|-----|--------------------------------------|
| 생 산 |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서 창의성·다양성의 증진과 창작의 기회 확대 |
| 유 통 | 문화-예술 생산자와 소비자의 원활한 만남을 위한 거래비용 최소화  |
| 소 비 | 소비자의 문화접근 기회 확대와 문화향수 능력 배양          |
| 보 존 | 문화적 정체성·정체성 유지를 위한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주권 수호  |
| 교 류 | 우리 문화의 대외적 소개와 외래문화의 소개              |

##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은 원래 비판적 용어로 출발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표준화되고 대량생산되는 상업적인 문화’, 즉 대중문화를 가리키는 말로 제시한 용어가 ‘문화산업’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는 ‘문화예술 분야를 상품화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지향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sup>8)</sup> 문화예술과 무관치 않으나 무게중심이 상업성에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은 대중문화와 경제계에서 더 관심을 갖는 분야였다.

문화산업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계기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획기적 발달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도 2000년을 전후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였고, 디지털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생산-유통-소비가 분리되어 있던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생산의 주체가 유통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인 생비자(producer + consumer)를 출현시켰다. 디지털 기술에 능한 ‘문화 생비자’의 탄생은 문화산업의 폭발적 팽창으로 이어졌다.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제2조 2항)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한 첨단 ICT 기술이 문화산업에 지속적으로 융합되고, 새로운 창작 산업이 확대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면

8) 박혜자, 앞의 책, 116쪽.

서 문화산업의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문화산업발전기본법에 규정된 문화산업의 정의와 영역, 문화콘텐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지칭한다. 문화산업의 11가지 영역은 <표>와 같다.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 이들의 복합체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된다. 문화콘텐츠의 창작은 생활양식, 전통문화, 예술, 이야기, 대중문화, 신화, 개인의 경험, 역사기록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나온다.<sup>9)</sup> 문화콘텐츠를 디지털화한 것이 디지털문화콘텐츠다.

매력적인 문화콘텐츠가 생산·공급되어야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는 문화예술의 창의성(creative)을 기반으로 한다.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의 생성은 문화예술인의 잠재적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다양하고 개방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표> 문화산업의 영역

|   |
|---|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9) 김정수, 앞의 책, 172쪽.

## 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은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일종의 거버넌스 조직이다.<sup>10)</sup> 문화재단은 누가 설립했는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기업체가 세우면 기업문화재단, 자치단체가 설립하면 지역문화재단,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면 특별법 문화재단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설립된다. 지역문화재단은 비영리 법인의 형식으로 설립되는데, 문화예술관련 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한다.

문화예술은 ‘팔길이 원칙’이 중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관료적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문화예술의 창의성은 오히려 뒷걸음질할 수 있다. 따라서 팔길이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 민간기구가 지원업무 운영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행정 관료들의 간섭은 배제하도록 문화예술 민간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지역문화재단들이 설립된 맥락을 검토해보면, 지역 홍보 필요성도 설립 동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를 강조하고 발전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느냐가 해당 지자체의 이미지를 좌우하게 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앞다투어 문화재단 설립에 나선 측면도 있다. 즉, 문화재단 설립 자체가 지역 홍보의 주요 수단인 하나였다. 그런데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은 기능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광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문화정책을 주로 하면서 부가적 임무로 문화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초문화재단 상당수는 지역 문예재단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주기능으로 하면서 문화축제와 예술교육 등 문예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수행하

10) 한국 지역문화재단의 효시는 경기도가 1997년 설립한 경기문화재단이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개념과 기능 등은 경기문화재단 설립 이후 정립되었다. 문화재단에 대한 서술은 김정수, 앞의 책, 475-480쪽을 참조 인용했다.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해당 시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문화예산과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확보해 지역 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일이 주요 목적이다. 광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진흥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시설 운영 등으로 세분된다. 광역문화재단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문화정책 사업을 단지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정체성이 담긴 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콘텐츠화하는 지역특성화 사업도 벌인다.

기초문화재단은 초기에는 대규모로 건립된 문화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 차원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공무원 정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 유지와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을 정원 내에서 확보하기가 힘들고, 설령 인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순환 보직 시스템에서는 전문성이 쌓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기초문화재단도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다.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해야 할 사업의 범위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①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②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③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④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⑤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⑥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도 대체로 지역문화진흥법의 규정 범위 안에 있다. 하지만 민선지사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미묘하게 변화했다.



2장

# 민선시대 문화정책의 흐름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변화

역대 민선 도지사의 문화공약

# 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변화

관선시대 경기도에는 독자적인 문화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 따라 하달되는 문화행정 지시를 처리하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특유의 문화예술 진흥정책과 정체성 찾기 노력 등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자율성의 폭은 매우 좁았다.

민선시대에 들어서서도 경기도의 문화정책은 중앙정부 문화정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독자적인 문화담론을 생산하고 문화정책을 수립·집행해 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국의 문화담론은 중앙이 독점해온 관행의 영향도 크다. 민선시대 문화정책이 전개되면서 점차 독자적인 문화담론이 등장하고, 문화정책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문화정책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흐름과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민선시대 경기도의 문화정책의 좌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문화정책의 기조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6공화국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각 정부의 문화정책의 이념과 특징을 먼저 살펴본다.

## 제6공화국

제1~5공화국의 문화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반공주의와 정치적 권위주의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문화 부문에서도 통제 위주의 문화정책이 펼쳐졌다. 관선시대 경기도의 문화정책 역시 그 영향으로 관례적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문화행정과 문화정책에서 변화가 시작된 시점은 제6공화국(1988-1993년) 들어서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집권한 노태우정권의 제6공화국

은 ‘문화주의’를 내세웠다. 제6공화국의 문화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90년 문화를 전담하는 독립 정부부처인 문화부를 신설한 일이다. 제6공화국은 정부 내 문화부 장관의 서열을 7위로 설정함으로써 문화를 중요시하는 정부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6공화국 이전까지 문화를 담당하는 부처였던 문화공보부는 검열과 통제, 규제 중심의 문화행정을 펼쳤다. 문화부 신설을 계기로 문화정책의 기조가 참여와 진흥, 조장을 통한 문화발전으로 전환되었다. 제6공화국 문화부는 1990년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화발전 10개년계획 1990~1999>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층 간, 지역 간 문화격차를 좁히고, 국민들이 문화를 누릴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6공화국 시기에는 냉전 해체에 따른 ‘북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남북문화교류도 추진되었고, 국제문화교류의 폭도 이전 정부보다 훨씬 넓어졌다.

## 문민정부

민선시대 지방자치 문화정책은 문민정부<sup>(1993~1998년)</sup>의 문화정책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문민정부가 처음으로 내건 문화정책 슬로건은 ‘겉에 있고 함께하는 문화, 누구나 즐기고 신명 나는 문화’였다. 문민정부 문화정책의 기조는 제6공화국보다 더 짜임새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제6공화국 들어 신설된 문화부는 문민정부에 와서 체육청소년부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가 되었으나, 문화정책은 한 차원 수준이 높아졌다.

문민정부가 1993년에 발표한 <문화창달 5개년계획(1993~1997)>은 “문화창달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선진 문화복지국가로 진입하겠다”는 문화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5대 정책기조로는 ①자율화: 규제에서 자율로 ②분산화: 중앙에서 지역으로 ③대중화: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 ④일체화: 분단에서 통일로 ⑤세계화: 보다 넓은 세계로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한

5대 정책과제는 ①민족정기의 확립 ②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 ③문화창조력 제고와 문화 환경 개선 ④문화산업 개발과 기업문화 활성화 지원 ⑤한겨레문화의 조성 and 우리 문화의 세계화로 정리되었다.

문화산업에 대한 강조도 문민정부에서 시작되었다. 1994년 문화체육부에 문화산업국이 신설되었고, 그 아래 문화산업기획과, 영화진흥과, 영상음반과, 출판진흥과 4개과가 편제되었다. 부가가치 높은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편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에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진흥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문민정부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민정부 문화정책 기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문화복지와 지역문화 강조다. 문민정부 문화복지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환경의 조성이었다. 추진 방향은 전문예술인 중심에서 일반인 중심으로, 중심계층 위주에서 취약계층 위주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문화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수권을 확대한다는 제6공화국 문화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다.

1996년부터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의 집’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문화의 집’은 문민정부의 문화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문민정부의 지역문화 강조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부활을 앞둔 시점이기도 했고, 서울 중심 개발의 부작용으로 서울-지역 간 극심한 문화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었다.

##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sup>(1998-2003년)</sup> 문화정책 기조는 <새문화관광정책><sup>(1998년)</sup>에 담겨 있다. 핵심을 간추리면, 문화의 힘으로 ‘제2건국’을 이루고, 문화를 중심 가치로 하는 지식정보사회를 추구하며, 문화주의를 통한 성숙한 민족공동체를 형성

하고, 문화정체성과 보편성의 조화로 열린 문화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문화체육부는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①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②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③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기반 조성 ④창조적 예술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⑤문화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⑥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계승·발전 ⑦문화산업의 획기적 발전체 계 구축 ⑧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 추구 ⑨문화를 통한 민족통합 지향 ⑩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이 제시되었다.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기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팔길이 원칙’이 문화정책의 원칙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은 문화정책이 규제와 통제에서 자율 진흥 위주로 전화하기 시작한 제6공화국 이래 흐름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립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팔길이 원칙’은 논란 속에서도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국민의 정부가 ‘문화예산 1%’라는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화부문 예산이 전체 국가 세출의 1%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제6공화국, 문민정부에서도 문화예산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1%에 미치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화예산 1%는 2000년 처음으로 실현되었고, 2001년에는 문화예산이 총액 1조 원을 넘어섰다.

문민정부에서 중시되기 시작한 문화산업은 국민의 정부 들어 훨씬 강조되었다. 외환위기 속에 탄생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갈 비전으로 문화산업을 부각시켰다. 문화산업을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기간산업 분야로 간주하고 중점 육성 정책을 펼쳤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이어지는 문화산업 강조 흐름은 이후 경기도의 문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고,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해 문화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는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재원을 대폭 확충했으나 지속 발전의 청사진과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까지 밀고 나가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참여정부

참여정부<sup>(2003-2008년)</sup> 문화정책의 기초는 2004년 보고서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과 『새예술정책』에 정리되어 있다. 『창의한국』은 문화행정의 3대 목표로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제시하고, 5대 기본방향 및 27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기본방향은 1. 문화와 개인: 문화 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2. 문화와 사회: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3. 문화와 경제: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화, 4. 문화와 지역: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5. 문화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이다.

이 가운데 네 번째 목표로 제시된 문화와 지역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지역 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새예술정책』은 이전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에 실질적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예술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에서 예술정책의 기초를 재설정하기 위해 나온 보고서다. 『새예술정책』은 ‘예술의 힘, 미래를 창조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정책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4대 기본방향과 1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예술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전통적 기존 장르 중심에서 탈장르 및 실험적 대안적 예술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도 집행·규제·감독자에

서 기획·조정·평가자로 전환기로 했다. 기성 주류작가의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퍼던 지원정책은 창작·매개·향유 균형발전 방향으로 전환하고 비주류작가와 신진작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술정책 추진체계는 관 주도에서 민간의 정책결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중앙의 정책결정과 지방의 집행으로 위계화되어 있던 구조를 중앙-지방-민간 분권 및 협력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고와 기금에 의존하던 재원을 민간기부 활성화 등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참여정부는 문화의 디지털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 문화미디어국을 신설하고, 예술국에 문화예술교육과를 설치했다. 2005년에는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했다. 또한 예술지원의 ‘팔길이 원칙’ 차원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개편했다. 지형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했다.

참여정부 문화정책에서 두드러진 사업범주를 꼽자면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나눔사업을 들 수 있다. 문화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아동·결혼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 문화나눔사업이다. 2005년 시범 실시에 들어간 문화바우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관람비용을 지원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문화예술위원회가 2006년부터 주관하여 본격 실시되기 시작했다. 문화나눔과 함께 공간문화·공공디자인 정책, 문화예술교육의 강화도 참여정부 시기에 강조된 문화정책 사업들이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였는데, 문화부문에서도 2004년부터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책이 추진되었다. 인력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통한 지역의 문화적 활력 제고, 민·관·학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체계 정립, 지방

문화원을 지역문화진흥의 구심체로 육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운영, 문화·관광을 통한 기초단위마을 살리기 운동 추진 등이 주요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참여정부도 문화산업을 중시했다. 2003년 문화콘텐츠산업을 10대 국가 미래전략산업의 한 분야로 선정했다. 2005년에는 콘텐츠(Contents), 창의성(Creativity), 문화(Culture) 3C를 바탕으로 “C-Korea,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참여정부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다.

##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문화정책 비전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된다. 이 비전 아래 △문화가 펼쳐지는 나라 △콘텐츠로 부유한 나라 △브랜드가 있는 관광의 나라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가 4대 목표로 제시됐다. 예술지원 정책에서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 지원 △생활 속 예술을 4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기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내용보다는 ‘공공성의 원칙’과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지원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문화관광부는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명칭도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었다. 또한 문화복지 예산이 확대되고, 박물관 무료입장이 확대되었고, 2010년부터 경륜·

경정 수익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토록 했다.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했다.

##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sup>(2013~2017년)</sup> 문화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문화융성’이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기반 구축과 함께 4대 국정기조로 내세웠다.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재정 2% 달성을 약속했고,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화융성 8대 정책과제로 △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가치 정립 △전통문화의 생활화 △생활속 문화 확산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예술계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 △문화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축제화를 제시했다. 문화융성의 3대 전략으로는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설정했다.

문화융성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해 △문화재정 2% 달성과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참여 기회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들었다. 확충되는 재정은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창작 기반 마련, 콘텐츠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각종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과제로 들었다. 문화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제도 도입, 한국의 정신적 가치 진흥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정신문화포럼’ 설치와 정례화 등이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됐다.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위해서는 △한국스타일 콘텐츠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

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화융성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된 ‘문화가 있는 날’을 꼽을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로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는 취지였다. 문화의 날에는 국민 누구나 주요 문화시설에서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이 가장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추진 사항을 명시했다.

문화기본법에 따라 2014년에는 ‘문화영향평가제’가 도입됐다. 문화영향평가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확산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2016년부터 매년 본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는 정책 시행 전 해당 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정책이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도 주목된다. 이 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내걸었으나, 2016년 하반기에 터져 나온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계 인사들이 상당수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문화체육부 장·차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권력과 문화예술의 관계를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말았다.

## 2. 역대 민선 도지사의 문화공약

역대 민선 도지사들은 당선 후 자신의 도정 비전과 분야별 정책목표 및 과제를 정리해 제시했다. 이 과정을 거쳐 제시된 문화 분야 목표와 과제는 해당 도지사의 문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민선 도지사의 문화 공약은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도정 책임자로서 문화를 보는 관점과 철학을 더하여 완성된 문화 분야 약속이다. 각 기수의 도지사 임기 중 경기도의 관련 부서와 경기문화재단이 수립하고 집행한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은 이 문화공약의 틀을 기반으로 한다.

### 민선 1기 이인제 도지사

이인제 도지사는 1995년 7월 1일 민선 1기 경기도지사 업무를 시작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997년 9월 18일자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임수복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1997년 9월 19일부터 이 지사의 잔여 임기인 1998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 업무를 수행했다.<sup>11)</sup>

이인제 지사의 도정 공약은 4대 도정방침,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으로 요약되었다. 4대 도정방침은 1. 경제제일, 2. 환경우선, 3. 문화근본, 4. 행정체제로 표현되었는데, 문화가 경제, 환경에 이어 세 번째로 꼽히는 우선 가치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문화를 독립적 도정방침 항목으로 설정한 도지사는 관선시대에는 없었다.

이 지사의 문화 인식은 다음 글에서 잘 드러난다. 이 지사는 문민정부의 각료<sup>(노동부 장관)</sup> 출신답게 김영삼 시대 문화담론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의 중요성

11) 임 부지사는 권한대행이었으므로, 독자적 도정방침을 수립하지는 않고, 이 지사시기에 결정된 틀 안에서 문화행정을 펼쳤다.

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는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규정하고 그 사회가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문화가 쇠퇴하면 물질적인 여유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주민의 일체감도 형성될 수 없다.

문화근본은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삶의 기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등경기’를 향한 경기공동체를 형성하고 인간다운 삶의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며 나아가 이를 세계문화와 접목시켜 우리 향토문화의 세계화 내지 보편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sup>12)</sup>

‘문화근본’이라는 도정방침 아래 제시된 4가지 중점정책은 △경기도 정체성 재확립 운동 △문화예술진흥 기반 구축 △문화와 비즈니스의 연계 △스포츠·레크레이션 환경 만들기다. ‘경기도 정체성 재확립 운동’은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시점이어서 어떤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 재확립을 위해 추진할 중점사업으로는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의 조직적 전개, 경기이미지 형성<sup>(C.I.P)</sup> 계획 추진, 기록문화 창달 운동 전개가 꼽혔다. 정체성을 형성의 관점에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화예술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사업으로는 △문화예산 1% 시스템 도입 운영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경기국악단 창단 및 경기국악제 개최를 제시했다. 문화와 비즈니스 연계 정책의 중점사업은 △국제도에 문화축제 개최 △‘97 고양 세계 꽃 박람회 개최 지원 △경기도 지역상징물 만들기

---

12) 『경기도정백서 : 1995.7.1~1996.12.31』(경기도, 1997)

운동 전개 △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가 선정되었다.<sup>13)</sup> ‘문화근본’ 도정방침의 중점정책과 중점사업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이인제 지사 ‘문화근본’ 중점정책과 중점사업

| 중점정책             | 중점사업   |
|------------------|--|
| 경기도 정체성 재확립 운동   |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의 조직적 전개<br>-경기이미지형성(C.I.P) 계획 추진<br>-기록문화창달 운동 전개              |
| 문화예술진흥 기반 구축     | -문화예산 1% 시스템 도입 운영<br>-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br>-경기국악단 창단, 경기국악제 개최                    |
| 문화와 비즈니스의 연계     | -국제도에 문화축제 개최<br>-’97 고양 세계 꽃 박람회 개최 지원<br>-경기도 지역상징물만들기운동 전개<br>-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 |
| 스포츠·레크레이션 환경 만들기 | -대부·선감도 해양관광지 개발<br>-축령산 리조트 단지 조성<br>-월드컵 유치 관련 축구장 건립<br>-다채로운 스포츠 환경 만들기    |

이 지사의 문화 공약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문화 분야에 관한 한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선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가 문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으나, 국정 비전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2012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이 처음이었다. 또한 문화예술기반 구축에서 문화예산 1%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 점도 중앙정부보다 다소 앞섰다. 이인제 도지사의 독창적인 구상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 해소를 약속한 것이지만,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1% 확보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보다 앞서 있다.

13) 4번째 중점정책인 ‘스포츠·레크레이션 환경 만들기’의 중점사업으로는 △대부·선감도 해양관광지 개발 △축령산 리조트 단지 조성 △월드컵 유치 관련 축구장 건립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 만들기가 제시되었다. ‘문화근본’ 도정방침에 관광과 체육 영역이 혼입된 것은 관광과 체육을 문화의 하위 영역으로 보는 관점의 영향이다. 이 책의 목적상 관광과 체육은 문화예술과 특별한 관련이 있지 않은 한 제외했다.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역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앞선 발상이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전담할 전문기구를 경기도 산하 기관으로 세워 진흥사업을 맡기겠다는 취지였다. 이 구상은 이 지사 취임 후 바로 진행되어 ‘경기문화재단’ 설립으로 귀결되었다.

‘문화와 비즈니스의 연계’라는 표현에서 문화산업 개념이 아직 확실히 자리 잡지 않은 시대 배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갈수록 강조하기는 했으나, 경기도에서는 아직 문화산업이 낯선 개념이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중점사업을 보아도 국제 규모 축제 지원을 비즈니스와 연계시키는 정도를 제시하는 데 그쳐 본격적인 문화산업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민선 2기에 들어가서야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다.

‘문화복지’라는 개념은 문민정부 당시부터 부각되었으나, 경기도 민선 1기 공약에서는 ‘문화복지’라는 표현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문화·예술 향유의 측면 보다는 문화예술 기반조성이 더 시급한 과제였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민선 2기 임창열 도지사

임창열 도지사는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민선 2기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했다. 국민의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임창열 지사는 외환위기 1년 여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공천으로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되었다.

민선 2기 도정은 ‘21세기 도전 창조 희망의 경기’라는 기본 정신 아래 △경제회생 △규제혁신 △도정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을 5대 도정 방침으로 제시했다.<sup>14)</sup> 문화를 도정방침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던 민선 1기와는 달리, 민선 2기에서는 다섯 번째 도정 방침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정책 가운데 4번째로 ‘문화·체육의 진흥’이 제시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화가 도

14) 『1998년 경기도정백서』(경기도, 1999), 64쪽.

정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가 체육과 묶인 점은 전임 시기와 다를 바 없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정방침은 △함께하는 복지정책 추진 △여성이 편안하고 활동하는 경기도 △자율·창조의 교육행정 지원 △문화·체육의 진흥으로 정리되었고, ‘문화·체육의 진흥’은 중점사업으로 △문화기반의 구축 △문화의 생활화 △체육기반조성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선 1기 문화정책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문화의 생활화’가 등장한 점이 주목된다.

임창열 지사는 민선 1기 시절 작성된 <경기2020 : 비전과 전략>을 수정하여, 1999년 <21세기 경기비전 : 지식기반경기>를 내놓았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했던 ‘지식기반경제’는 임 지사 임기 내내 강조되었다. 임 지사 본인이 경제관료 출신인데다 외환위기 사태 직후 도지사에 당선된 배경으로 인해 민선 2기 경기도정은 경제회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1세기 경기비전>의 구체적 실천계획은 <제1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sup>(1998-2002)</sup>으로 구체화되었다. 5개년 계획은 4개 분야<sup>(산업·경제 분야, 공간 및 기반시설 분야, 환경 분야, 문화·복지 분야)</sup>로 나뉘어 수립되었다. 문화는 복지와 함께 묶여 4번째로 제시되는 데 그쳤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외환위기 와중에서 당선되었으나, 김 대통령은 문화정책 면에서 ‘팔길이 원칙’을 천명하고, 문화예산 1% 공약을 내세우는 등 문화를 중시하는 면모를 드러낸 반면 임 지사는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내에서 문화행정을 전개했을 뿐 개성 있는 문화정책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임 지사의 문화정책은 임기 초 공약을 정리하고 중점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였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문화예술 영역을 설립 이후 역할을 해 나가기 시작한 경기문화재단에 맡기고, 경기도는 예정된 행사와 새롭게 발굴한 사업들에 역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임진각 새천년 통일기원제, 2001년 세계도자기EXPO, 안토니오 가우디<sup>(Antoni Gaudi)</sup> 특별전과 스페인 까탈루냐 주 교류·협력 사업<sup>(2000년)</sup>, 임 지사 임기 말에 시작된 백남준아트센터 건립 등이 표적인 예다.

## 민선 3기 손학규 도지사

손학규 도지사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민선 3기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했다. 손 지사 시기 경기도 문화정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엿볼 수 있다.

삶의 질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문화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  
신문화 유산을 계승하여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확충하고,  
또한 그것들이 주민 생활에 접근함으로써 건강한 삶과 여가의 일부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민선 3기가 각종 문화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다  
양한 프로그램이 주민 가까이 가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민선 3기는 문화를 체험과 소비의 대상에서 벗어나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문화산업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가가치 원천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의 문화가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세  
상에서 문화자산이 갖는 부가가치 창출력은 막대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  
화적 자산을 세계적 표준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이러한 문화산업의 저변을 확  
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민선 3기가 추진한 한류우드의 건설 노력은 바로 이  
러한 시도의 구체적 사례이다.<sup>15)</sup>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민선 3기는 문화산업을 문화경쟁력과 연결시키는  
담론을 펴고 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중앙 차원에서 활발해진 문  
화산업 정책이 경기도에서도 민선 3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는 부가가치 창출과 자산의 원천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문화의  
향유 역시 문화산업의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강조되었다. 손 지사 때 적극 추진

---

15) 앞의 책, 33~34쪽.

된 고양의 한류우드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손 지사의 도정 슬로건은 ‘세계 속의 경기도’였다. 손 지사는 민선 2기까지 경기도의 비전이 지역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심장’인 경기도가 ‘Global Inspiration’을 통해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Global Inspiration’은 “세계적 수준의 사고, 세계적 수준의 감각, 세계적 수준의 창의력” 등으로 해석되었다. ‘세계 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도정방침으로는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가 제시됐다.<sup>16)</sup> 문화는 교육과 쉼여 다시 네 번째 도정 방침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선진 교육·문화’ 중에서 문화 영역의 주요 사업은 △문화경쟁력 제고 △정신문화유산의 계승 △전통으로서의 문화 △산업으로서의 문화 △생활로서의 문화 △건강한 삶과 여가문화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정신문화유산 강조는 효와 실학 관련 정책으로 구체화되었고, 생활로서의 문화는 모세혈관 문화운동, ‘문화의 집’ 확대, 문화예술 교육 확충 등으로 나타났다.

민선 3기는 임기 후 도정평가 문화부문에서 문화정책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당선과 취임 당시 내세운 문화공약은 아니지만, 민선 3기 문화정책의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기에 인용한다.

첫째, 문화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했다. 민선 3기 들어와서 실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학현양사업을 펼치고 실학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질과 실용을 앞세우는 실학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대정신이다. 또한 경기도는 효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효 문화를 새로운 세기의 정신문화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두 번째로 세계적인 문화경쟁력을 키워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

16) 경기도, 『대한민국 희망발전소 경기도 : 2002. 7. 1. ~ 2006. 6. 30. 민선 3기 경기도 4년-세계를 향하여 희망을 향하여』, 2006.

는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동시에 반만년에 이르는 민족문화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나갈 때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한류를 비롯한 새로운 문화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성과 서민정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화는 특수층의 별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고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민선 3기 경기도는 경기도미술관과 어린이박물관, 백남준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세혈관 문화운동을 통해 찾아가는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sup>17)</sup>

#### 민선 4·5기 김문수 도지사

김문수 도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 민선 도지사를 역임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임기인 민선 4기와,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인 민선 5기 도지사를 지냈다. 민선시대 들어 경기도지사직을 연임한 경우는 김문수 지사가 유일하다. 김 지사 이전 도지사 시기에 문화정책이 소략한 편이었으나, 김 지사 재임 중에는 문화담론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제시되었다.

김 지사 시절 경기도는 민선 4기 공약사항을 책자로 묶어 발행했다.<sup>18)</sup> 2006년 9월에 발행된 『민선 4기 김문수도지사 공약사항』에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엮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1. 앞서가는 경기도, 2. 편리한 경기도, 3. 잘 사는 경기도, 4. 매력 있는 경기도로 나뉜 4대 분야, 19개 과제, 75개 사업이 정리·제시되어 있다. 문화와 관련된 과제와 사업은 두 분야에 걸쳐 있다. 우선 1. 앞서가는 경기도 분야의 6번째 과제로 ‘문화·관광 산업 육성’이 들어 있고, 4. 매력 있는 경기도 분야의 세 번째 과제인 ‘문화와 예술이 있고 물 맑고 푸른 경기도’에도 문화가 등장한다.

17) 『민선 3기 도정평가』(경기도, 2006), 379쪽.

18) 『민선 4기 김문수도지사 공약사항』(경기도, 2006). 일반에 공개된 역대 민선 도지사의 공약집은 이 책이 유일하다.

먼저 ‘문화·관광 산업 육성’ 과제의 구체적 사업으로는 △테마형 관광자원 및 체험 관광상품 개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가 제시되었고, ‘문화와 예술이 있고 물 맑고 푸른 경기도’의 구체적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로 문화격차 해소 △도립공원 확충 △도·농 상생 숲 체험 쉽터 조성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가 제시됐다. 전자는 문화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엮은 것이고, 후자는 문화와 환경을 한 범주로 했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로 문화격차 해소만 문화정책으로 볼 수 있다.

김 지사 시기에는 문화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한 민선 3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문화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으나, 문화산업관련 입지 환경이 유리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문화산업이 열악하다는 점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다. 따라서 문화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권역별 특화를 통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은 문화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 문화·예술을 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문화격차 해소와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적극 찾고 널리 확대하겠다는 약속이다.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는 민선시대 들어 계속 강조된 부분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역점 공약 사업으로 선정한 경우는 김 지사 때가 처음이다.

민선 4기 문화·예술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경기도사 편찬 및 ‘경기도의 얼’ 찾기 운동 전개, △문화정책의 방향 정립 및 21세기형 문화 인프라 구축△도민에게 다가가는 박물관 미술관 운영 △문화예술 소외지역 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강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명품 육성으로 문화 경쟁력 강화 △전통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 및 북부지역 문화예술 진흥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sup>19)</sup> 김 지사 시기에 경기 북부 문화예술 진흥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 『2006년 경기도정백서』 70쪽.

민선 4기 임기를 절반 지난 2008년 시점에서 2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내용을 보면 민선 4기가 문화 영역을 어떤 기조로 운영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다.<sup>20)</sup> 민선 4기 2년의 성과로 무엇보다도 박물관·미술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및 서비스 개선을 꼽았다. 전국 최초로 공조적인 박물관·미술관들을 민간법인화했다는 점, 그리고 운영 방식을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위주로 전환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어서 세계적 수준의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창작예술 작품을 공연했다는 점을 두 번째 성과로 제시했다. 사례로 백남준아트센터 건립과 경기창작센터 조성의 가시화를 들었다. 세 번째 성과로는 문화유산의 가치증진과 보존관리 체계 개선으로서, 남한산성, 수원화성, 화성 만년제 복원·정비 추진과 문화재 방재시설을 확충해 재난예방 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들었다. 문화산업 영역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성장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대부분 전임 시절에 시작된 사업을 민선 4기에서 마무리한 것이다.

김 지사의 새로운 임기인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도정비전과 도정목표는 다소 수정되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엮는다’라는 도정비전 아래 섬김·화합·행복·성장·미래라는 다섯가지 키워드로 도정철학을 정리했다. 도정목표로는 △따뜻한 경기도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 △활기찬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가 제시되었다. 다섯 가지 도정목표가 곧 5대 도정분야로 연결되고, 5대 분야에서 25개 중점과제와 과제별 세부사업이 설정되었다.

문화예술정책은 다섯 가지 핵심으로 나뉘었는데 △통합적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행정의 선진화 △역사문화 콘텐츠의 자원화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창작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한 예술 진흥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예술자원 활용 △문화공동체 및 창조계급 통한 창조도시 구현이다.

통합적 문화정책이란 도시계획, 복지정책 등에 문화가치를 통합해 삶의

---

20) 『2007년 경기도정백서』 65쪽

질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고, 역사문화 콘텐츠의 자원화와 지역문화 정체성은 지역 대표인물과 역사지리적 요소를 문화콘텐츠로 발굴하여 경기도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창작 활성화 기반은 산업 시설물 및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작 공간을 조성하며, 문화공동체와 창조도시는 창조계급 유입과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해 균형 발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조를 요약하면,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기도의 브랜드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의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민선 5기 문화정책의 공약은 민선시대 역대 어느 도지사 시기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민선 4기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담론을 수용하여 경기도 실정에 비추어 다듬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적 문화정책, 역사문화 콘텐츠, 지역문화 정체성, 디지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예술자원, 문화공동체, 창조계급과 창조도시 등 민선 1~4 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거나, 사용되지 않던 개념들을 정리하여 경기도 문화를 업그레이드는 청사진을 밝힌 점도 눈에 띈다.

<표> 민선 5기 문화예술정책의 핵심

| 핵심                     | 내용   |
|------------------------|--|
| 통합적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행정의 선진화 | 도시계획, 복지정책 등에 문화가치를 통합해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구현       |
| 역사문화콘텐츠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 지역 대표인물과 역사지리적 요소를 문화콘텐츠로 발굴하여 경기도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 |
| 창작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한 예술 진흥 | 산업 시설물 및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작 공간을 조성                     |
| 디지털문화콘텐츠 육성 위한 예술자원 활용 | 예술자원을 발굴·정리하고 디지털화를 촉진 문화산업 기반 조성                |
| 문화공동체와 창조계급 통한 창조도시 구현 | 창조계급 유입과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해 균형 발전 지향         |

## 민선 6기 남경필 도지사

남경필 도지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민선 6기 경기도지사으로 재임했다. 남 지사의 도정 관련 자료는 다른 도지사에게 비해 소략하다. 전임 도지사들은 1년 단위로 도정을 정리한 『경기도정백서』를 발간했으나, 남 지사 취임을 전후한 시기부터 백서 발간이 중지되었다.<sup>21)</sup>

민선 6기 문화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민선 6기 1주년 성과와 비전 2018』이 있다.<sup>22)</sup> 책 앞머리에 제시된 민선 6기 도정의 비전은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이고, 핵심가치는 △데이터 △현장 △소통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설정되었다, 도정 슬로건은 ‘나누어서 커지고, 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넥스트 경기’로 제시됐다. 중점적인 정책 방향은 △권한을 나누어 싹을 틔우는 경기연정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경제, △따뜻한 복지공동체 안전한 경기도 △통일한국의 중심 경기북부이다. 문화예술은 중점 정책 방향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문화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한류월드, K-Culture Valley 추진 △G-Next 게임생태계 조성 △서울농생대 부지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 명소화 △G-MOOC 혁신적 학습공동체 조성 △K-디자인 빌리지 조성이 열거되어 있다.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지게 드러낼 수 있는 분야들이나, 민선 1~5기에서 빠지지 않던, 문화예술 진흥이나 문화향유, 문화복지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

민선 6기가 제시한 문화공약은 아니지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반기 계획 2014~2018>에 실린 비전 목표 추진전략은 민선 6기 문화정책의 골격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반기 계획 2014~2018>의 문화 비전은 ‘문화가 변화시키고, 문화로 꿈꾸고, 문화로 하나가 되는 경기’이고, 목표는 △문화의 미래, 미래의 문화 경기 △문화로 꿈꾸고, 꿈을

21) 백서 발간 중단 이유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22) 경기도, 『민선 6기 1주년 성과와 비전 2018』 (경기도, 2018). 책의 부제는 ‘싸우지 않고 소통하며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도민을 행복하게이다.’

실현하는 경기 △문화가 바꾸는 지역사회와 시민 △문화로 하나 되는 경기도.

각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과 융합 △문화민주주의 △안전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창작 공간 및 생태계 조성 △문화공간의 재난에 대한 안전망 및 대응체계 정비 △인문정신문화, 문화정체성의 제고 △남북문화교류 등이 제시되었다.

핵심 사업으로는 △광역 기초재단 간 역할분담 및 네트워크 △도내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기초문화재단의 확충 및 활성화 △문화재정 3% 확충 △경기천년 기념사업 △콘텐츠 클러스터 심화 및 확장 △6,000개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 지원 △커뮤니티 아트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찾아가는 문화복지봉사단 운영 △도심형 창작 공간, 교류형 레지던시 등 다양한 방식의 창작 공간 조성 △경기 예술인복지환경 조성 지원 △청년 문화허브 조성 △특성화된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 △문화예술 활용 지역재생 프로젝트 △권역별 대표문화시설 지정 네트워크 구축 △예술가와 직접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 △DMZ 평화·생태 예술창작 중심지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표> 2014~2018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목표와 전략<sup>23)</sup>

**문화비전 : 문화가 변화시키고, 문화로 꿈꾸고, 문화로 하나가 되는 경기**

| 전 략   | 핵심사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li> <li>*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과 융합</li> <li>*문화민주주의 확대</li> <li>*안정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창작 공간 및 생태계 조성</li> <li>*문화공간의 재난에 대한 안전망 및 대응체계 정비</li> <li>*인문정신문화, 문화정체성의 제고</li> <li>*남북문화교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 기초재단 간 역할분담 및 네트워크</li> <li>△도내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li> <li>△기초문화재단의 확충 및 활성화</li> <li>△문화재정 3% 확충</li> <li>△경기천년 기념사업</li> <li>△콘텐츠 클러스터 심화 및 확장</li> <li>△6,000개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 지원</li> <li>△커뮤니티 아트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li> <li>△찾아가는 문화복지봉사단 운영</li> <li>△도심형 창작 공간, 교류형 레지던시 등 다양한 방식의 창작 공간 조성</li> <li>△경기 예술인복지환경 조성 지원</li> <li>△청년 문화허브 조성</li> <li>△특성화된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li> <li>△문화예술 활용 지역재생 프로젝트</li> <li>△권역별 대표문화시설 지정 네트워크 구축</li> <li>△예술가와 직접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li> <li>△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li> <li>△DMZ 평화·생태 예술창작 중심지 조성</li> </ul> |

2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계획 2014~2018>에 제시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의 목표, 추진전략, 아젠다, 핵심 사업은 체계적이고 망라적이다. 이 표는 그 가운데 이 책의 논의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려 자의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 3장

# 민선시대 분야별 주요 문화정책

경기문화재단 20년

경기도 정체성 재정립

문화재 발굴·보존·활용

문화예술 기반 확충

문화예술 진흥과 향유

국제교류와 축제·행사

문화산업

# 1. 경기문화재단 20년

## 1) 창립과정

###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

민선 자치의 개막으로 경기도 행정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과 단절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문화행정과 문화정책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 아래 의욕적으로 재정비 새 출발한 부분이 두드러지는 게 사실이나, 관선 시기에 수립되었던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을 이어받은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다. 특히 문화기반시설 확충이나 예술단 설립, 문화재 발굴과 보전 사업 가운데는 관선 시대부터 준비 작업이 이뤄진 정책들이 상당수 있다. 민선 자치 도정은 그러한 문화행정을 이어받는 동시에 문화정책을 의욕적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그 첫머리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이 놓인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은 1996년 9월 이뤄졌다. 조례 제정 준비는 민선 1기 출범 직후인 1995년 10월 발족한 경기행정쇄신위원회<sup>(이하 행쇄위)</sup> 문화분과<sup>(위원장 김병모 한양대교수)</sup>에서 시작되었다. 행쇄위 문화분과는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소위원회<sup>(위원장 이광희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실장)</sup>를 두고 10월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행쇄위 문화분과는 김병모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8명, 도의회 의원 3명, 문화관광국장 등 도 공무원 4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문화분과의 조례 제정 연구소위는 이광희 위원장, 김병모 교수, 이찬혁 도의원, 서흥원 예총 경기도지회 사무국장, 전재완 LG전자 이사로 꾸려졌다.<sup>24)</sup>

24)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 『경기행정쇄신백서 I : 경기행쇄위 1년의 성과 1995. 9. 25 ~ 1996. 9. 24』, 1996.

연구소위는 우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례 제정 기본원칙을 정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도의 지방 문화예술 활동을 보호한다. 둘째, 도민이 문화예술 활동의 최상위 주체자임을 인식하여 도민의 창조성과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셋째, 문화예술 시책과 행사 추진 등에 있어 시군과 협력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원활히 한다.

연구소위는 이 같은 원칙 아래 관련법과 사례들을 검토하여 조례 초안을 작성한 다음 문화분과 심의에 넘겼다. 절차를 거친 조례안은 1995년 12월 행정쇄신위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행쇄위 안을 넘겨받은 경기도 문화정책과는 1996년 여러 단계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문화예술인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경기도의회에 회부했고, 도의회는 1996년 9월 조례를 통과시켰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경기도를 개성 있는 문화적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계획과 관련정책을 강구하는 법적 장치로서 의의가 깊다. 중앙정부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 창달 정책을 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시점에서 이 조례는 효과적인 도의 문화진흥정책을 위해 꼭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조례의 기본원칙은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①도지사는 도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②도지사는 도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민선 도지사에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의 책무를 부여하고, 걸맞은 노력을 강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문화예술 중·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토록 10개항의 종합 진흥계획을 설정하도록 했다<sup>(제3장 제12조)</sup>. 둘째, 매년 문예진흥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토록 했다<sup>(제14조 ②)</sup>. 셋째,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 집중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sup>(제15조)</sup>. 넷

째, 전문 예술단체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단체를 도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만들었다<sup>(제16-19조)</sup>.

이어서, 조례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을 설립을 규정했다<sup>(제5장)</sup>. 앞의 조례 내용들도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지만, 경기문화재단 설립은 어느 광역 자치단체도 구상하지 못한 대범한 시도였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 문화분과 위원장은 경기도 문화예술의 수준과 차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견인할 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문화재단육성기금 마련을 위해 2001년까지 매년 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출연하여 1,00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토록 하는 조항이 명시되었다<sup>(제19-24조)</sup>.

한편, 문화예술 조례 외에도 경기행쇄위 문화분과는 도내 시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문화의 거리 조성’ 정책을 채택하여, 장기적으로 1시군 1문화의 거리 조성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테마 박물관’ 건립을 채택하여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정책은 이후 기초자치단체들의 공간 문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경기문화재단 설립에 착수하다

경기문화재단은 민선 1기가 출범하고 만 2년이 지난 1997년 7월 창립되었다. 하지만 경기문화재단 설립 논의는 민선 1기 취임을 전후한 시기부터 활발했고, 1996년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한국의 지역문화재단 가운데 최초인 경기문화재단은 설립 이래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경기문화재단의 독립적 운영에 대해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지난 25년간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문화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고 경기도 문화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 책에

서 경기문화재단의 변화를 정리한 별도의 절을 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여기서는 민선시대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반 중의 기반 격인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배경, 설립 과정 및 뒷이야기를 먼저 정리한다.

[설립배경] 경기도에 문화예술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의 규모와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1980년대부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제도가 시행된 우리나라에서는 지원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특히, 문예진흥기금 집행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었다. 문화예술의 특성상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문화재단 설립이 요청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경기도 문화의 자생력을 선도할 전문기관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부활된 자치제도는 지방의 정체성 재확립을 요청했다. 한낱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하부 단위 가운데 하나라면 자치의 의미는 크게 퇴색된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성<sup>(경기도다음)</sup> 찾기’에 나서야 했다. 더구나 당시 문민정부의 키워드인 ‘세계화’ 흐름 속에서 지역의 문화적으로 균형 잡힌 지역성, 즉 글로컬리즘<sup>(Global + Localism)</sup>이 강조되었다. 지역의 특색을 바탕 삼아 상상력과 창의력을 보태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작업을 선도할 문화 기관이 요청되었다.<sup>25)</sup>

[설립 경과] 1995년 7월 1일 업무를 시작한 민선 1기는 그해 10월 초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민선 1기 도정방침은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으로 정리되었는데, 문화근본의 두 번째 항목인 ‘문화예술진흥기반 구축’이 15대 중점정

---

25) 박희주,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전초 경기문화재단”, <경기학 광장>, 2021년 봄호

책에 선정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이 50대 중점사업으로 제시되었다.

민선 1기 초기자료에는 경기문화재단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문화 예술 업무를 전담할 기구라는 의미에서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이라 명명할 듯하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 문화분과 연구소위원회가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논의를 시작할 때도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이라는 명칭으로 기관 설립을 검토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진흥’이라는 단어에는 인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기관의 명칭에 어울리지 않고, ‘문화’의 의미에 예술을 품고 있으므로 설립될 문화예술진흥기관의 명칭을 ‘경기문화재단’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sup>26)</sup> 명칭과 관련한 이 일화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문화재단 설립 제1목적이 문화예술의 진흥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경기도 문화정책과가 비영리 재단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찾기 위해 고심했던 대목도 주목된다. 도 관계자들이 문화예술진흥법과 민법의 관련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법률가들은 재단 설립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도에서 정부 관련 부처에도 질의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의견이 갈리면서, 자칫하면 추진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세울 수 있다고 회신해오면서 법적 근거 확보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변호사들과 정부 부처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렸던 이유는 민선시대가 출범한 직후여서 중앙집권적 행정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문화행정의 새 패러다임이 낫선 탓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우여곡절 끝에 행쇄위 안이 마련되자 경기도 문화정책과는 1995년 12월

---

26) 앞의 글, 76쪽 각주. 필자는 연구소위 이광희 위원장이 그렇게 회고했다고 전한다. “이광희 위원장은 후에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 임학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경기문화재단의 바람직한 형태와 기능 그리고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임 책임연구원은 제3섹터 비영리법인 형태에 이사장과 원장 체제 아래 이사회와 지원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두는 구조를 제시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와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문화정보 수집과 제공,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정책개발기능을 들었다.

발제 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임 책임연구원은 도청과 문화재단이 정보를 공유하며 도 업무의 위탁과 수탁, 경기도 문화정책 자문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구로 전락하여 지방 관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 경우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청회에서 강남대 조창연 교수는 국내와 일본의 선례를 근거로 경기문화재단의 적절한 기금 규모를 3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기금 조성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출연, 도민의 모금운동, 자치복권의 발행 타진, 지방 기업 메세나협의회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고, 중앙정부의 문예진흥재원 중 지방문예진흥기금 모금액은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경기문화재단의 기금규모는 300억 원, 주요역할은 △기금관리와 지방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운영 △문화관련 정보 수집과 홍보 마케팅 기능 수행 △문화예술단체 간의 네트워크 △경기문화의 세계화와 대중화 사업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기도 문화정책과는 1996년 5월 경기도 문화예술단체장 16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기금규모 300억 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문화재단의 역할에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역 특색 테마박물관 지원을 통한 문화와 관광 연계 사업을 추가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기금규모는 1996년 7월 1,000억 원으로 확대 결정됐다. 기금이 1,000억일

경우 이자수입 등으로 문화예술지원에 연간 77억 원 정도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기금 재원 조성은 도의 일반회계 총예산에서 1%씩 재단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1996년 말, 기금 조성 첫 해인 1997년도 분으로 250억 원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다.<sup>27)</sup> 1997년 들어 1월에 행정쇄신위원회 문화분과에서 경기문화재단 설립 계획과 정관을 심의한 후 2월 다시 한번 문화예술단체장 16명 초청 간담회를 거쳐 3월에 정관이 제정됐다.

정관에 따라 1997년 4월 1일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되어 재단법인 운용 규칙 제정과 직원 채용 준비를 마쳤다. 4월 말에는 경기도지사를 설립자로 하여 법인 설립 신고를 했고, 등기까지 완료했다. 5월 재단 기금 예치은행이었던 농협 장안문지점의 2·3층을 사무실로 정하고, 직원 16명을 공개채용했다. 1997년 7월 1일부터 경기문화재단 업무가 시작되었고, 7월 3일에는 창립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본격 설립 논의가 시작된 1995년 10월부터 1년 9개월여 만이다.

[설립 의의] 이인제 지사는 2016년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로서 가장 잘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일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꼭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경기문화재단’을 만든 것이다. ‘경제 제일, 환경·문화 근본’을 도정 목표로 내세웠고 문화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경기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전국 어디에도 없던 것이다. 문화재단 하나만 가지고도 ‘당신은 도지사로서 큰일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sup>28)</sup>

경기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의 효시다. 두 번째로 설립된 강원문화재단(1999년)보다 2년 앞섰고, 2004년에 세워진 서울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보다는 7년 이상 먼저다. 다른 지역문화재단들은 설립 준비단계에서 경기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하곤 했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내 기초문화재단 설립을 촉

27) 경기문화재단 기금은 1998년 300억 원, 1999년 50억 원, 2000년 100억 원, 2001년 337억 원을 경기도가 출연하여 총 1037억 원(건물구입비 169억 원 포함)이 조성되었다.

28) 정의종 황성규, “이인제 前 경기도지사에게 듣다”, <경인일보> 2016년 10월 6일.

진한 측면도 있다. 2021년 말 현재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22곳(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에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된 상태다.

지역문화재단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0년대 시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존재이유나 순기능·역기능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시점에서 경기문화재단은 참신한 발상이었고, 민선 1기 이인제 도지사의 리더십과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호응,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관계 전문가들의 식견이 합작해낸 성과물이었다고 평가된다.

## 2) 역할과 조직의 변천

### 목적사업 규정의 변화

[출범 당시] 1997년 출범 이래 경기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근본적으로 바뀐 적은 없으나, 민선 도지사가 교체될 때마다 당해 도지사의 문화공약 강조점과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 관련 조항을 다소 조정해왔다.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문화재단의 운영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 문화재단의 출범 이후 목적 규정 변화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단의 설립 당시 역할은 1996년 제정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명시되었다. 조례 제19조는 경기문화재단의 목적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이라고 규정했고, 제20조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정리했다.

①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②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③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의 지원 ④도지정 테마박물관의 지원 ⑤국제문화교

류센터 운영 ⑥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민선 2기] 민선 2기 들어 1998년 문화재단의 목적사업은 다음 10가지로 정리되었다.

①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②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③문화예술정책 개발, 교육 및 연수 ④문화예술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⑤문화관광 전략사업 개발 ⑥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⑦테마박물관 등 도 지정 사업 지원 ⑧재능 있는 예술인 발굴 및 육성 ⑨지방 향토사연구 ⑩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sup>29)</sup>

1996년 조례에 명시된 사업과 비교할 때 우선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이 첫째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점이 눈에 띈다. 문화재단 창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나 설립 초기에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이 가장 강조되었으나, 경기도 문화와 예술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도 정체성 재확립이 중요하고, 정체성 재확립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sup>30)</sup> ⑨항의 지방 향토사연구도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처럼 경기도의 정체성 재확립 차원에서 새롭게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년 전에는 언급이 없던 ‘문화관광 전략사업 개발’이 ⑤항에 적시된 점도 주목된다. 민선 1기 출범 직후 문화와 관광의 접목과 융합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담론이 커졌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sup>(2002년 설립)</sup>는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기문화재단에 이 영역이 맡겨진 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⑩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조례에는 ‘6.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라는 구절이 ‘기타’로 대체되었다. ‘문

29) 1998년 경기도정백서의 경기문화재단 편. 민선 1기인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는 해마다 도정백서를 발간했다.

이하 문화재단의 목적사업 규정은 당해 연도 백서에서 인용했다. 참고로 밝혀두자면, 2013년 이후에는 경기도정백서 발간이 중단되었다.

30) 이는 곧 문화유산을 포함한 광의의 문화 개념을 우선시할 것인가, 예술 중심의 문화 개념을 첫머리에 놓을 것인가를 놓고 문화재단 초기부터 고민이 존재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예술진흥을 위해’라는 조건절이 떨어져 나가면, 경기도가 훨씬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들을 문화·예술과 결부시켜 문화재단에 위탁사업으로 넘길 여지가 넓어진다. ⑦테마박물관 등 도 지정사업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광범위한 도의 위탁사무가 문화재단에게 맡겨지고 있고, 맡겨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선 3기] 민선 3기인 2002년 재단의 주요 목적사업 순위가 다시 바뀐다.

①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②지방 향토사 연구 ③테마박물관 등 도 지정사업 지원 ④재능 있는 예술인 발굴 및 육성 ⑤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⑥문화예술의 향유기회 증진 ⑦문화예술 정책 개발과 교육 및 연수 ⑧ 문화예술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⑨ 문화관광 전략사업 개발 ⑩ 문화관광 정보교류 및 도정홍보 ⑪ 국제문화 교류센터 운영 순이다.

민선 2기에서는 ⑨항에 있던 지방 향토사연구의 우선순위가 크게 높아졌다. 테마박물관 등 도 지정사업 지원도 민선 2기 때는 일곱 번째였으나 민선 3기 들어 세 번째로 상향 배치되었다. 문화예술 관련 목적 순위는 네 번째 가셔야 등장한다. ⑥문화예술의 향유기회 증진 항목은 앞선 규정에서는 보이지 않던 항목이다. 문화예술 향유권의 확대를 적극 지향하는 문화담론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문화재단의 열 번째 사업으로 제시된 ‘문화관광 정보교류 및 도정홍보’ 역시 새롭게 등장한 규정이다. 문화와 관광의 결합 전략 개발에 더해 정보교류까지 문화재단의 임무가 되었다. 특히 ‘도정홍보’가 문화재단의 사업이 되었다는 점은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문화재단 본연의 사명과 거리가 멀다.<sup>31)</sup>

31) 경기문화재단 자체 진단으로도 도정홍보는 무리한 사업이었고, 내부 진통이 뒤따랐던 사업이었다. “이 시기에 재단은 위의 두 가지 사업 설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경기도 관련 홍보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민의 수렴 및 도정 홍보 시스템 완성을 꾀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재단의 정체성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 설정일뿐더러 그 자체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방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경기문화재단백서; 1997-2002』, 경기문화재단, 2003, 38쪽.

민선 2기 때는 있었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민선 3기에 와서 삭제되었다. 이는 도의 위탁사무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보다는, 민선 1·2기를 거치면서 재단이 도 위탁사업들을 처리하는 관행이 굳어졌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선 4기] 2006년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경기문화재단의 주요 목적사업은 다시 정리되었다.

①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②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③문화예술 정책개발, 교육 및 연수 ④문화예술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⑤문화관광 전략사업 개발 ⑥문화관광 정보교류 및 도정홍보 ⑦테마박물관 등 도 지정사업 지원 ⑧재능 있는 예술인 발굴 및 육성 ⑨지방 향토사 연구 ⑩도지사의 위탁사무.

향토사 연구가 민선 2기 때처럼 아홉 번째로 조정되고,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이 두 번째 순위로 다시 상향되었다.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증진 규정은 삭제되었고, 도의 위탁사무가 아예 ‘도지사의 위탁사무’로 표현이 바뀌어 다시 등장했다. ‘문화관광 정보교류 및 도정홍보’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열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상향 배치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민선 4기의 문화재단 목적사업 규정은 민선 2기와 유사하다.

[민선 5기] 민선 5기 도지사는 연임에 성공한 김문수 도지사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목적사업 규정은 상당히 바뀌었다. 2010년 경기문화재단의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①문화예술의 창작 보급을 위한 지원과 환경 조성 ②역사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현대화 ③경기도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관리 ④문화예술 정책개발과 자문 ⑤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⑥국제문화예술 교류 ⑦문화상품 개발과 판매 ⑧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⑨기타 문

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민선 4기 때와 비교하면, 문화예술 조항이 1순위로 조정되었고, 세 번째 자리에 ‘경기도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관리’가 놓였다. 경기도가 설립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이 2008년부터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⑦문화상품 개발과 판매는 전에 없던 역할이자 기능이다.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의 보급과 향유, 문화예술인 복지 등의 차원에서 문화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임 시기까지 있었던 문화관광 조항이 사라진 것은 관광 관련 업무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sup>32)</sup> 도정홍보 조항도 아울러 삭제되었다. 한편, 위탁사무나 기타 사업 조항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을 위해’라는 조건절을 명시함으로써 막연한 사업 위탁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했다.

### 조직의 변천

[역대 이사장과 대표이사] 출범 당시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맡았다. 따라서 1997년 7월 1일 초대 임수복 이사장이 취임했고, 1998년 9월 22일에는 제2대 이사장에 권호장 부지사가 취임했다. 2001년 1월 21일 3대 백성운 행정부지사가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이 되었으나, 행정부지사가 맡던 이사장직을 경기도지사로 변경함에 따라 3월 27일 민선 2기 임창열 도지사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민선 5기까지 도지사가 이사장이 되었다. 2002년 7월 1일에는 5대 손학규, 2006년 7월 1일에는 제6대 김문수, 2010년 7월 1일에는 제7대 김문수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취임했다. 이 관행은 민선 6기에 달라졌다. 2014년 7월 16일 이사장을 도지사 대신 민간 이사장이 맡기로 함에 따라 제8대 홍기현 이사장이 취임했다.

출범 초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단을 대표하는 직책은 사무총장이었

32) 경기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개편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직의 변천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다. 1997년 7월 1일 초대 장석인 사무총장, 민선 2기인 1998년 9월 22일 2대 양인석 사무총장, 2000년 7월 13일 3대 홍기현 사무총장이 경기문화재단을 이끌었다. 민선 3기가 취임한 후 사무총장 체제는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 13일 제1대 송태호 대표이사가 임명되었다. 민선 4기에는 2006년 9월 1일 제2대 이금희 대표이사, 2007년 7월 2일 제3대 권영빈 대표이사가 취임했고, 민선 5기인 2012년 4월 6일 제4대 엄기영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민선 6기인 2014년 9월 16일에는 제5대 조창희 대표이사, 2016년 9월 12일 제6대 설원기 대표이사가 취임해 경기문화재단을 총괄 지휘했다.

<표> 역대 이사장

| 구 분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1대  | 임수복 | 1997년 7월 1일 ~ 1998년 9월 21일  | 행정부지사        |
| 2대  | 권호장 | 1998년 9월 22일 ~ 2001년 1월 20일 | 행정부지사        |
| 3대  | 백성운 | 2001년 1월 21일 ~ 2001년 3월 26일 | 행정부지사        |
| 4대  | 임창열 | 2001년 3월 27일 ~ 2002년 6월 30일 | 도지사 당연직으로 변경 |
| 5대  | 손학규 | 2002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 도지사          |
| 6대  | 김문수 | 2006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 도지사          |
| 7대  | 김문수 | 2010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 도지사          |
| 8대  | 홍기현 | 2014년 7월 16일 ~ 2018년 6월 30일 | 민간 이사장제로 변경  |

<표> 역대 사무총장·대표이사

| 구 분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
|-----|-----|-----------------------------|-------------|
| 초대  | 장석인 | 1997년 7월 1일 ~ 1998년 9월 21일  | 사무총장        |
| 2대  | 양인석 | 1998년 9월 22일 ~ 2000년 7월 12일 | 사무총장        |
| 3대  | 홍기현 | 2000년 7월 13일 ~ 2002년 9월 12일 | 사무총장        |
| 1대  | 송태호 | 2002년 9월 13일 ~ 2006년 8월 30일 |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 2대  | 이금희 | 2006년 9월 1일 ~ 2007년 7월 1일   | 대표이사        |

|    |     |                              |      |
|----|-----|------------------------------|------|
| 3대 | 권영빈 | 2007년 7월 2일 ~ 2012년 4월 5일    | 대표이사 |
| 4대 | 엄기영 | 2012년 4월 6일 ~ 2014년 9월 15일   | 대표이사 |
| 5대 | 조창희 | 2014년 9월 16일 ~ 2016년 9월 11일  | 대표이사 |
| 6대 | 설원기 | 2016년 9월 12일 ~ 2018년 12월 27일 | 대표이사 |

[기구 변화] 출범 당시 경기문화재단의 조직은 단순했다.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 재단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총무처와 문예진흥실을 관장하도록 했다<sup>(1처 1실 5부 체제)</sup>. 총무처에는 총무부, 문예진흥실에는 기획부·예술부·문화부 국제부를 두었다. 출범 당시 경기문화재단의 인원은 16명에 불과했다.

2000년 들어 기획조정실이 설치되어 기획부와 총무팀·문화홍보부를 관장하게 되었다. 문예진흥실은 문화부와 예술부 2부 체제가 되었다<sup>(2실(4부 1팀), 1원(1실 1팀))</sup>. 2002년과 2003년 일부 변화가 있었다. 문예진흥실 아래 문예진흥팀·문화사업팀을 두었고, 기전문화대학이 설치되어, 교육기획팀과 미디어팀을 두었다. 2003년 의정부에 북부사무소를 설치했다. 2002년은 2실(4팀), 1원(1실 1팀), 1대학<sup>(3팀)</sup>이었고, 2003년은 2실<sup>(4팀)</sup>, 1원<sup>(1실 1팀)</sup>, 1대학(2팀) 구조였다. 인원은 2003년 기준 35명이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통합 운영] 2008년 3월 1일자로 경기문화재단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조선관요박물관이 경기도 직할에서 경기문화재단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건립 중인 실학박물관·전곡선사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경기문화재단 소속으로 편제되었다. 변화된 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의 별도 직속 기구로 문화비전기획실을 두었고, 사무처와 기전문화재연구원<sup>33)</sup>,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조선관요박물관

33) 경기문화재연구원은 2008년 경기문화재단 부설기관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부설기관은 독립회계이나 직속기관은 통합회계다.

<sup>34)</sup>을 나란히 두었다. 사무처는 경영지원실과 문화협력실로 나뉘는데, 경영지원실은 총무팀·재무회계팀·기획심사팀, 문화협력실은 문화정책팀·문예지원팀·홍보출판팀으로 구성되었다.

기전문화재단연구원<sup>(2008년 8월 경기문화재단연구원으로 명칭 변경)</sup>은 조사연구실·전통문화실이 있고, 경기도박물관 이하 소속기관은 각각 학예연구실과 행정지원팀을 두었다. 재단의 전체 기구는 1처<sup>(2실)</sup>, 1원<sup>(2실)</sup>, 4관<sup>(4실 4팀)</sup>이고 전체 정원은 150명이었는데, 경기문화재단의 실제 인력은 2009년 100명, 2010년 119명이었다.

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하면서 경기도가 내세운 명분은 경기문화재단을 경기 문화예술의 명실상부한 허브이자 대표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는 것이었다.<sup>35)</sup> 박물관과 미술관이라는 문화예술 대표 공간을 국내 최초로 통합함으로써 탄력적인 사업운영으로 도민들의 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할 수 있고, 경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을 견인하는 복합문화센터이자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아시아 문화교류의 관문 역할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통합민영기관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법인화하고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일은 관 주도 문화 환경이 민간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법인화 이전 박물관과 미술관은 공무원 조직에 의해 운영이 이뤄졌다. 이를 민영화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한 면이 컸으나, 민간 조직인 경기문화재단에 통합시키는 데 따르는 난점도 컸다. 더구나 경기문화재단이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을 통합하게 되면 문화예술 지원 중심이던 그동안의 성격에서 벗어나 다른 기능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과제도 떠안게 되는 셈이었다. 자칫하면 경기문화재단이 본디 역할보다

34) 조선관요박물관은 2008년 8월 경기도자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경기도자박물관은 2011년 6월 경기문화재단에서 분리되어 한국도자재단으로 이관되었다.

35) <2008년 경기문화재단 연감> 76쪽

‘문화예술 시설관리공단’ 성격이 짙어질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경기도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독자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기관이 경기문화재단 소속인 이상 네트워크를 통한 유연한 대응보다는 의사결정 등에서 재단의 승인 내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무원 조직이었던 박물관과 미술관 조직과 민간 조직이었던 경기문화재단 조직이 조화를 이루는 일이었는데, 경기문화재단 내부에서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통합을 이루는 데 10년은 걸렸다고 보고 있다. 물론 각각의 특성이 다른 박물관과 미술관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도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변화를 꾀해야 하고, 경기문화재단 역시 이를 이끌어야 할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3월 1일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이 출범하였고 2009년 7월 15일 경기창조학교가 개교하였다. 2009년 10월 23일에는 실학박물관이 개관하였고, 2009년 10월 29일에는 경기창작센터를 개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사무처를 포함해 8개 기관 체제로 편제되었다. 2010년 기구표를 보면, 대표이사 아래 사무처는 경영지원실<sup>(기획팀·총무팀·재무회계팀)</sup>과 문화협력실<sup>(문화정책팀·문예지원팀·문화홍보팀)</sup>, 사무처와 동급으로 경기문화재연구원·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경기도자박물관·실학박물관·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sup>36)</sup>이 배치되었고, 경기창작센터는 경기도미술관 산하 기관으로 편제됐다. 조직도를 요약하면 1처<sup>(2실)</sup> 1원<sup>(2실)</sup> 5관<sup>(5실 7팀)</sup> 1단<sup>(2팀)</sup>에 현원 188명<sup>(정원 250명)</sup>이다.

2017년 조직은 대표이사 아래 경영본부<sup>(기획조정팀, 인사팀, 경영지원팀, 미디어 마케팅팀)</sup>, 문화예술본부<sup>(문예진흥팀, 지역문화팀, 문화사업팀, 북부문화사업단, 경기창작센터, 경기학연구센터)</sup>, 경기문화재연구원<sup>(기획운영팀, 조사연구팀)</sup>,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국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있다. 경기도박물관 이하 기관

36) 2015년 1월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6년 11월 경기문화재단에서 분리되어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이관되었다.

은 기획운영팀과 학예팀이 있다. 요약하면 1검사업, 1정책실, 2본부<sup>(7팀 1단 2센터)</sup>, 7소속기관<sup>(14팀)</sup>이고, 근무인원은 180명이다.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은 경기지역 최초로 설립된 문화유적 발굴조사 전담기관이다. 1999년 설립 당시 명칭은 기전매장문화재단연구원이었다. 현재의 명칭은 2008년 개칭한 것이다.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은 경기도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문화유산의 파괴를 막기 위한 발굴조사, 양주 회암사지·여주 고달사지·남한산성·북한산성 등 국가 중요 사적과 도지정문화재인 화성만년제, 광주 삼리, 양주 관아지 등의 정비·복원을 위한 학술발굴조사 발굴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리사업도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의 주요 업무다.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은 경기학 조사·연구를 통해 경기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 콘텐츠의 개발·활용에도 기여해왔다.

기전매장문화재단연구원은 1998년 12월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1999년 4월 1일 경기문화재단 부설 연구원으로 개원했다. 경기문화재단이 부설 연구원을 개원한 것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개발 시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경기도의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기전매장문화재단연구원은 연구실 아래 발굴팀과 유물정리팀을 갖추었으며, 행정적으로 업무를 뒷받침할 행정지원팀을 별도로 두었다. 기전매장문화재단연구원은 개원하자마자 지표조사 20건을 수주<sup>(수주액 10억 원)</sup>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3월 기관 명칭에서 ‘매장’을 삭제하고 기전문화재단연구원으로 변경했다. ‘매장’을 삭제한 이유는 업무영역을 전통문화 포함 문화유산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2003년에는 보존과학팀을 신설했다. 2004년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사옥에서 경기문화재단 인계동 사옥<sup>(수원시 팔달구 인계동)</sup>으로 이전했다. 2005년에는 경기학의 산실 격인 전통문화실을 개설했는데, 전통문화실은 2009년 경기학연구실로 개편되었다.

2008년 기관 명칭이 경기문화재연구원으로 바뀌었다. 2011년 북한산성문화사업팀을 신설했다. 2015년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단을 발대하고, 사업단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2015년 3월 조직개편으로 경기문화재연구원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유산본부 경기문화재연구원으로 편제되었고, 경기학연구팀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유산본부 경기학연구센터가 되었다. 2017년 경기문화재연구원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사업은 학술조사와 문화재관련 사업으로 대별되며, 학술조사는 다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성격이 구분된다. 지표조사는 문화재 조사의 초기 작업으로서 사업면적 3만㎡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의 사전작업으로 시행된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설립 이후 매년 30~60여건 이상의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기록으로 보존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 경기도내 문화재의 발굴 보존과 연구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유적조사는 모두 630건이다. 조사종류별로는, 지표조사 28%, 시굴조사 24%, 발굴조사 25%, 보존처리 16%, 종합정비 2%, 입회/표본 5%다. 연도별로는 1999년 30건, 2000년과 2001년 각각 43건, 2002년 56건, 2003년 54건, 2004년 70건이다. 2004년이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유적조사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다. 2004년 수주액은 193억5,000만 원에 이른다. 이후 2010년까지 조사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5년 44건, 2006년 26건, 2007년 19건, 2008년 9건, 2009년 15건, 2010년 21건이다. 이후 2011년 47건, 2012년 27건, 2013년 41건, 2014년 45건, 2015년 41건, 2016년 50건이다.

[기전문화대학] 기전문화대학은 경기문화재단 부설로 2002년 설립되어 이듬해 첫 개강식을 가졌다. ‘경기도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가 육성 및 지역 문화 활성화’가 설립 목적이었는데,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문화예술 교육

기관이다. 기전문화대학은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부서 신설계획 등 국가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주요 문화예술 정책 사안으로 부각하는 시점에서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기본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기전문화대학은 일반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양과정<sup>(다님길)</sup>과 전문예술단체 및 문화시설 운영자를 위한 문화예술 전문과정<sup>(난달)</sup> 등 다양한 문화교육 사업을 전개하였다. 다님길은 갈림길, 오솔길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며, 난달은 길이 여러 갈래로 통한 곳을 의미한다. 다양한 문화 오솔길들이 고유한 길을 걷다가 큰 마당에서 만나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작명이다.

‘다님길’ 과정은 △전통예술,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인문강좌로 천연염색, 경기도의 샴머니즘 △예술영역을 매개로 한 통합문예교육 강좌로 공연과 연극놀이, 그림자극 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험학교인 ‘어린이문화창조학교 도움아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해 성과를 거두었다.

다님길 과정에서는 외국의 독특하거나 선진적인 문화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노숙자, 재소자, 알콜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한 실천가 얼 쇼리스를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고, 시민 연극전문가 필립 테일러를 초청해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얼 쇼리스와 필립 테일러 초청은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영향을 미쳤다. 또한 다님길 과정에서는 ‘생활이 곧 문화’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코스프레 문화와 힙합 동아리를 지원하기도 했다.

‘난달’ 과정은 수원 문화기획인학교, 의정부 문화기획인학교를 개설하여 예술경영, 문화행정, 문화기획, 문화기반시설 전문가 과정 등 문화 분야 전문인력 재교육과 워크숍, 네트워크 형성을 지향했고, 지역문화기반 시설을 위한 교육 및 강사양성, 특수 분야 교원직무연수 등 전문교육프로그램과 전국 문화

기반시설별 실무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기전문화대학의 연구 개발 사업으로는 외부 전문 문화예술 교육단체에 의뢰하여 5개의 문화예술교육 연구과제를 개발했고, 경기도의 문화역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기도 문화지표 개발 및 표본지역 조사’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청소년 문화활동 분야 실무자 재교육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여 지역별 특성화 교육 수행을 위한 토대를 모색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방법론과 교육적 가능성을 연구 제안하여 경기도 문화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선진 평생학습 교육시스템과 교수법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2006년까지 총 10부작 영상교재를 제작했다. <이것이 미래교육이다>라는 주제로 일본 키노쿠니 학교, 자유학원, 태국 무반텍, 미국 알바니 프리스쿨, 매트 스쿨 등의 교육사례를 담은 영상다큐멘터리가 제작 완료했다. 이 다큐멘터리들은 ‘Q채널’ 등 주요 케이블방송 및 MBC 등 공중과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고, 방송위원회가 선정하는 2004년 11월 좋은 프로그램으로 뽑히기도 했다.

기전문화대학은 부설 기관에서 2007년 문화교육팀으로 개편되어 기구표에서 사라졌다. 2008년에는 신설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시 기전문화대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자박물관은 광주조선관요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 설립되었다. 광주조선관요박물관은 그 해 개최된 <세계 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와 <제1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의 3곳 벨트(여주·이천·광주) 가운데 한 축을 담당했다. 당시 엑스포와 비엔날레 업무를 총괄한 기관은 재단법인인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조직위원회’였다.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조직위원회’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 2002년 상설조직인 (재)세계도자기엑스포가 되었고, 광주조선관요박물관은 (재)세계도자기엑스포가 관할했다.

광주조선관요박물관은 2003년 문화관광부에 도자전문 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었고, 2004년 국제박물관협회(ICOM) 등록 박물관이 되었다. 광주조선관요박물관은 2008년 (재)세계도자기엑스포 소속에서 경기문화재단 소속으로 관리 기관이 변경되었다.<sup>37)</sup> 그러나 2011년 경기문화재단에서 한국도자재단(구 세계도자기엑스포)으로 관리 주체가 재변경되었다.

## 사옥 변화

경기문화재단은 창립 이래 사옥을 두 번 옮겼다. 창립 당시 사옥은 경기문화재단 기금 예치은행이었던 농협 장안문지점의 2·3층(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2의 6)이었다. 하지만 경기문화재단의 업무가 늘어나고 직원이 증가한 데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의 책임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자체 건물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경기문화재단은 기금 1,000억 원 조성 완료를 눈앞에 둔 2001년 6월 29일 사옥을 장안동에서 팔달구 인계동 1116-1 구 축협 경기본부 건물을 매입해 이전했다. 구 축협 경기본부 건물은 외환위기 이후 농협과 축협이 통합되는 시점이어서 매물로 나온 상태였다.

당시 인계동은 수원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지역이었다. 경기문화재단 인계동 사옥에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경기도여성회관, 수원야외음악당까지 걸어서 10분 안팎 거리였다. 경기문화재단은 인계동 사옥 이전에 대해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고 입주함에 따라 인계동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주변의 문화예술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보교류와 사업지원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7) (재)세계도자기엑스포는 2008년 법인 명칭을 ‘도자진흥재단’으로 변경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09년 다시 한 번 한국도자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인계동 사옥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였다. 전체 건물을 경기문화재단이 쓴 것은 아니고, 임대 수입을 통한 건물 유지 관리 목적으로 농협과 증권사 영업점을 비롯해 절반 정도의 공간을 여러 회사에 임대했다. 3층은 공연장 겸 강당을 조성했고, 6층은 디지털실을 두어 도서 열람, 음악 감상, 인터넷 이용이 가능토록 했고, 작업 공간으로도 일부 꾸몄다. 그밖에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전시실, 세미나실, 영상자료실도 갖춰 소규모 공연, 미술전시회, 동호회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계동 이전으로 구 복수동 사옥은 2014년 12월까지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의 유물관리와 연구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은 2019년 9월 사옥을 인계동에서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경기상상캠퍼스로 옮겼다. 경기상상캠퍼스 내 ‘청년 1981’ 건물에 대표이사실과 정책실, ‘생활 1980’ 건물에 경영본부, ‘교육 1964’에 문화예술본부, ‘생생 1990’에 청렴경영실과 경기학연구센터가 각각 입주했다. 인계동 사옥은 경기문화재단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 일부 부서가 사용하는 한편 일괄 공모를 통해 임대 운영에 들어갔다. 서둔동 상상캠퍼스로 사옥을 이전하는 데 대해 경기문화재단은 “빌딩 속에 틀어박힌 사무실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산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나고 더욱 생생한 문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sup>38)</sup>

### 3) 예산과 주요 사업

경기문화재단은 설립 이래 문화예술 진흥과 교육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

38) 하지만 경기문화재단의 자체 결정이라기보다 경기도의 이전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경기문화재단이 서둔동으로 이전한 지 3개월 만인 2019년 12월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을 경기북부인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기관광공사 등 남부(수원) 공공기관 3곳 북부(고양)로 이전”, <연합뉴스>, 2019년 12월 4일.

고,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재 발굴 및 활용, 경기도의 문화예술 국제교류와 대규모 축제·행사 가운데도 경기문화재단이 맡았던 역할은 지대하다. 여기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규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꼽은 주요사업의 성과만을 일별하고자 한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3장 2~7절로 넘긴다. 사업의 정리는 1997~2002년, 2003년, 2004~2017년으로 나누었다. 민선 기수별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간명하겠으나, 경기문화재단의 자체 평가를 정리의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sup>39)</sup>

### 예산 규모의 변화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 설립기금으로 1,000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였고, 1998년 300억 원, 1999년 50억 원, 2000년 100억 원, 2001년 337억 원을 출연하여 총 1,037억 원(건물구입비 169억 원 포함)을 조성했다. 기금조성은 2001년 11월 2일 완료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은 기금 이자, 문예진흥기금, 민간기부금, 위탁사업비, 기타 수입 등으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하반기부터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 지원을 비롯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1997년 지원 사업의 재원은 경기도에서 이관된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이였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84년 처음 조성되었다. 당시 한국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2억2,500만 원을 받고 경기도 예산 1억 원과 시군예산 1억2,300만 원을 더해 4억4,900만 원의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되었다.

기금의 규모는 1996년 말 98억8,100만 원이 되었고, 지원금을 포함해 지출 후 잔액은 79억4,230만 원이었다. 기금 규모 면에서 경기도는 서울<sup>(161억 원)</sup> 다음이었다. 도 문예진흥기금은 운용액<sup>(예치이자 발생액)</sup>의 60%를 각종 문화예술

39) 경기문화재단 1997~2002년 사업의 경우 『경기문화재단 백서 1997▶2002』의 제2편을, 2003년 사업은 『2003 경기도정백서』의 경기문화재단 편을, 2004~2017년 사업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주요성과를 주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사업과 활동에 지원하고 40%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경기도 문화예술킨흥 기금은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경기문화재단 기금으로 흡수·운용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하반기에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 329건에 대해 11억8,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전년도인 1996년 1년 동안 경기도가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한 299건 5억400만 원에 비해 137% 늘어난 액수다. 경기문화재단의 지원 분야는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연극·무용·대중예술·전통예술·청소년문예·지역종합문예에서 1998년부터 향토문화 연구부문<sup>(향토사 연구, 문화유산 연구 및 전승)</sup>으로 확대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은 1998년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 584건 17억8,930만 원을 지원했고, 1999년에는 공모지원 사업으로 465건을 선정해 15억 원, 2000년에는 공모지원 568건 15억 원, 2001년에는 총 510건에 15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 공모지원 사업은 해마다 집행되고 있고, 여전히 경기문화재단의 핵심적인 업무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문화예술 지원 또한 다차원적으로 변함에 따라 전체 사업에서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 지원의 비중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예산 규모추세만 연도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문화재단의 1997년 사업예산은 21억 원 규모였다. 민선 1기와 민선 2기 교체기인 1998년은 37억 원이었고, 민선 2기 동안은 대체로 100억~200억 정도였다. 1999년 105억 원, 2000년 94억 원이었고, 2001년에는 279억 원까지 늘어났다. 2002년 145억 원이 되었다. 민선 3기인 2003~2006년은 대략 200억~300억 원 사이였는데, 2003년 175억 원, 2004년 262억 원, 2005년 282억 원, 2006년 32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민선 4·5기 들어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예산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7년 352억 원에서 2008년에는 592억 원으로 250억 원이나 늘었고, 2009년 921

억 원, 2010년 974억 원이 되었다. 이는 독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경기문화재단 소속으로 조직이 바뀐 영향이다. 이후 2011년 661억 원, 2012년 560억 원, 2013년 541억 원, 2014년 545억 원으로, 민선 3기와 4기 초반보다는 200억 원 이상 늘었으나, 550억 원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민선 6기 전반기인 2015년 764억 원, 2016년 942억 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문화재단 설립 이래 사업예산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위탁사업 건수와 규모, 조직 편제의 변화, 도지사들의 역점 분야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

### 1997~2002년 주요 사업

경기문화재단이 1997~2002년에 추진한 중요 사업의 갈래는 1. 전통문화의 발굴·계승, 2. 문화예술진흥, 3. 국제교류·남북교류, 4. 문화관광 및 문화산업, 5. 문화예술 정보화, 6. 도 수탁사업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진흥은 경기문화재단의 애초 설립 목적이었다.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이 초기 5년간 추진한 사업의 열개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 촉진, 문화예술 향수 기회 증진,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연구로 다시 나뉜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작 촉진 사업으로 문예진흥을 위한 일반 공모 지원, 특별공모 지원, 예술단체 예술행사 지원 등 지원사업과 경기공공미술(public art)제, 디지털 예술제 등 실험예술 후원, 소극장 활성화, 연도별 기념사업<sup>40)</sup> 등 기획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 국내·국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예술진흥 매개촉진사업도 추진했다.

40) 1997년은 문화관광부가 정한 문화유산의 해, 1998년은 사진 영상의 해, 1999년은 건축 문화의 해, 2000년은 새로운 예술의 해,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였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를 기념하는 일련의 사업을 펼쳤다.

문화예술 향수 기회 증진사업으로는 생활문화활동 후원, 문예 소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연 전시 지원 사업을 벌였다.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위해서는 간담회, 워크숍, 학술회의 개최, 조사 및 평가와 연구 사업을 진행했다.

[생활한복 보급 운동]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및 생활화 사업의 일환이었다. 1999년 생활한복 패션쇼, 생활한복 교복 보급 운동 등을 진행했다. 수원 태장고등학교의 경우 2000년 전교생이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된 한복 패션쇼를 관람한 후 투표를 통해 개량 한복 교복을 선택했다. 독특한 태장고등학교 교복은 2013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아름다운 교복 톱10에 오르기도 했다. ‘한복 입기 생활화 운동’은 문화의 생활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기문화재단의 자체 사업이라기보다 민선 1기 문화정책의 집행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국제교류] 국제교류의 기초를 경기도 문화예술과 세계 보편의 시민적 가치 간의 대화 촉진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몽골 무(巫)의식 합동공연<sup>(1997)</sup>, 경기문화예술단의 해외 파견<sup>(1999)</sup>, 세계적 문화예술단의 도내 초청<sup>(1999)</sup>, 중국 광둥성 광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sup>(2000)</sup>, 중국 요령성 민족예술단 초청공연<sup>(2000)</sup>, 중국 요령성 인형극단 경기도 공연<sup>(2002)</sup>, 해외 한민족과의 문화 학술 교류<sup>(1999)</sup>, 러시아판 한국어 교재 발간<sup>(2000)</sup>, 한·일 문화의 만남<sup>(2000)</sup> 등을 진행했다.

경기문화재단은 국제문화교류 전략 수립 및 지원 시스템 연구도 진행했다. 1998년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현황과 정보 파악과 효율적인 국제교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에는 경기도와 타이페이 간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무형문화재 예술활동 활성화] 경기문화재단은 경기관광공사 설립 이전에는 문

화관광 정책개발의 역할도 진행했다. 무형문화재 예술활동 지원은 고유의 예술성을 공인받은 무형문화재의 공연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의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무형문화재의 합동 전시·공연을 지원했다.

[기전문화예술 총서 발간]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위해 경기도에 고유한 전통문화·문화재·문화관광·문화산업 등의 분야와 장르별 경기 문화예술의 발자취를 시리즈로 발간했다. 『경기도의 굿』<sup>(1권)</sup>, 『경기도의 무가』<sup>(2권)</sup>, 『경기 문화지도 ①』<sup>(3권)</sup>, 『경기 문화 지도 ②』<sup>(4권)</sup>, 『사라지는 시간 - 경기도의 5일장』<sup>(5권)</sup>, 『경기만의 갯벌』<sup>(6권)</sup>, 『경기 실학』<sup>(7권)</sup>, 『경기도의 품물굿』<sup>(8권)</sup>, 『일제하 경기도 지역 종교계의 민족 문화운동』<sup>(9권)</sup>, 『수정 국역 화성성역의궤』<sup>(10권)</sup>, 『다시 쓰는 경기도자사』<sup>(11권)</sup>, 『경기 옛소리 기행』<sup>(12권)</sup>

한편, 기전문화예술 총서와 함께 『경기도 건축문화유산총람』 발간이 1999년부터 추진되어 2003년에 전 6권으로 출간됐다.

[<기전문화예술>] 문화예술정보 제공과 재단의 사업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1998년 6월 계간으로 <경기문화예술> 창간호를 발행했다. <경기문화예술>은 1999년 <기전문화예술>로 제호를 바꾸었다. 2000년 말까지 계간으로 발행되던 <기전문화예술>은 2001년 발행주기를 격월간으로 변경하였다. <기전문화예술>은 경기문화예술을 포괄적·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교양지로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 성격을 유지하되 고급화를 지향했다.<sup>41)</sup>

[무형문화재 비디오 제작] 1999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도지정 무형문화재 비디오 8종을 제작했다. 안성남사당놀이, 승무·살풀이춤, 생칠장, 벼루장, 부

41) <기전문화예술>은 2007년 겨울호(통권 50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의주, 조선장, 지장, 상여·회다지소리 등이다. 2000년에도 고양 송포호미걸이, 경기소리, 입사장, 구리 갈매동 도당굿, 단청장, 김포 통진두레놀이 등 5종을 제작했다.

### 2003년 주요사업<sup>42)</sup>

[백서 발간] 경기문화재단 창립 5주년을 맞아 1997~2002년의 자취를 성찰하고 재단의 미래 비전과 사명을 재정립할 목적으로 백서를 발간했다. 2003년 5월에 발간된 『경기문화재단백서』는 재단의 5년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 전망을 담은 종합보고서다. 백서의 중심주제는 건강한 문화생태계 육성과 문화민주주의 구현이다. 백서의 연장선상에서 2005년 경기문화재단 중·단기 발전 계획을 담은 『전망 2010』이 나올 수 있었다.

[책테마파크 조성] 경기문화재단은 성남시의 위탁을 받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성남시 분당구 율동 412<sup>(문경로 145)</sup> 율동공원 안에 국내 최초로 책을 테마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였다. 실내와 실외 공간을 조화시켜 책을 주제로 사색하고 책과 예술이 결합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북카페<sup>(실내)</sup>와 야외공연장, 조형공간, 산책로를 갖추었다.

경기문화재단은 2003년 12월 책테마파크 조성공사에 들어가 2005년 11월 말 준공식을 가졌다. 책테마파크의 정식 개장은 2006년 4월 22일이다. 전체 대지는 5,950㎡, 건축면적은 495㎡다. 각국 문자가 어우러진 조형물 진입로 ‘바람의 책’, 책의 역사를 그린 미로 형상의 벽화 산책로 ‘시간의 책’ 등 7가지 테마로 꾸며졌다. 설계는 임옥상이 맡았고, 김정환·승효상·김인수가 조형 건축 조경에 참여했다. 총사업비는 48억 원이다.

42) 책테마파크 조성과 천상병예술제 및 더불어사는사회문화제는 2003년에만 진행된 사업은 아니다. 서술의 편의상 2003년 주요 사업으로 분류했다.

책테마파크는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이외 지자체의 위탁으로 진행한 첫 사업이다. 개관 이후 운영은 성남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

[북부문화사업단] 경기문화재단은 경기 남·북부 간 문화예술 진흥의 규명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 3기인 2003년 2월 북부사무소를 설치했다. 북부사무소는 조직 변화에 따라 2017년 현재 문화예술본부 산하 북부문화사업단이 되었다.<sup>43)</sup> 북부사업소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통일 관련 지역축제 개발 사업으로 2003년 ‘경원선 평화예술축제’에 이어 2004년에는 ‘임진강 시각예술축제’를 개최했다. 또한 북부지역의 대표적 문화인물인 고 천상병 시인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천상병예술제’와 연합축제의 성격을 띤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를 열었다. 여기서는 북부사업소가 시작한 두 가지 주요한 축제에 대해서 정리한다. 북부사업소는 이 두 축제 외에 경기 북부 문화예술 공모지원 사업과 청년 예술가·문화기획자 양성 등의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제1회 천상병예술제 : 시인 천상병<sup>(1930-1993)</sup>은 의정부 태생은 아니지만 의정부와 깊은 인연이 있다. 북부사무소는 문단의 마지막 순수시인으로 일컬어졌던 천상병 시인의 생애와 문학을 기리는 축제를 기획했다. 천상병예술제는 단순한 문학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예술 장르의 만남과 창작을 시도한 문화축제의 성격을 처음부터 띠었다.

제1회 천상병예술제는 2004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 등에서 열렸다. 소설가 이외수와 시인 박종수가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주요 행사는 ‘천상 시화전’, ‘시인과의 만남 강연회 및 시낭송회’, ‘창작 무용극 귀천 공연’<sup>(의정부시무용단)</sup>, ‘천상음악회’, ‘천상백일장’ 등이었다.

천상병예술제는 2021년 현재 해마다 천상병 시인의 기일 즈음에 열리고 있

43) 북부문화사업단은 민선 7기인 2021년 현재 경기북부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문화 활성화, 성장동력의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창업지원과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등 경기북부의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의정부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꼽힌다. 현재는 경기문화재단 주관이지만, 매해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새로운 예술창작 시도로 관심을 모으는 예술축제가 되었다.

제1회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 : ‘소수자를 위한 축제, 소수자에 의한 축제’를 표방한 제1회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도 북부사업소 주최로 2004년 10월 3~5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막을 올렸다.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인, 혼혈인, 성적 소수자, 성매매여성, 노숙자 등 불평등과 차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회적 소수자의 네트워크 축제로 기획되었다. 소수자 그룹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집담회<sup>(플로키움)</sup>, 다문화음식축제, 소수자예술활동발표회 ‘공감’, 마당극,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는 2006년엔 서울로 확대되었고, 2007년에는 경기도 남부인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도 동시에 열려 경기도 전 지역을 아우르는 축제로 성장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 2004~2017년 주요 사업

[2004년 문화예술 정책 방향 전환] 2004년은 한국 문화예술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였다. 2004년부터 한국문예진흥원 대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체제가 시작되었고, 그 해 말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대폭 손질하여 정립했다.

우선, 정기 공모 지원의 원칙을 기계적인 장르 중심에서 탈피하여 경기문화재단의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장르별로 다건 소액 지원하던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간접 지원을

확대하여 예술 창작 기반을 실질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인 창작촌 프로젝트’, ‘경기 지역 미술 흐름전’, ‘경기 문학 활성화 사업’ 등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셋째, 단순한 감상자 수준에 머무르던 문화예술 수용자들을 생산적 참여자, 즉 문화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문화생비자<sup>(Prosumer)</sup>로 전화하려는 시도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한 사업 모델을 다각도로 개발했는데,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사업’, ‘이주 노동자 한국 체험 문화 행사’ 지원, 사회적 소수자가 어울려 만드는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 넷째, 지역에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은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도내 소극장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테마 박물관의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서관’ 등 문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원의 축을 이동하고자 했다.

[기전문화예술총서] 2004년에 『경기도의 성곽』<sup>(13권)</sup>, 『기백열전』<sup>(14권)</sup>이 발간됐다. 『기백열전』은 조선시대 경기도 관찰사의 일대기와 행적을 정리한 책이다. 2005년에는 15권 『옛 그림속의 경기도』를 펴냈다.

[경기문화포럼] 문화와 정책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 그 담론을 기초로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경기문화포럼을 시작했다. 제1차 경기문화포럼은 5월 11일 김문환 교수<sup>(서울대 미학과)</sup>를 강사로 초빙하여 ‘컨버전스<sup>(convergence)</sup> 시대에 문화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기문화포럼은 경기도 문화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경기도 문화정책포럼으로 이어졌다.

[굿음악제] 경기문화재단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2007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과 경기도에서 펼쳐졌다. 15일 오후 2시부터 16일 새벽 5시까지 의

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무박2일로 ‘소리굿 난장’이 진행됐다. ‘소리굿 난장’에서는 경기도당굿, 강릉단오굿, 전라도씻김굿, 황해도굿의 굿음악과 함께 재즈 락 퓨전음악 대중음악 공연도 열렸다.

[<문화나루>] 2007년 <기전문화예술> 폐간 이후 1년여 만에 재단 홍보매체이자 경기 문화예술 잡지인 <문화나루>가 2009년 2월 창간되었다. 격월간으로 발행된 <문화나루>는 재단의 소식과 경기 문화예술 관련 기사, 문화담론 특집 등으로 꾸며졌다. <문화나루>는 2013년까지 발행되었다.

[경기창조학교] 경기창조학교는 ‘어제와 다른 내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라는 모토 아래 2009년 7월 15일 개교를 선포하고 2009년 9월 1일 전용웹사이트 [www.k-changeo.org](http://www.k-changeo.org)로 온라인 개교하였다. 연령이나 학력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적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맨파워를 이끌어내고, 멘토와 멘티, 인격과 인격, 꿈과 꿈이 만나 폭발하는 창조바이러스를 통해 창조의 가치를 전파한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어령 총괄멘토를 비롯한 40명의 국내외 최고의 창조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석학들이 경기창조학교 멘토로 참여하고, 27개의 멘티교실을 온라인 상에서 운영했다.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형 강의와 퍼포먼스를 통한 대중적인 과정으로 노매딕 창조<sup>Eduainment</sup>를 운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경기창조학교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창의인성 포럼을 개최하였고,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창의교육을 전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이밖에 창조학교의 활동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격월간 소속지인 <더 more>를 제작 배포했다.

경기창조학교는 2012년 2월까지 경기문화재단 소속으로 운영되다가, 2011년 개원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온라인 경기문화통계센터] 2010년 2월 온라인 ‘경기문화통계센터’ (<http://gsc.ggcf.or.kr>)를 오픈했다. 경기문화통계센터는 지난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이래 10여 년에 걸쳐 연구·조사·지원된 경기도내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화했다. 경기문화통계센터는 크게 △경기문화지표 △문화자원마당 △분야별 통계 등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경기문화지표는 문화기반시설, 문화기반시설활용, 문화유산, 문화창조, 문화향유 범주의 지표들로 나눠 조사된 자료들로 시군별 특성파악 및 비교·격차 분석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경기문화자원마당에서는 문화유산과 문화기반시설, 문화행사, 문화유적 등 문화와 관련된 자원들의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분야별 통계에는 문화자원, 예술인, 예술단체 분포현황과 경기도민 문화향수 실태와 예술인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삼남길 경기도 구간 개통] 삼남길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경기도를 지나 충청·전라·경상도로 이어지던 옛길 가운데 하나다. 과천 남태령을 넘어 충청도, 전라도 해남, 경상도 통영까지 이어지는 삼남길은 조선시대 10대 대로 중 가장 긴 도보길이었다. 경기도 삼남길 복원은 2011년 경기학연구실이 ‘경기 남부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 조사 사업’을 하던 중 점<sup>(點)</sup>으로 분포하는 역사 문화콘텐츠를 선으로 잇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그 해 7월부터 문헌 고증과 실사를 통해 길의 원형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끊어지거나 사라진 길은 마땅한 대체로를 찾아 연결했다. 2012년 수원·화성·오산 구간을 개통했고, 2013년 5월에는 과천~안양~의왕~수원·화성~오산~평택 전 구간 90.1km를 개통했다. 삼남길 복원은 경기도-경기문화재단-민간단체와 기업의 협동을 통해 완성된 사업이며, 전체 구간 조성비로 1,000만 원만 들어간 알뜰사업이다.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2011년 준비에 들어가, 2012년부터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는 문화나눔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은, ‘가가호호 문화교감’, ‘낮달 문화소풍’, ‘활생 문화공명’으로 진행되었다. ‘가가호호 문화교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을 예술가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활생 문화공명’은 사회공헌형 3D 업종 종사자를 위한 지역거점 예술 프로젝트로 환경미화원, 돌봄 노동자, 기간제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신적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낮달 문화소풍’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단체로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 공연장과시장으로 연계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사리 문화기획학교] 다사리 문화기획학교는 2014년 ‘다사리 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창의적인 문화예술 기획을 통해 경기도 곳곳에서 앞장서 지역재생을 실천할 청년문화기획자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다사리’는 “모두 다 말<sup>(嘗)</sup>하게 하여”, “모두 다 살리어”의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다. 평택 출신인 민세 안재홍은 ‘다사리 공동체’를 주창한 바 있다. 교육대상은 만 25세 이상인 청년으로서 연령 및 학력 제한 없고 분야나 장르 불문하고 다사리 문화학교의 교육목표를 이해하고 공부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내용은 생태주의, 문화연구, 인문학, 자연과학, 행공<sup>(行功)</sup>, 도시재생, 지역재생<sup>(마을만들기)</sup> 등으로 구성되었다.

[G 오픈스튜디오 페스티벌] 2015년 문화재생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G 오픈스튜디오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G 오픈스튜디오 페스티벌’은 지역문화예술의 중요한 자산이자 문화적 거점공간인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일반에 공개하는 행사다. 이를 통해 예술이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진화하는 기회로 삼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가 가운데 작업실 공개가 가능한 개인 및 단체(미술, 문학, 공연 등) 예술가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했고, 참여 작가로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작업실 개방 및 대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 일체를 제공했다.

## 2. 경기도 정체성 재정립

### <경기도사> 기본계획 수립

민선 1기에서 경기도 정체성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첫 번째 문화정책으로 1995년 말에 완성된 ‘<경기도사(京畿道史)> 편찬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들 수 있다. 민선 1기의 도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문화근본’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기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도사 편찬 기본계획의 목적이었다.

기본 계획을 보면, 학계의 경기도 역사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경기도 관련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경기도사 자료집>을 발간하여 집필 자료로 활용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알기 쉬운 내용으로 <경기도사>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체 일정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전<경기도사>를 편찬·발간하는 동시에, <경기도사 자료집>을 펴낸다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다.

이 계획 이전에 편찬된 최초의 현대적 경기도사는 1955~1957년 상·중·하 3권으로 제작된 <경기도지(京畿道誌)>였다. <경기도지>가 1차 경기도사라고 하면, 2차 경기도사는 1979년 1권, 1982년 2권이 편찬된 <경기도사>다. 두 권으

로 된 2차 경기도사는 역사에 초점을 맞춘 형태였다. 그러므로 민선시대 들어 시작된 <경기도사>는 3차 경기도사 편찬에 해당된다.

민선 1기의 경기도사 10개년 계획에 따라 편찬이 시작된 <경기도사>는 2002년 첫 번째 권인 선사시대 편을 시작으로 2009년 현대 편까지 총 9권으로 완성되었다. 각 권은 선사시대<sup>(제1권)</sup>, 고대<sup>(제2권)</sup>, 고려<sup>(제3권)</sup>, 조선 전·후기<sup>(제4·5권)</sup>, 한말<sup>(조선말기-대한제국기)(제6권)</sup>, 일제강점기<sup>(제7권)</sup>, 해방시기<sup>(제8권)</sup>, 현대<sup>(제9권)</sup>로 구성되었다. 이 9권과 함께 <경기도사 자료집>과 <경기도사 연구총서>를 별도로 제작해서 발간했다. 민선시대에 완성된 3차 <경기도사>는 총 57권에 이른다.<sup>44)</sup>

한편, 민선 1기는 경기도를 상징하는 통일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행정 CIP<sup>(Corporate Identity Program)</sup>를 추진했다. 민선 1기는 1995년 하반기에 심볼 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처, 전용색상, 전용서체, 지정서체, 전용문양, 마스코트 등 총 268개 항목을 확정했고, 경기도기를 새로 제정했다. 경기도 마스코트로는 지구소년과 크낙새가 선정됐다.

###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과 ‘지역별 테마마을 만들기 사업’

민선 1기는 경기도와 경기인 본래의 모습을 재조명하여 21세기 ‘일등 경기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취지로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을 추진했다.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은 1995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준비를 시작하여 1996년 6월 운동의 골격을 완성했다. 기본전략은 긍지와 자랑을 갖도록 도민의 이해도 증진, 애향심 함양, 자부심 고취 등의 방향 설정 아래 교육, 계몽과 홍보, 공공서비스 제공, 제도 보완 등을 운동의 열개로 제시했다. 그러나 운동의 핵심 시책은 계몽 운동 위주여서 과거 관선

44)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민선 5기인 2011년 폐지되었고, 2014년 ‘경기도 600년’과 2018년 ‘경기 정명(定名) 1000년’을 지나면서 정체성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선 7기인 2021년 3월 경기도사편찬 팀이 10년 만에 다시 설치되었다.

시대 계몽운동의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다.

민선 1기에서 추진된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민선 2기는 지역별 테마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마을을 선정·육성하여 애향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구체화시키자는 취지였다.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은 역사와 전통성 되찾기, 생활 속의 준법의식 함양,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체계를 갖추었으나, 추상적인 가치를 캠페인 위주로 확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도민의 참여가 저조했다. 지역별 테마마을 만들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자원화까지 염두에 둔 테마마을을 시·군당 2~3곳씩 선정·육성해 시군과 지역민의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테마마을은 농특산물 육성촌, 관광휴양촌, 지역먹거리촌, 전통문화예술촌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면, 수원 원천 갈비마을, 의정부 송산 배마을, 부천 영상문화단지, 고양 애니골 학사촌, 의왕 청계 분재촌, 이천 목리 진달래촌, 화성 모세 관광촌, 광주 소머리국밥촌, 연천 노곡 참외마을, 가평 꽃누리고장 등이 당시 추진된 지역의 테마마을이다.

### 경기도박물관 개관

경기도박물관 건립을 오롯이 민선 1기 문화정책의 성과라고는 할 수는 없다. 관선시기인 1988년에 이미 박물관 건립 8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89년 당시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산 19번지 일대 땅<sup>(46,991평)</sup>을 이미 매입했고, 1991년 ‘공간종합건축’의 안이 설계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1993년 2월 기공에 들어간 상태였다. 민선 1기가 출범했을 때 경기도박물관은 거의 마무리공사 중이었다. 경기도박물관은 민선 1기 출범 직후인 1995년 11월 완공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이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여 경기도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경기도의 상징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애향의식의

구심점이 되도록 운영의 틀이 만들어진 시기는 민선 1기 들어서였다. 경기도 박물관 설치조례가 1995년 11월 제정되었고 이어서 직제규칙이 확정되어 1과 2계, 1실 4부 총 61명의 인원이 충원되었다 박물관 개관식도 1996년 6월 21일 개최되었다.

경기도박물관은 6개의 상설전시실, 1개의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되었고, 상설전시실로는 자연사실·고고미술실·문헌자료실·민속생활실·서화실·기증유물실을 갖추었다. 각 전시실에는 시대별·유물재질별·기증자별로 유물이 전시되었는데, 개관 당시 소장유물은 <궤장 및 연회도첩><sup>(보물 제930호)</sup>을 비롯하여 3,600여 점이었다. 연구도서도 5,000권을 확보했다.

개관 당시 고고미술실에는 연천 전국리, 시흥 오이도 등에서 출토된 석기, 빗살무늬토기 등 고고유물 216점이, 문헌자료실에는 <심대 호성공신 교서><sup>(보물 제1174호)</sup>를 비롯한 문헌자료 132점이, 민속생활실에는 여주의 옹기, 이천의 도자기 등 경기도 특산 공예 14점이, 서화실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인 조영복<sup>(趙榮福)</sup> 영정, 인목대비 친필 등 392점이, 야외전시장에는 안산 선부동의 고인돌, 군포 산본동 고분군 등 15종이 전시되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개관기념으로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인 윤덕진 씨가 제작한 전통 북 25점이 전시됐다.

경기도박물관이 확보한 유물은 2017년 현재 3만2,000여 점에 이른다. 경기도박물관이 그동안 개최한 중요전시로는 <경기관찰사>, <전통 목가구 특별전: 경기 스타일>, <책거리 특별전>, <천년의 뿌리, 용인 이씨>, <경기보물>, <의문의 조선> 등이 꼽힌다. 또한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과 문화: 밌브레스 기와 바구니>, <요령고대문물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전시 <어린왕자> 등 해외 교류 전시를 개최했다.<sup>45)</sup>

## 테마박물관과 문화의 거리 지정

45) 경기도박물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선 4기인 2008년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산하 기관으로 편제되었다.

민선 1기부터 추진된 테마박물관 건립 및 지정 사업과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역시 경기도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정책에 해당한다. 역사와 전통 속에서 정체성의 맥을 찾고 살려내는 동시에 지역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문화적 장소들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테마박물관 정책과 문화의 거리 정책은 민선 1기에서 민선 7기에 이르는 동안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어도 본질적인 면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어진 정책이다. 테마박물관 정책은 민선시대 경기도 내 박물관 확충의 기반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시·군별 테마박물관 건립 사업은 민선 1기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채택 수용된 도 특수시책 사업이다. 테마박물관 정책은 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아 사장되는 수집품을 한 공간에 집결시켜 박물관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수익 높은 관광명소로 육성하자는 내용이었다. 1996년 5월 지역별 테마박물관 계획이 수립되어, 1997년 안성맞춤 유기박물관<sup>(대덕면 내리 산57)</sup>, 동두천 전쟁유물박물관<sup>(상봉암동 산38)</sup>, 양평 용문산 산채박물관 등 3개소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안성맞춤 유기박물관과 전쟁유물박물관 건립이 실제 추진되었다.

3개 시범 테마박물관 추진과 함께 이미 사립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이던 고양 중남미박물관, 과천 마사박물관, 용인 한국상업사박물관, 여주 목아불교박물관, 김포 덕포진 교육박물관을 테마박물관으로 지정해, 경기도 정체성을 확립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문화의 명소가 될 만한 곳을 골라 상징물과 조형물을 설치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테마박물관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사업이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역시 행정쇄신위 문화분과에서 제안된 사업이다. 복합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지역별로 특화시켜 조성하자는 취지에 따라 1996년 수원 나혜석 거리를 시작으로, 1997년까지 9곳에 도비 13억6,800만 원이 지원되었다. 문화의 거리는 주민의 휴식공간을 겸하는 동시에 지역 명소로 확충·

유지 관리해 나가기로 했는데, 민선 1기에 진행된 문화의 거리 사업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민선 1기 문화의 거리 조성 현황

| 시군명 | 거리명        | 조성위치      | 사업기간  | 길이(m) | 면적(m <sup>2</sup> ) | 총사업비<br>(백만원) |
|-----|------------|-----------|-------|-------|---------------------|---------------|
| 수원시 | 홍난파, 나혜석거리 | 인계동 보행자도로 | 96~98 | 300   | 4,500               | 1,245         |
| 성남시 | 성남 문화거리    | 분당구 수내동   | 97-99 | 332   | 6,640               | 1,000         |
| 평택시 | 평택 문화거리    | 비전동(시청)   | 97-98 | 200   | 10,000              | 475           |
| 하남시 | 하남 문화거리    | 시청 주변     | 97-98 | 800   | 1,900               | 352           |
| 여주군 | 남한강변 문화거리  | 남한강변      | 97-00 | 1,510 | 4,000               | 1,745         |
| 화성군 | 화성 문화거리    | 태안 용건릉 주변 | 97-00 | 2,300 | 18,400              | 1,181         |
| 연천군 | 연천 문화거리    | 읍민회관 주변   | 97-99 | 800   | 13,600              | 540           |
| 가평군 | 대성MT 문화거리  | 북한강변      | 97-98 | 2,500 | 100,000             | 1,480         |
| 양평군 | 양평 문화거리    | 군민회관 주변   | 97-98 | 200   | 21,998              | 170           |

### 경기도 인정종가 선정

경기도 인정종가 선정 사업은 경기도 정체성 재확립 차원에서 도내 전통 종가 가운데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독특한 의식주 생활문화를 간직한 종가를 선정해 도가 인증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민선 2기인 1999년 상반기에 각 시군에서 신청한 종가 63곳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경기도 문화 재위원회가 11곳을 인정정가로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는 인정종가를 경기도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의 얼과 슬기를 간직한 작은 박물관으로 간주하고 보존·활용을 위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1999년 인정종가는 의정부시 장암동 박찬호 종가, 평택시 진위면 은사리 정호신 종가, 안산시 부곡동 유문형 종가, 오산시 금암동 전형식 종가, 시흥시 산현동 윤성준 종가, 시흥시 거모동 한걸택 종가, 군포시 속달동 정운석 종가, 의왕시 내손동 이택 종가,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신창섭 종가, 여주군 점동면

사곡리 윤중진 종가,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이원규 종가다.

[불천위 조사 사업] 1999년 민선 2기에 시작된 인정종가 사업은 2000년대 들어 불천위(不遷位) 조사사업으로 이어졌다. 불천위는 큰 공훈을 세운 선현을 영구히 제사지내도록 허락된 신위를 일컫는 말이다. 불천위 사당을 모시는 집안이 종가인데, 불천위 문중 대부분이 경기도에 분포해 있다. 불천위 종가는 선현의 생애와 업적은 물론 문중의 예법, 집성촌의 면모 등 지역성과 문화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는 민선 4·5·6기에 해당하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종가를 방문하여 불천위 144위에 대해 상세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경기문화재단은 2015년 ‘경기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그 내용을 5권1집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로 발간하였다.<sup>46)</sup>

### 실학현양사업

[경기실학과 <실학축전>] 실학은 성리학 중심의 정치질서에 도전하고, 비판적 현실인식과 개방적인 학문 태도를 통해 조선사회의 변화를 바랐던 조선후기 학문의 한 경향을 일컫는다. 당대의 선진 지식인이었던 실학자들은 실리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낡은 이념과 제도의 과감한 개혁과 민생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주장했다. 반계 유형원(柳馨遠), 성호 이익(星湖 李瀾),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에 이르는 ‘경기실학’의 전통은 우리 역사에서 높이 평가된다.

경기실학은 이미 민선 1기부터 경기도 정체성의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실학의 경제치용(經世致用), 이용후생(利用厚生),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잇는 사업이 모색되었다. 민선 3기 들어 이러한 노력들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려 한 것이 실학현양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003년부터 지역의 정신문화

46)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경기도 불천위: 조사보고서』 1~5권, 경기문화재단, 2015.

유산인 실학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현실에 맞게 되살리자는 취지로 경기실학현양위원회를 구성하고 10년에 걸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축전·공연·전시·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첫 사업으로 2004년 실학축전이 개최되었다.

<실학축전 2004 경기>는 실학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한 새로운 접근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실학현양은 학문 연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중이 실생활 속에서 실학을 피부로 실감할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경제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정신이 오늘날의 개혁·민생·실용이 되어야 실학은 실천철학으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획된 행사가 <실학축전 2004 경기>였다. 실학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미래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에코실용박람회’, 남성 중심의 유교철학 전통에 가려진 여성 실학자를 찾아내어 생활 속의 실학을 모색한 ‘축제로 만나는 규합총서’, 220년 만에 복원된 ‘산대희(山臺戲)’ 공연은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듬해인 2005년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진 <실학축전 2005 경기>는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초정 박제가(楚亭 朴齊家), 다산 정약용을 재조명하고 온 가족이 참여해 실학정신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연암과 초정 서거 200주년을 기념해 이들의 시·서·화를 한지로 만든 5층 백담에 전시하는 백담전이 열렸고, 다산의 글과 그림을 전시한 ‘여유당생가전’, <열하일기>의 여정을 만화와 민화 기법으로 꾸민 다음 10개 구간을 당나귀 수레를 타고 돌아보게 한 ‘연암마당’, 다산의 삶과 철학 이야기를 마당극으로 풀어낸 ‘다산선생과의 하루’가 진행되었다. 한편 민선 3기는 실학축전 외에도 실학정신을 현대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연구조사 사업과 실학순례 및 답사코스를 개발하였고, 실학총서를 연속 발간했다.

[실학박물관 건립] 민선 3기에 실학박물관 건립도 추진되었다. 실학 본고장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실학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하여 경기도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취지였다. 2003년 구성된 경기 실학현양위원회는 발족 즉시 실학박물관 부지선정 용역을 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에 맡겼다. 실학박물관 후보지로는 실학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반계 유형원의 묘소가 있는 용인, 실학의 종장으로서 경제치용학파를 이룬 성호 이익의 유적이 있는 안산, <동사강목>을 저술한 순암 안정복(順菴 安鼎福)의 연고지 광주,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의 고향 남양주 등이 후보로 올랐다. 각 지자체는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수차례 전문가 회의 끝에 박물관 부지로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4번지 일대(현 위치, 도로명 주소 ;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747번길 16)가 결정되었다. 능내리 부지는 다산 정약용의 생가와 묘역이 인접하고 있어 역사성이 높고, 두물머리와 팔당호 등 경관이 뛰어난 관광지와 가까워 활용성,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학박물관의 입지조건으로 최적지라고 평가되었다. 실학현양위원회는 명실공히 실학박물관이 실학사상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실학박물관은 2005년 부지매입과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민선 3기 임기 말인 2006년 5월 기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민선 4기가 취임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2006년 11월 지하수 유출 사고로 공사가 중지되었다. 사고는 터파기 때문에 빚어졌다. 실학박물관 위치인 다산유적지는 경기도 기념물 제7호였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박물관 건물의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맞추어 본래의 설계보다 터파기를 더 깊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지하수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박물관 건립 첫 단계로 되돌아가 계획을 재검토해야 했다. 한때 공사를 이대로 중지해야 한다는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실학 정신 현양 차원에서 박물관 건립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같은 진통으로 인해 공사는 1년 이상 공전할 수밖에 없었다. 공사가 재개된 시점은 2008년 1월이다.

이후 1년 6개월 공사를 진행해 2009년 6월 건축공사를 마쳤고, 7월말에는 전시공사도 준공되었다. 실학박물관은 2009년 10월 23일 개관식과 함께 특별전으로 <김육과 대동법>을 개막했다.

하지만 실학박물관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이 아니라 문화재관리시설로 준공허가가 났다. 명칭은 박물관이나 서류상으로는 박물관이 아닌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는 본래 개발제한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인데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규제까지 중복된 지역이어서 문제가 꼬인 탓이다. 박물관의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되었다.

실학박물관은 대지면적 4,075㎡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993㎡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기획전시실, 강당, 회의실, 휴게실, 관리동이 갖춰져 있으며, 2층은 1·2·3전시실을 실학이 형성되던 시기의 역사적 배경부터 실학의 탄생과 관련 정보검색까지 가능하도록 꾸며졌다. 앞마당은 2011년 준공된 ‘다산 정원’이다.

전시유물은 2005년 혜강 최한기(惠岡 崔漢綺) 가문이 소장한 유물 195점을 기증받은 일을 필두로 연암 박지원 및 환재 박규수(環齋 朴珪壽) 가문 소장 기증유물 78점, 일본 난학(蘭學) 및 실학 관련 유물 46점, 동경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 소장 9점, 잠곡 김육(潛谷 金瑨) 가문 소장 14점, 일본 대표실학자 미우라 바이엔 <현어도> 최초 복원, 포저 조익(浦渚 趙翼) 가문 소장 240점 위탁, 2008년 구입 252점 등을 수집 정리하였다.

실학박물관은 ‘실학가치의 공유를 통한 인류문화행복 추구’를 미션으로, ‘실학정신의 확산을 위한 21세기 플랫폼 조성’을 비전으로 정했고, 실학문화의 중심, 실학의 대중화, 경기 동북부 지역문화의 거점을 3대 전략목표로 실학문화의 원형 발굴과 가치 재인식, 편안하고 느낌있는 전시공간 조성, 지역문화 네트워크 강화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실학박물관은 2010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특별전, 기념강연, 기념학술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012년에는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 전시회와 학술

행사, 2013년에는 성호 이익 서세(逝世) 250주년 기념 전시회와 학술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2018년에는 창작뮤지컬 <다산 정약용, 하피첩의 귀향>도 공연했다.

## 효 사상 고취 사업

민선 2기와 민선 3기 사이에는 연속되는 문화정책이 많다. ‘효 사상 고취’도 그 가운데 하나다. ‘효’ 관련 일련의 정책은 민선 2기에 추진되기 시작하여, 민선 3기에 역점시책이 되었다. 민선 2기와 민선 3기 교체기인 2002년에 진행된 효 관련 행사와 사업만 해도 효 교육 교사 양성 105명, 효 문화 심포지엄 및 학술 세미나 개최 2회, 효 실천 연구회 조직 등이 진행됐고, 효 문화 유적답사 15회 467명, 효 문화 체험교육 10회 435명, 효 연극 캠프 운영 2회 83명 등이 진행됐다.

민선 3기 마지막 해인 2006년에도 효와 가족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단편영화 공모전과 희곡작품 공모전이 진행됐다. 또한 9월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고령화 사회와 효 가족문화 학술대회’,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고령화 사회와 효 가족문화 의식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이들 사업은 한국 사회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전통 가족 형태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문화와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효 박물관 건립 추진] 효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효 박물관 건립 구상에서 출발해 효행원 건립 추진으로 이어진 정책이 가장 주목된다. 민선 2기는 1999년부터 효 정신과 문화를 강조하면서 효 박물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효 박물관은 효 역사와 문화유산의 체계적 수집·정리·보존하여 연구·전시·교육을 위한 중심공간으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 효 박물관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6월 1일 당선작을 선정했고, 6월 15일 화성시 용주사 주차장에서 효 박물관 건립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효 박물관 건축부지로 예정했던 용주사 인접 부지에 대해 용주사 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효 박물관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다. 당시 경기도는 2003년 상반기 중에 효 박물관 부지를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효 박물관 건립 사업은 2003년 들어 경기가족사랑 효마을(효행원) 건립으로 확대 추진되었다. 1만 평<sup>(3만3,000㎡)</sup>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4,845㎡ 규모로 교육시설 전시시설 관리시설을 갖춘 효행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효행원 부지는 용주사 인근에서 용건릉 인근으로, 다시 화성시 태안읍 용주사와 용건릉 사이 태안3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바뀌었다.

건립부지 주변은 택지개발사업계획 단계부터 단독주택(효행촌)으로 배치하여 용건릉↔효행원↔효행촌↔효행원↔용주사를 연결하는 효행로를 계획, 도민을 위한 전통인성교육, 학교수학여행지, 가족 화합의 장, 효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효 문화의 산 교육장이자 실천의 장으로 삼는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었다.

경기가족사랑 효마을 건립 사업을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은 2007년까지 효 유물 수집과 특별전, 상표등록 등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태안3지구 택지개발지구 효행원을 지으려던 정책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효행원 사업은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약 8년간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지 결정, 유물 수집과 관련해 약 8억 원을 낭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효는 중요한 전통 가치이고 이를 계승해 경기도의 정체성의 중요 부분으로 삼는다는 의도와 시도는 문제가 없었으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전시공간을 추진했던 정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다.

### 경기천년 행사와 사업

[경기도 600년 행사] 민선 5기인 2014년 ‘경기도 600년’ 행사가 열렸다. 1994년 서울시가 ‘정도 600년’ 행사를 열었듯, 경기도도 조선 태종 14년<sup>(1414년)</sup> 경기 좌도와 경기우도로 나뉘었던 지명이 경기도로 통합된 지 600년이 흐른 역사

를 기념했다. 경기도는 2014년 2월 16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사전공연과 기념식, 고유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월 17일에는 ‘통일 한국의 중심 경기도 600년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역사와 문화, 변화와 발전 등을 상세히 담은 250쪽 분량의 기념책자도 발행했다.

[경기 정명 천년 행사] 2018년은 고려 현종 9년 개경의 외곽지역을 ‘경기’라고 칭하면서 ‘경기’라는 지명이 시작된 지 1000년이 흐른 시점이다. 경기도는 2014년 경기도 600년을 기념한 데 이어, 경기 정명<sup>(定名)</sup> 1000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경기도의 역사성을 자랑하고,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경기가 서울의 주변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발신지로서 대학가를 배출하고 여러 사상을 포용한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한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민선 6기인 2016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을 포함해 ‘경기천년 기념사업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경기천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추진된 주요사업은 경기천년 대축제<sup>(2018년)</sup>, 경기지역학 네트워크<sup>(2016-2018년)</sup>, 경기도 현대 지역사회 기록화 사업<sup>(2015-2018년)</sup>, 경기 아카이브전<sup>(2018년)</sup> 등이 있다.

경기 아카이브전은 상상캠퍼스 내 공간을 활용해 2018년 9월 10일 개막 행사를 가졌다. 2개월간 진행된 아카이브 전시는 상상캠퍼스 내 건물 유휴 공간 3,000㎡를 ‘경기천년기록관’으로 꾸몄고, 전시작품 자료는 모두 6,000점이었다. 전시연계 프로그램은 6종 총 139회였다.

경기천년 대축제 릴레이축제는 20개 기관이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우선 10월19~21일 상상캠퍼스에서 5억6,000만 원을 들여 새천년 미래비전 선포식을 겸한 경기 천년 대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생태예술전, 오두막캠프, 숲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대축제 참가자는 3만 1,166명으로 집계됐으며, 참여 만족도는 85.02%로 조사되었다.

경기천년 생활문화 콜로키움<sup>(집담회)</sup>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간담회 4회, 콜로키움 5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에서 ‘경기천년 장인<sup>(匠人)</sup>’ 200명 정도를 발굴해 대축제 동안 장인 활동을 전시했다. 경기지역학 네트워크는 지역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시군 문화기관을 통한 지역학 활동 기초를 제공하고, 경기 향토문화연구 간담회, 경기학포럼, 31개 시·군 문화원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도 현대 지역사회 기록화는 지역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조사하고 기록해 경기도 구성의 근원을 파악하려 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형성과 역사적 흐름을 조사하여 기록화 추진 관련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천년 사업은 온라인이나 매체 홍보,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널리 알렸는데, 약 367만 명에게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문화의 우수 콘텐츠를 담은 인문교양도서 100권을 선정해 <경기 천년 빛나는 정신문화>를 발간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017년 12월 공모를 통해 경기 천년을 기념하는 엠블럼과 함께 슬로건으로 ‘경기 천년, 대한민국을 품다’라는 슬로건을 선정했다.

### 경기에코뮤지엄

경기에코뮤지엄은 새로운 유형의 문화관광 융·복합 개념으로 민선 6기인 2016년에 시작된 ‘경기만 에코뮤지엄’으로부터 점차 확대되고 정련된 문화정책이자 사업이다. 에코뮤지엄<sup>(Ecomusium)</sup>은 ‘생태 및 주거환경’을 뜻하는 에코와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을 결합시킨 용어다. 사용 목적이나 배경에 따라 지역 박물관, 지역 공동체 박물관, 생태박물관, 민속박물관, 에코뮤제<sup>(Ecomusée)</sup>라고 쓰이기도 한다.

에코뮤지엄은 전통 박물관과 구별되는 새로운 박물관의 기능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간략히 정리하면 “지역의 문화/생태 유산을 발굴·조사·연구·기획·실행·보존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스스

로 지역전문가로서 소양을 축적해 가도록 하며,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역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공공부문과의 협업이 이뤄지는 박물관”이다.<sup>47)</sup>

경기에코뮤지엄은 경기도 문화·생태 자원의 고유한 가치와 특색을 발굴하고, 현장과 전문영역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자원 보존 및 관리를 수행하며, 실생활과 연계해 지역문화유산을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으로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꾀하며 지역문화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에코뮤지엄의 전략은 에코뮤지엄의 철학을 정립해 경기도형 모델을 확산하고, 경기도·기초지방자치단체·민간 거버넌스로 문화분권을 실현하며, 시민 주도 문화재상을 통해 문화자치를 구현하고, 투자 중심 개발의 부작용을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계획 수립을 세워나간다는 것이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경기만은 수도 서울을 감싸 안은 서해 바다의 중요한 길목이다. 경기만의 역사는 긴장과 각축의 장이었고,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의 축으로 설정될 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구역이다. 경기문화재단은 2016년 에코뮤지엄 컬렉션 100선을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경기만 지역 3개 지방자치단체<sup>(시흥·안산·화성)</sup>와 에코뮤지엄 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를 기반으로 3개 도시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해안문화와 생태유산, 지역의 역사를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9년부터는 평택과 김포까지 경기만 에코뮤지엄 권역을 확장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2016년에 <경기만을 걷는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 <선감학원>, <2016 매향리 스튜디오 이기일전>, <2016 시흥 에코뮤지엄 지

47) 경기에코뮤지엄 홈페이지 소개글.

난 이야기>, 2017년에 <섬에 사는 남자, 섬에 사는 여자 - 에코뮤지엄 누에섬 >, <우리들의 농섬>, <제주도 아트파크 보고서 2017>, 2018년에 <섬마을 에코뮤지엄 축제>, <대부 선감지역마을 연구조사>, <여부, 소금밭에 돌아오다 >, <호조별 전통문화자원조사>, <마을, 예술로 태어나다>, 2019년 <선감학원 40년의 진실>, <매향리를 디자인하다>, <옛소래염전 소금창고 고증 조사용역 결과보고서> 등을 진행했다.

경기에코뮤지엄은 민선 7기인 2019년 경기 북부, DMZ 일원 접경지역으로 사업권역을 확대했다. 분단의 흔적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지역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경기 동부권역(이천·여주·광주)의 한강수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한편, 2021년부터는 지역문화 생태계의 협력망을 넓히고, 기존 사업으로 조성한 공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된 공간이나 조직은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시설 개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 3. 문화재 발굴·보존·활용

#### 경기도 문화재의 디지털화

[경기도 문화유산 CD롬 제작] 문화재와 관련된 첫 번째 민선시대 문화정책은 <경기도 문화유산 CD롬> 제작이다. <경기도 문화유산 CD롬> 제작은 민선 1기 때인 1996년 계획이 확정된 다음 2년여 간 제작기간을 거쳐 민선 2기 초인 1998년 11월 완료되었다. 이 CD롬에는 경기도에 소재한 국보·보물·도기념물 등 유형·무형 문화재 597점에 대한 설명을 유형별·시군별로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경기도 문화유산 CD롬> 제작은 경기도의 문화재를 디지털화한 첫 시도로서 의미가 있고, 민선 2기에서 본격 추진된 역사문화체험 가상현실 시스템 구축에 앞선 선구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문화재목록·용어사전·인물사전을 함께 수록한 <경기도 문화유산 CD롬>은 1만 장이 제작되어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시군에 배포되었다.

[경기문화체험 가상현실시스템 구축] <경기문화체험 가상현실시스템> 구축은 경기도 문화유산 CD롬 제작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첨단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수립되고 시행된 문화정책이다. 경기문화체험 가상현실<sup>(VR)</sup>시스템은 민선 2기인 2000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했다. 2000년 수원화성, 남한산성, 경기도립박물관 3개소를 가상현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2001년 하반기부터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스템 구축사업 2차 연도인 2001년에는 양주 회암사지와 연천 선사유적지, 여주 고달사지 가상현실시스템 구축으로 확대됐다. 이 시스템은 문화재의

디지털화를 통해 문화재 영구 보존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영상 기술의 확보를 통해 예술·문화산업, 관광산업, 영화·영상산업, 방송산업의 기반 기술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목적도 부여되었다. 요컨대, 문화재 분야에서 첫 발을 내디딘 디지털 문화재 콘텐츠 구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역사문화 가상현실 체험시스템>으로 명칭이 정리되었고, 2000년부터 경기문화재단이 맡아 진행했다. 경기문화재단은 민선 3기인 2003년 6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사이트<sup>(www.vrkg21.net)</sup>를 정식 오픈했다. 이 사이트에는 기존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에 더해 ‘정조 화성행차 이야기’, ‘효·실학 애니메이션’, ‘다산을 찾아서’가 새롭게 구축되어 생동감이 부여된 가상 현실 화면으로 재현됐다.

###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해설해 주는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사업도 민선시대 문화재 관련 문화정책이다. 이 사업은 민선 2기인 2001년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자원봉사자들인 문화유산 해설사는 평일과 주말에 팀을 이뤄 외래 방문객들에게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2002년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현황을 보면, 9개 시군 158명이 13개 문화유적을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수원시 화성 △이천시 도예촌 △화성시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고양시 행주산성 △광주시 남한산성 △파주시 임진각관광지/자운서원 △여주군 명성황후생가/신록사/세종대왕릉 △안성시 칠장사/3·1운동기념관 △남양주 다산유적지.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은 이후로도 계속 추진된 사업이다.

##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문화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예능을 도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린 문화정책 사업이다. 민선 2기인 1999년 경기도를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처음 실시되었다. 서부권(안양·광명·안산·김포·부천) 공개행사는 5월 8일 부천 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승무, 줄타기, 구리 갈매동 도당굿 등 8개 종목을 시연했고, 계명주·부주의·백동연죽장 등 14개 종목이 출품·전시됐다.

남부권(수원·평택·안성·화성) 공개행사는 10월 9·10일 수원시 장안공원에서, 북부권(고양·구리·남양주·양주·가평) 공개행사는 10월 9일 의정부 시청앞 광장에서, 동부권(성남·하남·용인·광주·양주) 공개행사는 10월 10일 성남시 분당중앙공원에서 진행됐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이후 연례행사로 열렸다.

한편, 무형문화재 수준은 아니지만 사명의식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으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발굴·선정하여 21세기형 신 지식인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경기 으뜸이 선발 사업이 1999년부터 진행되기도 했다. 첫해에 26명을 선발한 데 이어 2000년에는 3차례 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했다. 선발 분야는 갈비조리사, 이발사, 산머루농업, 짚풀공예, 천연염색, 소머리국밥요리, 환경벤처, 해양동물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으뜸이를 선정했다. 이들의 삶과 숨씨를 담은 홍보책자 『우리시대의 삶 - 2000 경기 으뜸이』를 발간했다.

## 남한산성 정비·복원

[남한산성의 역사]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의 산성이지만,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통일신라시대 문무왕 때 축성한 주장성<sup>(672년)</sup>에 닿는다. 조선 초기부터 남한산성은 중요한 전략 거점으로 여겨졌다. 임진왜란 후인 광해군 13년<sup>(1621년)</sup> 일부 수축이 이루어졌고, 인조 2년<sup>(1624년)</sup>에서 4년<sup>(1626년)</sup> 사이 대대적으로 수축되

었다. 이때 주장성의 옛 터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60여 리<sup>(25km)</sup> 떨어진 남한산성은 해발 480m의 험준한 산의 산세를 최대한 이용하여 축성한 방어용 산성으로 전체 둘레가 12km다. 산성 안은 분지를 이루기 때문에 유사시 임금과 조정이 대피하는 왕실의 보장처(保障處)로 인식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했으나 결국 청에 굴복했다. 남한산성은 19세기 천주교 박해 시대에는 순교지이기도 했고, 이후 의병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 때 남한산성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4·19 혁명 이후 국립공원 지정이 취소되었다. 남한산성은 1971년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76년 7월부터 광주시에서 위탁관리했다. 1970년대 들어 도로망이 정비되고 성곽과 문화재 보수가 이뤄지기 시작해 1997년까지 성곽 5.1km가 보수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승용차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남한산성의 서울 인근의 가볼 만한 곳으로 꼽히게 되었다.

[남한산성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 민선 2기 경기도는 병자호란 투항지로 잘못 알려진 남한산성의 역사이미지를 바로잡고 수도권의 교육과 휴식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남한산성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수립했다. 남한산성은 본성 9.05km, 외성 2.7km 총 11.76km에 이르는 대규모 성곽이지만, 성곽 5km 정도가 보수되었을 뿐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된 상태였다.

마스터 플랜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450억 원(국비 580억, 도비 870억)을 들여 남한산성을 호국의 성지로 정비 복원하기로 했다. 첫 해인 2000년에는 성곽 710m, 웅성(연주봉 웅성, 장경사신지 웅성) 2개소를 복원하고, 사유지로 남아 있던 행궁지를 매입했다. 2002년에도 성곽 300m와 남한산성 행궁 내 좌전을 복원 정비했다. 행궁 내 좌전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하고 제사하기 위한 시설로서 남한산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민선 2기에 해당하는 2002년까지 성곽 1,295m가 보수되었고, 행궁<sup>(상궐 : 5개 동 72칸 반)</sup>을 복원하였다. 2단계 사업은 2003~2005년 700억 원<sup>(국비 280억 원, 도비 420억 원)</sup>을 들여, 연무관 및 북문권역 정비, 산성마을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3단계로 2006~2008년 441억2,800만 원<sup>(국비 25억9,000만 원, 도비 182억2,800만 원)</sup>을 투입해 남문 및 동문 권역 정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선 3기는 2단계 사업기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단계 발돋움하는 초기 복원 정비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제8차 발굴조사 중 하궐 복원 예정지에서 1장당 무게가 20kg에 이르고, 길이가 55cm인 초대형 기와더미와 건물터 등 통일신라 유구가 다량 발굴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성곽 길이도 문무왕 때 주장성 길이와 거의 일치해, 남한산성이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통일 이루는 과정에서 군사상 중요했던 역사유적지로 조명 받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산성은 2007년 6월 8일자로 국가 사적 제480호로 지정되었다. 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주요 유형문화재는 수어장대<sup>(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sup>, 승렬전<sup>(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sup>, 청량당<sup>(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호)</sup>, 현절사<sup>(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sup>, 침패정<sup>(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호)</sup>, 연무관<sup>(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sup>이 있다. 남한산성이 품은 문화유적은 모두 200여 점에 이른다.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경기도는 인류사적 관점에서 남한산성은 군사방어 목적인 행궁 기능을 갖춘 산성 도시로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7세기에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결정짓는 역사적 거점이었고, 시대별 축성술에 따른 관련 시설물이 집결된 초대형 산성이며, 여장과 재료 등에서 고유한 모르타르 제작기법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현재까지도 원주민들이 누대에 걸쳐 고유의 민속과 문화유산을 전승하며 거주하는 취약인 점 등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도 손색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성과 행궁 복원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2007년 경기도는 그동안 광주

시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했던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도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했다. 민선 4기인 2009년 경기 문화재단에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을 출범시켰는데, 이로부터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우선,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했고, 문화재청은 2011년 국내 잠정목록 가운데 우선 등재추진 대상으로 남한산성을 포함시킨 후 정식으로 등재신청서 작성에 착수했다. 2013년 1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가 제출되어, ICOMOS<sup>(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sup> 전문가들이 남한산성 등재 실사 작업을 벌였다.

2014년 6월 22일 남한산성은 대한민국에서 11번째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2016년 11월 별도 조례에 따른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조직으로 다시 태어났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운영지원팀, 세계유산보존팀, 세계유산활용팀, 공원관리팀 체제를 갖추고 있고, 산성과 공원 관리를 넘어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남한산성 연구총서>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 양주 회암사지 발굴·정비

[회암사지 발굴] 양주 회암사<sup>(檜巖寺)</sup>가 정확하게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보면 고려 때인 12세기 무렵에는 이미 창건되어 있던 큰 절로 추정된다. 회암사는 고려 말~조선 초에 왕실의 후원 아래 크고 작은 불사가 이뤄지고, 고승들이 머물던 당대 최고의 사찰이었다. 불교를 억압한 조선 왕조 들어서도 왕실의 원찰로서 유학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상을 지켰다.

태조 이성계<sup>(李成桂)</sup>가 7차례나 회암사에 다녀갔다는 기록이 있고, 상왕이 된 후 회암사에서 수도생활을 하기도 했다. 세종 때 선교<sup>(禪敎)</sup> 양종을 통폐합하면

서 회암사는 조선 최대 사찰이 되었다. 또한 명종 때 수렴청정을 하였던 문정왕후가 대각국사 보우(大覺國師 普愚)를 통해 불교 중흥책을 펴면서 회암사는 전국 제일의 도량으로 번영하였다. 하지만 문정왕후 사후 급격하게 사찰의 위상이 추락해 16세기 말 유생들의 방화로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암사지는 1964년 국가 사적 128호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폐사된 절터가 방치되다시피 했다. 민선시대 들어 경기도는 회암사지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판단하고 1997년부터 발굴 조사에 착수했다. 1997년에는 경기도박물관에 의해 정밀 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1999년 2차조사부터는 경기도박물관과 기전문화재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민선 2기인 2002년까지 5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민선 3기(2002-2004년)에는 사유 토지 42필지 24만3,132㎡ 매입과 2001년부터 착수된 전 시관 건립(1동 594평) 및 유적정비, 단지정비 등이 이어져 2006년까지 진행됐다.

<표> 민선 2기 회암사지 발굴 조사 내용(1997~2002)

| 구 분  | 조사연도 | 조사지역             | 조사기관               | 비 고  |
|------|------|------------------|--------------------|--|
| 시굴   | 1997 | 사역 전체            | 경기도박물관             | 조사 후 7개년 여에 걸친 중장기 조사계획 수립                     |
| 1차발굴 | 1998 | 8단지 전체           | "                  | 정청 및 주변 건물지 왕실과의 관련성 확인, 주변 유물 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 실시 |
| 2차발굴 | 1999 | 6,7단지 전체         | 경기도박물관<br>기전문화재연구원 | 보광전지 금탁 발견(명문을 통해 이성계와의 관련성 확인)                |
| 3차발굴 | 2000 | 5단지 서쪽           | "                  | 완벽한 상태의 구들 시설 다수 조사                            |
| 4차발굴 | 2001 | 5단지 동쪽<br>4단지 전체 |                    | 보광전에 이르는 문지가 사청왕문임을 확인                         |
| 5차발굴 | 2002 | 3단지              |                    | 건물지·우물지·장장지·배수로 등 확인                           |

회암사는 천보산 남쪽의 완만한 경사면에 조성된 평지성 가람이다. 가람의 중심축선은 31도 가량 동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크게 보아서는 남북 축선을 유지하고 있다. 비교적 얇은 계곡 쪽 양 측면을 잘라내어 여기에 2~3단의

석축을 쌓고, 계곡부에는 흙을 덮어 대지를 조성하였는데,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면서 계단식으로 평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8개의 단지로 구성된다. 3단지에서 8단지까지는 건물지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단지 외곽으로는 담장이 둘러져 있다.

회암사지는 2002년 문화재청의 ‘불교 유적권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회암사지는 발굴조사가 진행될수록 웅장한 과거의 규모가 드러나고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본격적인 발굴 후 복원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8차 진행된 발굴 조사 결과 회암사는 일반적인 사찰 건축 수준이 아니고 궁궐 건축의 구조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났다. 가람의 배치가 평지가 아닌 산간(천보산)에 위치하면서도 8단의 단축을 이루면서 남쪽에 회랑을 두고 있는 점이 고려시대 궁궐이나 가람 배치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남북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64개 건물을 배치하여 종교 공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건물마다 기능적인 용도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토 유물도 왕실에서만 쓰이던 용무늬 기와, 봉황 무늬 기와, 청기와, 잡상 등 기와류와 왕실 도자기 전용인 광주 관요(官窯)의 도자기류가 쏟아져 나왔다. 보광전 터에서 출토된 청동제 금탁(金鑠)은 ‘회암사’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회암사의 실재를 입증해 준 최초의 유물이다. 또한 ‘조선 국왕’, ‘왕현비’, ‘세자’ 등의 명문으로 회암사와 조선 왕실의 깊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유물이다.

경기도는 민선 1기부터 양주시와 함께 회암사지를 경기 북부의 최고 관광지이자 역사교육의 장으로 종합정비하기로 하고 발굴 조사에 박차를 가했다. 민선 3기인 2005년에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 2010년 건축공사가 준공되었고, 민선 4기인 2012년 개관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회암사지 남쪽에 건립되었다.

## 수원 화성행궁 복원·정비

화성행궁 복원은 수원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지만, 수원은 경기도의 도청소재지이고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경기도의 으뜸가는 문화유산이기에, 복원 사업에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화성행궁은 정조가 수원읍치를 화산 아래에서 팔달산 아래로 옮긴 1790년 5월 340칸 규모로 완성되었다. 화성 축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화성행궁은 총 577칸 규모의 정궁(正宮)으로 지어졌다. 화성행궁은 1795년 혜경궁 홍씨 회갑연이 치러진 중심무대였으며, 정조가 능행차 때마다 머물렀던 조선 최대의 행궁이 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의도적으로 파괴되어 경기도립병원, 신풍초등학교, 수원경찰서 등이 들어섰고, 오직 낙남헌(落南軒)만이 신풍초등학교 운동장 한 귀퉁이에 남아있었다. 낙남헌은 1972년 경기도기념물 제65호가 되었다.

화성 복원은 1975년 국가적 사업으로 결정되어 1979년 복원되었으나 화성행궁은 복원되지 못하다가 1995년 경기도기념물 제65호인 낙남헌을 화성행궁지로 확대 지정하고, 화성성역 200주년을 기념하여 민선 1기인 1996년 7월 화성행궁 복원이 시작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화성행궁 복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화성행궁 1단계 복원사업은 민선 3기인 2002년 7월 482칸을 복원 완료하였다. 2004에는 화성행궁 후원지역을 매입하여 후원의 담장 추정지역 시굴조사를 통해 담장을 확인하고 2005년 후원 및 담장공사를 진행하여 후원의 내포사를 복원하였다. 2004년에는 화성행궁 앞 광장공사도 추진에 들어갔고, 2006년에는 신풍루 앞 명당수 옛길 공사에도 착수했다.

민선 4기인 2007년에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화성에 대한 정보와 휴식을 제공하는 홍보관이 개관했고, 그 전해 불의의 방화로 소실되었던 서장대도 복원했다. 이어 장안문 성곽을 옛 모습대로 복원해 성곽순례 관람객이 장안문을 직접 걸어서 통행할 수 있게 했다. 2008년에는 화성행궁 앞 광장공사를 마쳤고, 주요 미복원 시설이었던 종루 복원과 역사공원 조성을 마쳤다.

2010년 6월부터는 남수문 복원 공사에 들어가 길이 29.4m, 너비 5.9m, 전체 높이 9.3m, 아래쪽 9칸 홍예수문까지 복원했다. 남수문은 1846년 1차 유실 후 복원되었으나, 1922년 2차 유실돼 방치되어 왔다. 일본은 1927년 화성 팔달문 일대 도심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홍예문을 아예 철거했다. 한편, 2010년부터는 보물 제402호인 팔달문을 해체해 보수하는 작업에 들어가 2012년 말 완료했다. 2011년 3월에는 방화수류정과 서북공심돈이 보물로 추가 지정되어 수원화성의 국가지정문화재는 5점으로 늘었다.

### 전곡선사박물관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정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28-1 일원 선사유적지는 전기 구석기시대 유적이다. 전곡읍 남쪽 한탄강이 감싸고 도는 형상의 지형에 현무암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1978년 동두천 주둔 미군 병사이자 고고학자인 그렉 보웬(G. Bowen)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강변에서 발견된 석기들은 당시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이던 김원룡 교수에게 신고되었고, 영남대학교의 정영화 교수에 의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로 학계에 최초로 보고되었다.

1979년 최초의 고고학 발굴조사 이후 그 해 10월 국가사적 제268호로 지정되었다. 1979년 이후 2009년까지 17차례에 걸쳐 고고학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곡리 유적은 추가령지구대의 서남부에 있다. 전곡리 일원을 포함한 한탄강과 임진강 연안지역에는 강을 따라 신생대 제4기에 분출된 현무암이 분포하고 있다. 연대측정 결과 전곡리의 현무암은 30만~60만 년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곡리유적은 한탄강 일대 고인류가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면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몇몇 지점에 고인류의 석기제작소 등의 생활면이 남아 있다. 전곡리 유적에서는 6,000점 이상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석기는 아슐리안형의 주먹도끼(hand-axe)들인데 양면가공된 것과 단면가공된 것이 있다. 평면이 타원형인 것과 침두형인 것이 모두 있으며, 이들 일부는 몸통이 두텁고 큼직한 박편흔으로 덮여 있어서 아프리카의 상고

안(Sangoan) 석기공작과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다. 전곡리에서는 주먹도끼 외에도 사냥돌, 주먹찌르개, 굽개, 흠날, 찌르개 등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발견되었다. 전곡리 구석기들은 12만5000년에서 20만 년 전 유물로 추정된다.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들은, 1970년대 말까지 유행한 구석기문화를 주먹도끼의 존재 유무를 통해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유럽으로 양분하던 모비우스(H. Movius Jr.)의 학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로서, 세계 구석기학계의 고인류에 대한 문화적 발전과정 연구에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제공했다. 동아시아에서도 구석기공작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후 문제점들이 드러나 종합정비계획이 요청되었다. 전곡읍 서남편 유족보존지역이 전곡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지역 여론이 형성되고,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보면 1994년부터 2007년까지 290억 원을 들여 사유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 공원화 정비, 토층전시관을 건립하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252억 원을 들여 박물관·유적관·자료관·조각공원·전망대·식물원 등을 건립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90억 원을 들여 한탄강변 식생복원과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정되어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정리하면,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민선 자치시대 들어 본격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보존과 교육자원화 관광자원화가 추진되었으며, 민선 3기에 박물관 건립 준비에 들어갔고, 박물관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른 것은 민선 4기 때다.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2004년 문화재청에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승인한 후 2005년 경기도가 도립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방침을 확정

했다. 현대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장소라는 과거의 개념을 넘어 역사문화의 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민선 3기인 2005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 박물관은 군소 사립박물관을 포함해 110여 개소에 이르렀으나, 경기도는 1,100만 인구에 비해 매우 빈약한 실정이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20여 개소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대부분 소규모 박물관이었으므로 현대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개발격차와 문화향유 기회의 부족이 심각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당시 경기북부에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거의 유일한 장소였다. 국내 구석기 유적지 100여 개소 가운데서도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첫손에 꼽히는 교육적 장소이기도 했다. 해마다 어린이날을 전후로 열리는 연천군 구석기 축제의 경우 2006년 62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세가 있었다.

그러나 축제 행사 기간 외에는 교육·홍보·전시·체험시설이 부족한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용암대지와 그 위에 자리 잡은 구석기 토층 등 국내에선 보기 드문 지질학적 체험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한탄강과 현무암 절벽 등 수려한 자연경관에 접하고 있어 역사와 문화·관광·교육체험 요소가 잘 어우러진 전곡리 선사박물관을 지어 유적지 전체를 살려 나가는 방안이 크게 부각되었다.

2005년 6월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006년 2월 건립사업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사전협의를 완료되었다. 2006년 4월 국제설계공모가 진행되었고, 건립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박물관 건축 기공식은 3년 뒤인 2009년 3월 거행됐다. 건립부지가 사적인 구석기유적지여서 2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거쳐야 했고, 전시계획 수립절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착공 2년 만인 2011년 완공되어 그해 4월 25일 개관식을 가졌다.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 전곡선사박물관은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절묘

하게 지형을 활용하였고, 건축 또한 독특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작품이다. 현대 건축의 최고 기술력을 발휘해 까다로운 시공을 완공시켰고, 특이한 곡선 형이어서 세계적으로도 고난도 건축으로 손꼽힌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국가 사적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곡리선사유적지 선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의 공인을 받은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설계공모는 UIA가 인증하는 1단계 국제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체 과정은 국제 건축계의 동향에 밝은 사단법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에 위탁하여 진행했다.

응모작접수가 2006년 3월 진행된 결과 아시아 131건, 아프리카 5, 유럽 169, 북아메리카 17, 남아메리카 20, 오세아니아 4건으로 모두 346건의 응모작이 접수되었다. 5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2006년 3월 당선작으로 프랑스 ‘X-TU사’ 니콜라 데마지에르(Nicolas Desmaziere) 팀의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미 컬럼비아대 하니 라시드 교수는 당선작에 대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내부 구성도 선사시대를 잘 표현했다”면서 “현재의 유행에 집착하지 않고 건축 역사의 교훈에 충실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은 선사박물관이 지녀야 하는 외형적 상징성과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라는 난해한 조건을 만족시킨 우수한 작품으로, 주변 환경과 이음새 없이 조화되어 건축과 자연의 구분이 모호하며, 경계가 없는 선사시대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국제주의 건축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평가받았다.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은 2012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전곡선사박물관은 건축과 전시의 조화, 유적지 보존과 박물관을 통한 활용이 조화되는 이상적인 선례로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선사유적지와 수려

한 한탄강의 자연환경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전곡선사박물관의 3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사시대 시간을 현대적인 건축물에 옮겨 놓은 ‘시간박물관’이다. 마치 타임머신과 같다. 둘째,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박물관이다. 박물관 안팎에 선사시대 환경과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져 있다. 셋째, 생태보고인 DMZ 일원의 관광자원, 한탄강관광지, 역사문화촌을 연결시킨 문화박물관이다. 역사와 문화·관광을 조화시킨 미래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은 민선 4기가 추진한 정책이다. 문화재 주변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이전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 결과 문화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야 인·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문화재 영향성 검토구역은 문화재 외곽경계<sup>(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호구역의 외곽경계)</sup>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 도지정 문화재는 300m다.

경기도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에 걸쳐 여러 분야의 문화재가 분포해 있다. 문화재의 밀집도가 높은 만큼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문화재 주변 개발 허용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경기도는 문화재와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이 개발의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문화재 영향성 검토구역 안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사업이다.

허용기준은 협의구역 내 지형, 용도지역, 주변 개발 정도, 기존 건물 층수 및 높이, 문화재의 성격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사업은 2006년부터 201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으

로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효과를 거두었고, 민원인이 기준에 따라 주변 사업의 건축 가능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 4. 문화예술 기반 확충

### 경기도미술관

경기도미술관은 1997년 3월 건립 추진계획이 처음 세워졌다. 당시 명칭은 경기도립 미술관이었다. 하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추진이 중단되었다. 즉, 민선 1기 말에 시작했다가 추진과 동시에 중단된 셈이다. 민선 2기는 초기에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2000년 말부터 도립 미술관 건립사업 재추진이 결정되었다.

2002년 미술관 건립 후보지로 안산시 초지동 667번지(화랑유원지 내)가 결정되었다. 이 일대 4만9,587㎡(1만5,000평) 부지에 건축면적 1만3,223㎡(4,000평)으로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자료실, 창작공간을 갖춘 미술관을 2006년까지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미술관 부지인 화랑유원지는 인근에 반월·시화공단 4,800개 업체가 입주해 산업기반과 관련 주거지역이 조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수도권 전철 공단역과 고잔역으로부터 10~15분 거리여서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민선 3기인 2003년 말 미술관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 미술관 건립공사는 2005년 7월 착공되었고, 민선 4기 취임 직

후인 2006년 10월 개관했다. 개관 기념전으로 경기도미술관과 바르셀로나 호안미로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호안미로 상징의 세계>가 2006년 10월 25일부터 2007년 1월 28일까지 개최되었다.

2008년 3월부터는 민선 4기의 경기도 산하 박물관·미술관 경기문화재단 통합 방침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2009년 10월에는 미술관 부설로 안산시 선감도 경기창작센터가 문을 열었고, 2013년에는 어린이 전용 복합 공간인 ‘어린이 꿈★틀’을 개관했다.

### 경기도 국악당(경기국악원)

경기도 국악당은 국악 활동의 초석을 놓는다는 취지로 민선 2기인 1999년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악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예술을 활성화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첨단 시설을 갖춘 국악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악 공연 전문 국악당을 용인시 보라동에 세우기로 한 것이다.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에 앞장 서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목적도 있었다. 경기도 국악당(초기 명칭 경기도 국악의 전당)은 2002년 6월 공사에 착수하여 2년 만인 2004년 7월 개관했다. 시작은 민선 2기이나 개관 시점은 민선 3기다. 경기도 국악당은 경기도 문화의 전당(현 명칭 경기도 아트센터)의 부속시설이다.

시설 규모는 대지 면적 3만5,855㎡, 건축 연면적 5,683㎡ 철근콘크리트 지하 2층, 지상 3층이다. 공연장의 좌석은 470석이고 부대시설로 분장실·합주실·강습실·악기보관실·의상보관실 등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국악당은 경기도립국악단(현재 명칭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상설공연장이자 연습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국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04년 개관 기념공연을 필두로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공연이 펼쳐졌다. 2005년부터는 매주 ‘토요 상설 국악 공연’이 진행되었고,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한국의 미·웨딩’을 관광용 공연 상품으로 선보였다.

2006년에는 경기도립 국악단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국악 뮤지컬 <한네의 승천>을 30년 만에 새롭게 무대에 올려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05년부터 어린이 국악 인형극 <삼년고개>, <부리부리 흑부리><sup>(2006)</sup>, <방귀대장 똥배><sup>(2007)</sup>를 제작하였고, ‘김영동의 단군 신화’, ‘김영동의 소리여행’, ‘김영동의 동요’, ‘김영동의 효 음악회’ 등 관현악에서 동요에 이르는 다양한 연주곡으로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 작업을 시도하는 공연장의 역할도 했다. 경기도국악당은 ‘전통예술 교육 강좌’, ‘교원 국악 연수’, ‘엄마랑 아빠랑 전통문화 나들이’, ‘퐁딩! 전통 문화 속으로’ 등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전문적인 국악과 전통문화를 접하고 배우는 공간 역할을 해왔다.

##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은 서울 태생이고, 독일과 미국에서 활동해 경기도와 직접적인 인연은 없다. 세계적 명성의 예술가 백남준을 기리는 아트센터가 경기도에 들어선 것은 민선 2기 임창열 도지사의 결심에서 비롯됐다. 임 지사는 1999년 뉴욕을 방문했다가 백남준과 우연히 만났다. 임 지사는 백남준이 세계 예술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임 지사는 귀국 후 국내에 백남준을 기념할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즉시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sup>48)</sup> 임 지사는 2001년 뉴욕에서 다시 한 번 백남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백남준과 경기도 사이에 미술관 건립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경기도가 2001년 11월 수립한 추진 계획을 보면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10-4번지<sup>(경기도박물관 뒤)</sup> 일원에 2005년까지 백남준미술관을 건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업규모는 3만7,470m<sup>2</sup><sup>(1만1,334평)</sup> 부지에 건축면적 4,958m<sup>2</sup><sup>(1,500</sup>

48) 이영규,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 경기도서 다시 태어난다, <아시아경제> 2018년 8월 6일.

뿐이며 주요 시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자료실 창작공간을 갖추기로 했다. 백남준 미술관은 세계적 수준의 백남준 작품을 전시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자원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건립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02년 3월 백남준스튜디오로부터 소장품 67점, 비디오 아카이브 2,285점, 뉴욕 브룸가 작업실 일체<sup>(메모라빌리아 자료)</sup> 구입 계약을 체결했고, 그 해 6월에는 두 번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02년 7월 1일 취임한 민선 3기는 민선 2기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백남준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업추진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진행했다.

경기도가 미술관 건립을 계획하자 백남준은 “큰 영광이며 설렌다. 세계의 많은 미술관에 내 작품이 있지만, 고국에 미술관을 가지는 것이 소망이었다. 경기도의 좋은 조건과 확고한 의지, 고향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리움으로 그곳이 마지막으로 쉴 곳이다”라고 하였다. 백남준은 가장 뛰어난 자신의 작품이 있는 미술관,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기념하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소장품을 선정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작업하던 나사못 하나부터 2,300여 개에 달하는 비디오 아카이브를 경기도에 기증했다.

그런데 백남준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백남준의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우수 미술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경기도는 따라서 백남준 미술관 건립 사업의 우선순위를 작품 확보에 두기로 했다. 도는 미술사의 새로운 조류인 미디어 아트의 메카로서 백남준 미술관을 건립, 이미 확보한 작품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거점을 지향하고, 건축설계도 백남준의 예술세계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국제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2003년 건축설계를 국제 현상공모하여, 독일 건축가 키르스텐 쉘멜과 마리나 스탄코비치의 작품을 공동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초기 백남준미술관으로 추진되었던 건립 사업은 백남준아트센터로 이름

을 바꾸어 민선 3기 임기 말인 2006년 5월 기공식을 가졌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2년여 공사 끝에 민선 4기인 2008년 10월 8일 개관과 동시에 개관 기념 페스티벌 <나우 점프>를 개최했고, 제1회 국제예술상 수상자로 이승택, 안은미, 씨엘 플로리에, 로버트 애드리안 엑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2009년에는 국제학술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을 열었고, 학술지 『NJP Reader』 1호를 발간했다. 2010년은 백남준 텍스트 모음집 『백남준: 말에서 크리스토까지』를 출간하고, 제2회 국제예술상 수상자로 브뤼노 라투르를 선정했다, 2011년에는 백남준 라이브러리를 개관했고, 2012에는 백남준 탄생 80주년 기념 전시회 <노스텔지어는 피드백의 제공> 개최와 관련 프로그램 진행하고, 제3회 국제예술상 수상자로 더그 에이트킨을 선정했다.

2012년 백남준 아트센터는 <X-사운드> 전시로 월간 미술 대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에 초청받아 <백남준의 주파수로> 전시를 진행했고, 2016년에는 백남준 추모 10주기 <다중시간> 전시를 개최하고, 제5회 국제예술상 수상자로 블라스트 씨어리를 선정했다.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건립 계획이 수립된 시점은 민선 3기인 2003년이다. 어린이에게 상상력과 꿈을 키워 주고, 가족들에게 문화 및 복지 공간이 되는 박물관이 건립 취지였다. 이듬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고, 2005년 박물관 건물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완공된 시점은 민선 5기인 2010년 10월이고,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9월 26일 개관했다. 계획에서 개관까지 8년<sup>(민선 3기-민선 5기)</sup>이 걸렸고, 총사업비로 305억 원이 투입되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주소는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sup>(도로명 상갈로 6 상갈근린공원 내)</sup>다. 주소로 알 수 있듯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경기도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한다. 박물관 건물은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감안하여 국내 최초

로 체험식 독자 건물로 지어졌다. 어린이들이 전시물을 스스로 작동해 재미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깨우치고 배우며 알아 가도록 고안되고 배치되었다. 박물관 규모는 부지 6만6,641㎡<sup>(20,159평)</sup>, 연면적 9,877㎡<sup>(2,988평)</sup> 지하 1층 지상 3층에 10개의 전시실을 갖추었다.

각 전시실은 ‘호기심 많은 어린이’,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 ‘세계 속의 어린이’의 4개 주제로 나누어 스포츠, 과학 탐구, 인체 탐구, 환경, 다문화 생활 체험 등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체험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어린이박물관의 주요 소작품으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움직임을 따라가며 소통할 수 있는 키네틱 아트 작품 <양상블>(김동원 작), 돌고래에게 휴대폰을 통해 전파를 보내 교감해 볼 수 있는 전시 작품으로서, 바다를 유영하는 파란빛 돌고래와 유유히 노를 젓는 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을 생동감 있게 구현한 <돌고래와 환상의 바다여행> (최문석 작)이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전시기획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해왔으며, ‘리소스 센터’와 ‘어린이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리소스 센터’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우수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자료, 어린이 학습자료, 부모교육자료, 교사 및 전문가 자료 8,000여 권을 일반 대중에게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리소스센터를 통해 유아 및 초등교육기관 학급 단위로 대여가 가능한 문화다양성 교구인 ‘이심전심’ 대여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자문단’은 어린이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을 구현하고자 경기도 내외 어린이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 어린이자문단은 어린이의 시각에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발에 다양한 활동을 하여 박물관의 주인으로서 활동한다.

## 용인 뮤지엄 파크 조성

민선 3기는, 2005년 9월 경기도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백남준아트센터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일대를 ‘뮤지엄 파크 (Museum Park)’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인근 녹지공간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이 일대를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용인 뮤지엄 파크 사업은 민선 4기 들어 백남준아트센터와 경기도어린이 박물관 건립이 구체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더욱 다듬어졌다. 3곳의 박물관·미술관과 상갈 근린공원을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뮤지엄 간 내부 동선을 연결해 시각적·공간적 연속성이 확보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의 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용인 뮤지엄 파크의 핵심은 문화예술 산책로, 체험, 씬으로 제시되었다.

## 경기창작센터

경기도는 △예술창작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경기도의 문화가치 극대화화 및 경기도 지역 작가 발굴 및 양성 △문화예술 교육 문화산업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민선 4기인 2007년 11월 경기창작센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00-3번지 구 경기기술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경기창작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일단 본격적인 사업 착수 전에 2008년 전문가 토론회, 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 운영방안 연구용역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09년 6월 부지 5만4,545㎡, 7개동 리모델링 1만6,225㎡에 착수했다. 109억여 원이 투입된 리모델링 공사가 2009년 10월 마무리되어, 2009년 10월 29일 경기창작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기창작센터에는 국내 14명, 해외 8명 등 파일럿 입주작가가 선정되었고, ‘여기로부터’라는 개관전이 진행되었다.

경기창작센터는 장르 간 통섭적 운영으로 탈장르 복합 문화공간을 구축하여 창작중심의 전문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 교육과 도내 예술대학 및 문화

산업체와의 산학 연계, 해외 기관과의 프로그램 및 작가 교류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품이 세계적 가치를 가지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작 및 연구 레지던시 프로그램, 작품의 훼손 방지와 창고 개방 및 전시, 상설 아트페어를 위한 작품창고 프로그램, 세계적인 명사와 입주작가와의 교류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일반인의 예술이론 및 창작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문화콘텐츠 기업 연구센터 또는 대학 실습 공간을 지원하는 예술공방 프로그램, 창작 성과물을 활용한 아트 페어, 오픈스튜디오 등을 위한 국제 씬머 페스티벌 등을 열었다.

2010년 2월 선정된 1기 입주작가는 66명<sup>(국내 30명, 해외 36명)</sup>, 2011년 2기는 54명, 2012년 3기 55명<sup>(국내 43명, 해외 12명)</sup>, 2013년 3기 68명/팀<sup>(국내 52명, 해외 16명)</sup>, 2014년 4기 60명/팀<sup>(국내 51명, 해외 9명)</sup>, 2015년 5기 57명/팀<sup>(국내 39명, 해외 18명)</sup>, 2016년 6기 47명<sup>(창작 25명, 기획 22명)</sup>, 2017년 7기 35명<sup>(창작 19명, 기획 15명, 해외 3명)</sup> 등이다. 그동안 경기 창작센터에서 진행된 주요 프로젝트는 ‘르 빠비용 프로젝트 <우리시대 다문화>’, ‘지역협력 프로젝트 <섬>’, ‘지역협력 프로젝트 <123프로젝트; 큰 언덕 섬으로의 초대>’, ‘창작페스티벌 기획전 <기획전SOS>’, ‘매향리 스튜디오 기획전 <우리들의 농섬>’ 등이 있고, 해마다 상·하반기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개최했다.

###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는 1999년 시화호 간석지 육지화에 따른 생태계와 지질 변화에 관한 기초조사를 벌이던 중 화성시 환경지킴이 최종인 씨에 의해 발견되었고, 학계의 고증으로 공룡알 화석임이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확인된 공룡알은 12개 구역, 37개 지점에서 총 180여 개이며, 29개의 알둥지가 발견되었다.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는 약 80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후기 지층이다.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는 2000년 천연기념

물 제414호로 지정되었다.

민선 4기 경기도는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인근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다. 2009년 4월 30일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에서 열린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국내외 학자들은 고정리 일대에 △공룡알 화석지와 시화호 등 우수한 자연학습 자원이 있고 △부지 확보가 편리하며 △유니버설 스튜디오(추진 중)와 전곡항의 해양레저 시설, 제부도 등 해양 서해문화권과 인접해 있는 등 관련시설 연계성도 뛰어나고 △인구밀집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국립자연사박물관 입지로 최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국립자연사박물관 입지는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로 결정되었다.

### 경기상상캠퍼스

[서울농생명과학대 부지] 수원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자리 잡은 때는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제국 때 설립된 농림학교가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서둔동 일대에 자리 잡았다. 수원농림학교는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가 되었고, 1922년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로 승격했다. 수원농림전문학교<sup>(1944년 다시 개칭)</sup>로 해방을 맞은 이 학교는 1946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새 출발하였다. 한국전쟁 시기에 학교는 폐허로 변했고, 전쟁 후 유엔한국지원단과 미국해외활동본부<sup>(FOA)</sup>의 지원으로 학교 재건이 시작되었다. 1952년부터 1962년 사이에 많은 건물이 들어섰으며, 1992년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개칭했다.

농생대는 2003년 관악캠퍼스로 옮겨갔다. 서울대는 관악 이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1,000억 원을 빌려서 썼다. 이 차입금을 갚기 위해 2006년부터 10여 차례 부지 매각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결국 서울대는 2007년 차입금 상환 대신 농생대 부지를 재정경제부에 이관했다. 농생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었으나 실행되지

는 못하고 5년 여 세월이 흐르면서, 농생대 부지는 방치되다시피 했다. 경기도는 2012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국가에 넘기고 대신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넘겨 받았다. 경기도는 애초에 이 자리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을 옮겨오기로 하였으나, 자금 문제로 무산되었고, 2014년부터 농생대 부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는 서울농생명과학대학이 2003년 관악캠퍼스로 옮겨간 이후 방치되었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 구 서울농생대 부지를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을 세웠다. 15만2,000여㎡<sup>2(4만6,080평)</sup>에 이르는 부지에 옛 강의실 등 22개동의 건물과 울창한 자연녹지 공간으로 남아 있는 이곳을 경기도를 대표하는 신개념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목표였다. 1세기 가까이 우리나라 근대농업발전을 선도한 중심 지역이었으나 자연 상태로 방치된 이곳을 최소 투자와 민간 창의성 최대 활용 방식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구상이었다. 일단 1단계로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 2단계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3단계로 국제교류 등 외부 협력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민선 6기인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완료했다. 10년 넘게 학교용지로 묶여있던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경기도와 서울대 공동소유 부지를 지번분할을 통해 개발부지로 확정했으며, 기본 건물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무허가 건축물 8개동의 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경기청년문화창작소’가 본격 추진되었다. ‘경기청년문화창작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한 플랫폼이다. ‘경기청년문화창작소’는 구 서울농생대 농원예학관 5개 층<sup>(지하1층·지상3층·옥상)</sup>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농생대의 부지와 건물들을 청년, 예술인,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화재생을 시행하기 위해 2015년 4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조성 및 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해 11월부터 본격적인 리모

텔링 공사에 들어가 2016년 5월 '경기청년문화창작소'를 개관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은 농원예학관 리모델링에 이어 농화학관, 농업공작실, 농공학관 등의 리모델링 사업을 잇따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생활 1980', '청년 1981', '공작 1967', '생생 1990', '공간 1986', '교육 1964', '디자인 1978' 등 새로운 문화예술공간 7개동을 탄생시켰다. 건물 뒤 숫자는 기존 건물이 준공된 연도를 의미한다.<sup>49)</sup>

## 5. 문화예술 진흥과 향유

### 도립 예술단 창단

민선 1기가 출범하기 전 경기도가 창단한 예술단으로 경기도립 극단과 경기도립 무용단이 있었다. 경기도립 극단은 1990년, 경기도립 무용단은 1993년 창단되었다. 경기도는 이 두 예술단 외에 경기도립 국악단과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를 창단함으로써, 4개 도립 예술단 체제를 갖추었다. 민선 1기는 기존 극단과 무용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국악단과 팝스오케스트라 창단을 통해 도민에게 예술 향유의 질과 기회를 높이고자 했다.

4개의 도립 예술단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sup>(수원시 팔달구 인계동)</sup>을 중심무대로 활동을 펼쳤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은 1984년에 기본 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가 시작되고, 1991년 6월에 개관한 종합 공연장이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은 경기도가 소유·관리하는 곳이었으나 민선 3기인 2004년 재단법인이 되어 독립

49) 경기문화재단은 아예 본부를 인계동에서 경기상상캠퍼스로 옮겼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경기문화재단을 정리하면서 3장 1절에서 이미 살폈다.

하면서 명칭을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바꾸었다. 같은 해 7월에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개관한 경기도국악당을 부속 시설로 통합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민선 7기인 2020년 3월 경기아트센터로 이름을 또 한 번 변경했다. 경기아트센터는 민선 1기 이래 4개 도립 예술단은 정기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공연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경기도립국악단 창단] 경기도립국악단은 민선 1기 문화정책이 탄생시킨 예술단이다. 이인제 지사는 문화부문 공약으로 지역에 근거한 전통예술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선 1기는 그 일환으로 경기민요가 지역정체성의 중요한 뿌리 가운데 하나이고, 문화경쟁력을 가진 자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96년 문화예산 수립 시 국악단 창단 예산 12억 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경기도립 국악단은 민선 1기 2년차인 1996년 8월 20일 창단됐다.

1996년 1월 경기도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됐고, 3월 15명의 창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준비를 마쳤다. 8월 1일자로 초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이준호를 위촉하고, 단원 선발에 들어갔다. 초대 이준호 예술감독과 곽태현 단무장, 채주병 현악악장, 안성우 관악악장, 김혜란 민요악장이 8월 1일자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김정집 피리 수석과 박영미 가야금 수석, 강은일 해금 수석 등이 다른 단원들과 함께 8월 20일자로 입단하였다.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총 55명의 단원은 3명의 현악·관악·민요 악장과 피리 7명, 대금 6명, 소금 1명, 해금 8명, 아쟁 1명, 거문고 6명, 가야금 7명, 타악 4명, 민요 5명, 정가 2명, 그리고 단무장, 악보, 홍보, 악기 등 각 1명으로 구성되었다. 총 60명 정원에 55명으로 시작한 국악단은 1998년에 65명, 2002년에 80명으로 증원되었다. 모두 상임단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매해 내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한 오디션을 거침으로써 지속적인 기량향상을 꾀했다.

경기도립 국악단은 1996년 11월 21일 창단공연을 가진 이래 전통 음악과

창작 국악을 발표하는 무대를 꾸준히 마련했다. 민선시대 들어 구성된 예술단인 도립 국악단은 국악의 맥을 잇는 동시에 국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온 예술단으로 평가 받는다. 도립 국악단은 초기에 경기소리의 활성화와 악단의 개성구축에 힘을 기울였다.

창단공연은 1996년 11월 21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창단 공연에서 선보인 <경기축전서곡>은 경기도립국악단의 창단을 축하하는 곡으로, 한명희 교수의 축시에 의한 합창, 민요독창, 민요합창으로 구성되어, 성악과 관현악곡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제2회 정기공연<sup>(1997. 4. 23.)</sup>에서는 경기도 가락을 보급하고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제3회 정기공연<sup>(1997. 6. 4.)</sup>은 창작 국악 관현악곡의 독창성을 보여주었다. 1997년 8월 20일과 21일에 열린 창단 1주년 기념공연 ‘우리음악 대축제’는 전통음악과 창작음악, 재즈,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국악의 새로움과 현대적 재창조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연이었다. 이밖에도 해마다 신춘국악대공연과 송년무대공연과 같은 절기 공연, 경기민요와 관현악과의 만남, 팔도민요로 꾸민 어버어날 효도음악회, 경기민요 기획공연,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상설공연, 초청공연, 순회공연 등을 개최하였다.

2000대 들어서도 정기공연의 횟수를 연 2회에서 8회로 늘리고, 창작음악의 실험을 꾸준히 진행했다. 2000년에는 초대 이준호 상임지휘자가 행정상의 마찰로 12월 31일자로 퇴임을 하였고, 단원들의 청원과 민선 2기 임창열 도지사의 판단으로 2001년 12월 11일자로 재취임했다. 2002년에는 정기연주회를 10회로 늘려 ‘신년음악회’, ‘명인초대석’, ‘효도음악회’, ‘우리가락 한마당’, ‘청소년을 위한 우리음악여행’, ‘대학생 협연의 밤’, ‘가을음악여행’ 등으로 정기공연 프로그램을 정착시켰다. 2004년 7월 용인 경기도 국악당이 개관하여 도립 국악단은 국악보급을 위한 상설공연과 강습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었다. 2005년에는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김영동이 취임해 대형 창작레퍼토리 개발과 세계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경기도립 국악단은 2020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했다.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창단]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는 민선 1기 3년차인 1997년 10월 1일 창단됐다. 도립 팝스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 창단 목적으로 제시됐다. 최선용을 초대 예술감독으로 선임한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는 1997년 12월 23일 창단 공연을 가졌다.

창단 초기에는 오페라와 발레 등의 무대 공연 반주와 팝스 콘서트 등의 대중적인 공연을 주로 개최했으며, 2대 상임 지휘자로 유광이 부임한 이후 본격적인 관현악단 체제로 개편하면서 ‘경기도립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바뀌었다. 2006년 9월 3대 상임 지휘자로 금난새가 부임했고, 명칭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개칭되었다. 2011년도 제4대 상임 지휘자로 구자범이, 2014년 1월 제5대 상임 지휘자로 성시연이 부임하였다. 민선시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라는 명성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도립팝스오케스트라의 퓨전 합주 그룹인 리듬앙상블이 1999년 창단되었는데, 2010년 경기팝스앙상블로 재구성되어 2021년 현재 경기아트센터 소속 경기도예술단 가운데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팝스앙상블은 창작 국악과 서양음악을 접목한 국악퓨전 장르를 개척하고 뉴에이지 음악을 주로 연주한다. 경기팝스앙상블은 지금까지 1000여 회 공연을 가졌다.

### 공공시설을 이용한 문화학교 운영

문화학교는 문화·예술교육의 초기 형태 가운데 하나다. 문화학교는 중앙정부가 1999년부터 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각종 문화기관 및 시설을 문화학교로 지정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에 호응하여 도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인구의 저변 확대 도모를 취지로 문화학교를 늘려나갔다. 당시는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문화 관련 강좌를 열도록 지원하는 형태였다.

1999년과 2000년 동안 민선 2기 경기도의 지원으로 운영된 문화학교는 모두 25곳이다. 이들 문화학교 운영의 기본방향은 일반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기능·취미·오락 성향의 강좌는 탈피하고 원칙적으로 전통문화강좌·향토문화강좌·순수예술강좌·생활문화강좌·사회문화강좌 중심으로 운영하되, 각 문화학교의 특색을 살리도록 했다.

### 문화의 집 조성 및 운영 지원

생활문화를 일상과 문화의 접합이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첫 번째 문화정책으로 문화의 집을 꼽을 수 있다. 문화의 집 정책은 경기도의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경기도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문화의 집을 늘려나갔다. 경기도 최초의 문화의 집은 민선 1기 시절인 1997년 12월 개관한 부천시 송내동 부천문화의 집이다.

문화의 집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고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민선 2기 들어서다. 1998년 김포문화의 집, 1999년 광명문화의 집, 평택문화의 집, 의왕문화의 집, 2000년 남양주 진접문화의 집, 이천 장호원문화의 집이 문을 열었다. 민선 2기는 1999년 성남문화의 집, 2000년 과천 부림동문화의 집, 오산 신장동문화의 집, 화성 봉담문화의 집, 양평 서종문화의 집 조성에 도비 4억9,500만 원(국비 9억9,000만 원, 시군비 9억9,3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문화의 집 7개소에 도비 4,75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했다.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과 친근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다음 다섯 가지 목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첫째 각종 회의, 친목모임, 토론의 장, 소규모 감상, 상담, 정보자료 제공 공간이자 문화환경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둘째, 공연 전시 감상 등을 통해 문화욕구 유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셋째, 공연예술 제작, 미술품 제작, 공방, 경연, 영상작품 시사, 제작발표 등을 통해 창작욕구 실현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한다.

다. 넷째, 예술기초 소양교육, 지역문화강좌, 단기강좌, 컴퓨터 교육, 건강증진 강좌 등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사회참여, 지역예술인 활동 증진, 답사, 놀이문화, 축제, 경연 등 다채로운 문화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한다.

### 모세혈관 문화운동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경기도가 민선 3기인 2003년부터 시작한 문화복지 정책이다. 경기도는 그 해 5월부터 ‘실핏줄이 산소를 나르듯 문화의 향기를 경기도내 전 지역에 구석구석 나르자’는 취지로 모세혈관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 독립예술단이 지역주민, 학생과 학부모, 산업현장, 전통시장을 찾아가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민화합과 친목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통해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누구를 관람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4개 형식으로 나뉘었다. 첫째는, 지역주민과 소외계층, 환자,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의 향기를 읍·면·동까지’, 둘째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예술무대’, 셋째 산업현장의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직장인을 위한 이동 예술무대’, 넷째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터 음악회’다.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774회 공연을 통해 89만 6,505명이 관람했다.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독립예술단들이 소속된 경기아트센터의 문화복지 사업으로 2011년까지 계속되었다. 경기아트센터는 모세혈관 문화운동에 이어 ARTS-HABITAT<sup>(2012-2014)</sup>, 경기문화나눔31<sup>(2015-2020)</sup> 등 공연 예술 문화복지 사업을 진행했다.

###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모세혈관 문화운동이 경기도예술단들의 공연 위주라면, 찾아가는 문화에

술활동은 공연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문화예술 소외지역에서 공연토록 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은 민선 3기인 2004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되어, 민선 4기에 활성화된 문화복지 사업이다. 2004년 5월 12일자 경기도의 공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재소자 수용시설 등에서 문화예술 공연  
경기도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포함, 소외계층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추진한다고 5.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센터, 공단 등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교정시설, 소년원 등 재소자 수용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국악(전통 타악협주, 국악 관현악, 국악 실내악 등) △음악(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등) △연극(인형극, 마당극, 뮤지컬 등) 등을 공연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술품 및 공예 전시는 사전조사결과 수요가 없어 금년에는 운영하지 않고 2005년도에 실시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공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및 기타 참고자료(프로그램, 단체 인적구성, 홍보계획)를 5.20일까지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연 여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상 장르·수혜 지역·계층별 형평성 및 지원 규모·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민선 4기 들어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더 가다듬어진 이 사업은, 민선 5기인 2013년 통계를 보면, 3,918회의 공연에 105만2,478명이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은 여건상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관람하기도 힘든 안산시 풍도나 화성시 국화도 등지를 주요 공연 장소로 삼았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은 향유자 측면에서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예술 창조자 측면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공연단체에 지속적인 공연 기회

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은 이후로도 해마다 공모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 예술교육 멘토 프로그램

예술·문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민선시대 들어 계속 확대되었으나 농어촌과 소도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문화예술 교육은 감당하기 벅찬 과제였던 게 사실이다. 민선 3기는 이른바 문화 소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예능 레슨을 통해 예술 감성과 소양을 길러주는 예술교육 멘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예술교육 멘토 프로그램은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주관하고 도립 예술단원과 객원 예술인들을 예술강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들 예술단원과 객원 예술인들은 소규모 학교 및 공부방, 아동복지시설, 특수학교, 특성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음악·연극·무용·미술 등 예술 분야 이론과 실기를 지도했다. 학급당 인원을 10~15명으로 구성하여 강사와 수강생이 멘토(Mentor)와 멘티(Mentee) 관계로 예술 분야를 지도 받았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2004년 77곳 2,612명의 학생에게 3,052회 출강하여 27종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05년에는 2,383명에게 6,120회 29종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예능 실기 교육은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술교육 멘토 프로그램은 공교육에 새로운 예능 교육 모델을 시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문화나눔 사업의 한 모델로서도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한국 교육이 입시에 치우친 교육이라는 절대적 한계에 갇혀 있는 상태여서 예술교육 멘토 프로그램은 더 확대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 수 있다.

### 박물관·미술관 지원 확대

민선 4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집행했다. 민선 3기인 2006년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민선 4기인 2008년 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기준을 합리화하고 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확대하여 공·사립 시설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도록 했다. 박물관·미술관은 역사와 정서가 스며있는 유산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배우고 미래의 가치를 발견하는 주요한 문화시설이자 지역 인재의 산실이다.

2009년 현재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은 등록관이 114개소, 미등록관이 55개소로 총 169개관으로 파악되었다. 시군별로는 평균 5.5개관이고, 분야별로는 유물·민속·공예·도예·만화·로봇·종교·조명·항공·우주·회화·조각·설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테마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 33관<sup>(29%)</sup>, 사립 72관<sup>(63%)</sup>, 대학 9관<sup>(8%)</sup>이다.

경기도는 2006년 18개관에 8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28개관 11억 원, 2008년 36개관 12억 원을 지원해 특별전·기획전,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2009년에는 예산을 14억 원으로 늘리고 총 43개관에 보조 큐레이터 사업과 홍보사업까지 지원토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 6월부터 도내 공공미술관과 박물관을 연중무휴로 열도록 했고, 야간에도 개관하는 정책을 폈으며, 8월부터는 모든 공공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을 무료로 전환했다.

## 6. 국제교류와 축제·행사

### 부천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는 민선 1기 때인 1997년 시작되어, 아시아 최대 규

모의 장르 영화제로 성장한 영화제다. BIFAN<sup>(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sup><sup>50)</sup>으로 약칭되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는 “대중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판타스틱영화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장르 영화의 새로운 경향에 대한 신선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관객 및 국내의 영화 관계자들로부터 변함 없는 지지를”<sup>51)</sup> 받아온 영화제가 되었다. 경기도가 적극 지원한 BIFAN은 부천이 경기도 문화산업 분야 선도 도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토대로 작용했다.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한 부천시는 1973년 부천군 소사읍이 시로 승격된 이래 인구 80만의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관통하고 공항이 인접한 교통요충지로서 6,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한 과밀도시로 지역산업구조를 첨단형으로 점차 바꾸어 나가는 것이 당시 현안과제였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상동개발지구내 약 30만 평 규모의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영상테마파크를 비롯하여 근린공원과 운동장을 건설함과 동시에 영상산업 업체가 입주하도록 유도하여 산업과 문화, 삶이 한데 어우러지는 미래형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국제영화제를 유치했다. 영상산업은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일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상징적 의미도 매우 컸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부천시의 영상산업단지화와 국제 판타스틱영화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96년 11월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했고, 1997년 2월 문화체육부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1997 영화제 사업비는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이었다. ‘사랑·환상·모험’을 주제로 한 제1회 BIFAN은 비경쟁 영화제로서 1997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천시민회관을 비롯한 5개소 6개관과 야외 상영장에서 27개국 113편의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관객

50) 영화제가 처음 조직될 때부터 약칭은 PIFAN이었으나 2015년 개최도시인 부천의 영문표기가 P에서 B로 바뀌면서 BIFAN으로 약칭도 바뀌었다. 여기서는 BIFAN으로 표기를 통일했다.

51)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홈페이지 소개글. [http://www.bifan.kr/01\\_bifan.asp](http://www.bifan.kr/01_bifan.asp)

9만1,313명을 기록했다. 개막작은 <달세계 여행>, 폐막작은 <키친>이었다.

2019년 23회를 맞기까지 BIFAN에서 소개된 작품 가운데 수많은 작품이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하고,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2005년 당시 부천시장과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으나 2007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영화제가 이어졌다. BIFAN은 2020년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국제 영화제다.

### 세계 마당극 큰잔치

민선 1기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국제행사로 <세계마당극큰잔치 '97 경기/과천>을 들 수 있다. 1997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과 과천에서 제 27차 국제극예술협회<sup>(ITI)</sup> 총회와 세계공연예술축제<sup>(Theatre Of Nations)</sup>가 열렸다. <세계마당극큰잔치 '97 경기/과천>은 <세계연극제 '97 서울/경기>의 부분행사로서 '97 세계연극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연극협회와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가 공동주관하며 문화체육부, 경기도, 과천시가 후원했다. 실질적인 사업기획과 집행은 실행위원회에서 맡아 추진하였다.

과천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연희 양식에 기초하여 성장해온 한국의 마당극을 세계 유수의 야외극과 함께 우수성을 검증하는 세계마당극 큰잔치를 1997년 9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과천시민회관과 정부제2종합청사 앞 특설 무대 등에서 열었다. 공연작품은 마당극의 기본정신과 양식에 부합하고 환경친화적인 열린 공연, 거리극, 야외극, 현장극으로서 세계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럽 등 11개국 28개 작품이 공연되어 18만 명이 관람했다. 이 국제행사는 서울이나 대도시가 아닌 경기도의 중소도시에서 최초로 대규모 국제 예술제를 개최해 문화의 중앙 편중을 막고 지역문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당극은 한국적인 연희 양식이지만 '열린 마당'에서 '신명나는 굿판'을 벌여 국내 마당극 운동에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 연극계에 새로운

공연 형식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1998년에는 <‘98과천 세계마당극큰잔치>, 1999년에는 <과천 세계공연예술제/ 마당 ‘99>, 2000년에는 <과천 마당극제 2000>가 열렸다. 이후에도 ‘한마당 축제’라는 명칭으로 2012년까지 해마다 열렸고, ‘과천축제’, ‘과천 누리馬축제’ 등의 명칭으로 맥이 이어졌다.

### 국제조각심포지엄

민선 2기에 시작된 국제행사로는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있다. 조각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조각가를 초청해 진행한 축제 형식의 행사다.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이천과 김포에서 시작되었다. 도내 최초인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은 1998년 7월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일대에서 국제조각가 친선협회 회원 16개국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열렸다. 중견 조각가가 조각하는 과정을 도민이 직접 관람하게 하고, 완성된 작품은 이천시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20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천에서 열리는 국제 조각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2021년 현재 260여 점의 조각 작품이 탄생해 설봉공원과 온천조각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었다.

김포에서도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열렸다.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문수산 기슭에서 지오바니 안셀모 등 국내외 조각가 8개국 16명<sup>(국내 7명)</sup>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분단된 남과 북, 내륙과 해안의 교차점에 위치한 김포가 평화통일을 선도하라는 염원을 담아 ‘통일’로 정했다. 완성된 작품 30점은 문수산 휴양림에 조성된 김포국제조각공원에 설치되었다.

### 경기도 세계도자기 EXPO

민선 2기 경기도는 <경기도 세계도자기 EXPO>를 2001년 개최하기로 하고 1998년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가 도자기 박람회를 구상한 계기는 여주·이천·광주가 뛰어난 한국 전통 도자기의 맥을 이어온 지역이고, 지역 도

자기 축제에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도자기 축제에 주목하고 축제를 발전시키려는 구상은 민선 1기 때도 있다.

민선 2기는 1998년을 기준으로 제9회를 맞은 여주 도자기축제와 제12회 짝인 이천 도자기축제와 함께 제1회 광주 분원 왕실 도자기축제를 적극 지원했다. 우리나라 500여 지방행사 중 3개 지역 도자기축제와 인삼축제가 흑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전국 1,100여 개의 요장 가운데 950여 개의 도예업체가 3개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경기도는 향후 여주의 경우 생활자기, 이천은 예술도자기, 광주는 왕실도자기를 중심으로 모두 479억 원을 투입하여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을 꾸미는 한편 이천·여주·광주에 도자기관련 종합단지를 건립하고 도자기 엑스포를 계기로 세 지역을 역사·레저·휴양 시설이 복합된 종합관광벨트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8년 12월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1999년 5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처가 구성되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재단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사무실을 두고 1실 6부 54명<sup>(사무직 36명, 공무원 파견 18명)</sup>의 조직을 갖추었다.

재단의 1999년 예산은 142억 원이었고, 재단의 사업은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이천·여주·광주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 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의 성공 개최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①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②엑스포의 조직·운영과 자원 조달 및 집행 ③엑스포 개최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추진 ④엑스포 부대사업의 시행 ⑤엑스포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⑥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⑦기타 엑스포 홍보 등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00년 프레 엑스포] 2000년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일간 엑스포의 사전행사 격인 프레 엑스포<sup>(Pre-EXPO)</sup>가 이천·여주·광주에서 개최됐다. 프레 엑

스포에서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도자기 전시판매, 대한민국 도자전, 북한도자전, 청자 찾잔전 등 전시와 토야·토우 만들기, 클레이올림픽, 내가 만든 도자기, 손도장 찍기 등 관람객 참여형 행사를 기획하여 호응도가 높았다. 프레 엑스포 기간 동안 16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56억 원의 매출 수익을 올렸다.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이천·여주·광주에서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 동안 ‘흙으로 빛나는 미래’라는 주제 아래 새 천년 세계인의 한마당 문화잔치로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는 국내외 관람객 목표를 400만 명<sup>(내국인 380만, 해외 20만)</sup>으로 설정하고 총 1,400여억 원을 투자하였다.

청와대·문화관광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 등 중앙정부의 후원과 세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도자협의회<sup>(IAC)</sup>, 미국도자교육평의회<sup>(NCECA)</sup>, 미국요업협회<sup>(AcerS)</sup> 등 권위 있는 국제도자기구의 공식후원과 공인을 획득한 결과 당초 목표를 50%이상 상회하는 총 606만 명<sup>(국내 585만, 해외 21만)</sup>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이로 인하여 3개 지역의 경제가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도자 문화가 세계 도자기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도자엑스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2,000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4만1,000명으로 추계되었다.

세계도자기EXPO 2001에는 중국 북경고궁박물원,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 호림박물관, 아이치현 도자자료관, 나고야 시립박물관, 세브르·루브르 박물관과 국내외 유명작가 등이 참여하여 3,200여 점의 국보급 작품을 확보·전시하였다. 또한 전 세계 도예인을 대상으로 창의와 예술적인 경쟁을 통한 세계도자예술의 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1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비엔날레에는 총 67개국 2,019명이 4,206점을 접수했는데, 이는 국

제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였다. 비엔날레는 2022년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sup>52)</sup>

엑스포와 함께 국제도자학술회의와 제39차 ICA집행위원회, 국제도자 워크숍 등을 통해 세계도자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도자전문가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역사적 정통성 정립과 체계화를 위하여 한국도에 1만년사 CD를 발행하고, 국내 최초로 한국의 도자기 가마 100선도 발간해 도자산업의 현황과 자료를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새천년 통일기원제

민선 2기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뀌는 시점을 새로운 천년의 시작점으로 보고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행사와 이벤트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진행했다. 우선, 1999년 7월부터 ‘평화의 종’ 주제로 들어가 1999년 제야에 거행된 <새천년 통일기원제>에서 처음 타종했다. ‘평화의 종’은 임진각 동쪽에 건립된 ‘평화의 종각’에 안치되었다.

종각 옆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피스 가든’과 64개국 86개 전쟁지역에서 수집된 돌로 구성된 조형물 ‘평화의 돌’을 건립하였다. <새천년 통일기원제>는 도내 각계 인사 25명으로 꾸려진 추진위원회가 준비하는 형식을 취했다. 1999년 제야에는 임진각에서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고, 다큐멘터리 영상물과 백서가 제작되었다.

### 스페인 까탈루냐주 문화교류

경기도는 민선시대 들어 세계 곳곳의 지역들과 자매결연을 확대했다. 문화영역에서는 스페인 까탈루냐주와의 자매결연이 가장 주목된다. 민선 2기인 1999년 3월 경기도-까탈루냐 자매결연이 성사됐다. 바르셀로나를 주도(州都)

52)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제11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광주 경기도자박물관, 온라인플랫폼에서 열렸다.

로 하는 까탈루냐주는 스페인에서 소득과 문화수준이 높고 독립적 색채가 강했던 주다. 자매결연 후 경기도는 이후 여러 차원에서 까탈루냐와 문화교류를 진행했다.

우선 까탈루냐주 주도 바르셀로나 몬주의 음악분수대를 모델로 기술 이전을 받아 경기도 관광 진흥 차원에서 노래하는 분수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1999년 희망 시군을 접수받은 결과 고양시를 최적의 입지 지역으로 결정하고 고양시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100억 원<sup>(경기도 80억 원, 고양시 20억 원)</sup>을 들여 분수대 시설을 2001년 착공, 2002 월드컵 이전인 2001년 11월 경 준공한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는 일산구 장항동 305번지 일산호수공원 안에 세워졌다. 최초 개장식은 2004년 4월 30일 열렸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 타결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5만1,700㎡ 면적에 분수 지름 50m, 최고높이 35m이고, 기본 35가지에 최대 500가지 음악분수 연출이 가능하다.

노래하는 분수대에 이어 안토니 가우디 한국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안토니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sup>(성 가족 성당)</sup> 등 바르셀로나 곳곳의 현대 건축물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가로서, 가우디 특별전은 국내 조형·디자인 산업의 발전 촉진의 한 계기로 기대를 모았다. 특별전시회는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 하루 평균 관람객 수가 1,627명,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래 1일 최대 입장인원 기록<sup>(2,794명)</sup>을 세우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15일 동안 관람객은 2만 4,408명으로 집계됐다. 입장수입 7,861만 원, 작품집 판매 수입 1억4,083만 원 등 총 2억1,944만 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전시회는 ‘도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축제’로 평가받는 동시에 풍부한 가우디 건축 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11월 22일 스페인 까탈루냐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까탈루냐·경기도 문화친선의 밤> 공연에 경기도립무용단 조흥동 예술감독을 비롯한 단원

29명과 스텝이 파견되어 성황리에 공연을 가졌다. 또한 민선 3기 들어서도 2003년 6월 경기도·경기문화재단이 바르셀로나 국제정보센터<sup>(cibob)</sup> 재단과 공동으로 한-EU 국제학술회의를 여는 한편 경기도국악단이 전야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경기도 상징조형물도 설치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몬주익 올림픽 스타디움 앞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황영조 선수가 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조형물을 2001년 9월 설치했다. 조형물은 가로 6m, 높이가 5.5m, 두께 2.4m의 국내산 자연석<sup>(9개)</sup>으로 음양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됐다.

### 중국 광동성과 상호 전통정원 조성

경기도는 민선 1기인 1996년 중국 광동성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었다. 민선 3기 손학규 지사는 2002년 10월 광동성을 방문해 '우호교류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두 지역 간 우호협력 증진과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양국 전통정원을 상호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에 설치된 한국 전통정원 <해동경기원>은 광동성 광주시 월수공원에 2004년 착공하여 2005년 준공됐다. <해동경기원>에는 2006년 말 통계로 누적 2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해동경기원> 조성 공사는 34억2,4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기관 광공사가 진행했다. 한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효원공원에 조성된 중국 전통정원 <월화원<sup>(粵華苑)</sup>>은 2006년 4월에 완공했다. <월화원>은 전정<sup>(前庭)</sup>과 후원<sup>(後園)</sup>으로 구성된, 중국 영남정원의 전형적 구조다.

### 세계생명문화포럼

세계생명문화포럼은 국내외 1백여 명의 사상가·활동가·학자 등이 모여 지구적 차원의 '생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 자리다. 세계생명문화포럼은 민선 3기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마다 진행되었다. 생명문화포럼의 취

지는 ‘세계생명문화포럼 배경 전문’에 잘 드러나 있다. 길지만 그대로 인용한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세계는 희망을 가지고 새 천년을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지 불과 수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에게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 삶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등이 번쩍인다. 전쟁과 테러, 빈곤과 부정부패, 인권 유린, 자연 파괴 등 죽음의 문화가 전 인류와 온 생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지금까지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간 삶의 바탕인 지구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인류 문명은 결국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 대 위기<sup>(Big Chaos)</sup>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위기에 주목하면서 한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의 학자와 문화예술인, 시민 사회 지도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전 지구적 재앙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의 마당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인간의 삶이 다른 인간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명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모시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원만하고 차원 높은 새로운 문명적 삶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새로운 문명적 삶을 감히 한국어로 ‘살림’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인류는 죽음의 문화를 가져온 현존하는 물질주의 등의 오류를 극복하고 못 생명들이 함께 생동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살림’의 가치혁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03 생명문화 한마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오늘의 상황을 철저하게 진단·반성하고 그 대안을 찾으며 실천의 방도를 세우고자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생명과 관계된 문화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동서양의 여러 사상과 실천들을 살펴볼 것이다. 즉, 우리는 아직 묻혀 있는 옛 아시아의 문예와 지혜들을 전면적 탐색·재조명하고, 세계 곳곳에서 논의되고 실천된 생명문화의 사례들을 나누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문화 혁신을 모색, 단계적으로 실천하면서, 문예의 부흥과 대혁신에 걸맞는 미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사·철(文·史·哲)을 통전하는 웅숭깊은 문화이론의 창안에 한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집중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의 뜻을 모아 2003 생명문화 선언문을 작성하여 현재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살림’의 가치 혁명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그것은 생명과 평화, 그리고 서로 다른 것 사이의 모순과 조화를 기치로 하는 새로운 인류 문명 탄생의 선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정신을 해를 거듭하며 심화·확산시킬 것을 다짐한다.

<생명문화포럼 경기 2003>은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렸다.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를 주제로 생태주의와 생명사상<sup>(주제마당1)</sup>, 생명의 문화적 통로<sup>(주제마당2)</sup>, 공생의 삶과 생명의 경제<sup>(주제마당3)</sup>, 동아시아의 역사와 상생<sup>(주제마당4)</sup>, 생명문화와 지역발전계획-‘살림’의 경기도 만들기<sup>(특별마당)</sup>로 나누어 김지하 시인, 장희익 녹색대학 총장, 최재천 서울대 교수, 리카르도 나바로 지구의벗 의장, 반다나 시바 환경운동가<sup>(인도)</sup>, 쓰무라 다카시 생명운동가, 쉰거 베이징대 교수 등이 참가해 생명위기의 대안과 실천의 방법을 모색했다.

<세계생명문화포럼 경기 2004>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sup>(파주출판단지 내)</sup>에서 (사)생명과평화의 길·경기문화재단 주최, 경기도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후원으로 열렸다. ‘한국의 생명담론과 실천운동’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는 생명사상과 생명학 정립을 위한 모색<sup>(주제마당1)</sup>, 생명의

문화적 통로-생명의 기억과 전승<sup>(주제마당2)</sup>, 생명의 각성·살림의 물결<sup>(주제마당3)</sup>, 시민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sup>(전체마당1)</sup>, 종합토론<sup>(전체마당2)</sup>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문화행사로로는 <아름다운 모심굿-“한울님이여, 창세신화여!”>, <그들 살림굿-“그들이 우주를 바꾸네”>, <시민살림마당 “소박한 삶이여 民의 문화여”>가 펼쳐졌다.

<세계생명문화포럼 경기 2005>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파주 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동아시아 문예부흥과 생명평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포럼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모심, 힘찬 살림’이었고, 동아시아의 생명사상과 한국 생명학, 생명운동과 여성주의, 동아시아의 문예부흥과 호혜망, 한류와 세계문화, 민족 자생 풍수와 현대적 시·공간관 등의 주제마당 발표가 진행됐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풍류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공연과 생명영화제, 음악제, 춤, 굿 등 문화행사가 열렸고, 9월 5일부터 6일까지는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서 산사체험과 김영동의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세계생명문화포럼 경기 2006>은 고양시 종합전시장<sup>(킨텍스)</sup>에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포럼의 주제는 ‘생명사상과 전 지구적 살림운동’이었고 생명사상·생명문화·생명경제·생명정치 4개 분야로 나뉘어 박영숙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마타기 교유코 일본 가네가와 네트워크/NET 정치학학교 총장, 에바 랑 독일 생태경제학자 등이 참가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4년간의 발표 내용을 압축한 ‘생명평화선언’을 발표했다. 문화행사로 ‘생명평화음악회’가 진행되었다.

## 세계평화축전

민선 3기 때인 2005년은 ‘경기방문의 해’였다. 경기도는 21세기의 가치인 평화를 앞세운 세계적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것이 <세계평화축전>이다. 경기도의 위탁을 받은 경기문화재단은 2004년 재단 내에 세계평화축전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세계평화축전 2005>는 ‘함께 나누는

평화'를 주제로 DMZ·도라산역·임진각 등 남북대립의 현장에서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국내외적으로 전파하는 행사를 열었다.

<세계평화축전>은 2005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42일간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를 중심으로 평화통일과 인류평화, 생명문화를 존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었다. '비폭력 트레이닝 캠프' 등 학술교육 프로그램, '광복 60주년 기념공연', '음악의 언덕 콘서트'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생명촛불 파빌리온', '통일기원 돌무지' 등 테마 프로젝트, '자유로 얼굴전', '동티모르 특별전' 등 특별행사 프로그램, '평화의 행진', '평화의 벽 꾸미기' 등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주요 행사로 운영하였다.

이들 행사에는 해외 초청국 총 24개국 30개 단체에서 150명이 참여하였고, 국내 출연자는 총 72개 단체에서 2,800명이 참여하여 총 192회의 공연을 열었다. 행사기간 총 방문객은 115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생명촛불 파빌리온, 통일기원 돌무지 등 기부프로그램에는 총 2,078명이 참여하여 1억 3,837만6,000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다. 이 기부금은 유니세프와 유진벨재단에 전달되어 세계 빈곤아동과 북한 어린이를 위해 쓰이도록 했다.

<세계평화축전>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이미지개선위원회에서 2005년도 국가이미지개선에 기여한 행사로 선정되었다. 도라산역·임진각·자유로 등은 기존 '안보 관광지'에서 '평화' 이미지로 새롭게 인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평화'라는 추상적 가치를 문화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국내 최초로 '지역축제'에 대한 접근과 참여 방식으로 방문객에게 '기부' 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계평화축전 기간 동안 부대 특별 행사로 '세계생명문화포럼', 'DMZ 포럼', '하늘에서 본 DMZ전', '동티모르 사진전' 등이 개최되었다.

<2006 세계평화축전>은 민선 4기 취임 직후인 2006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평화, 그래서 하나가 되는 평화'란 주제로 열렸다. 21일에는 한민족을 상징하는 하얀색으로 민족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디자이너 앙드레킴의 패션쇼와 세계평화의 날 조직위원회 위원장 제레미 질리(Jeremy Gilly)가 보내온 영상메시지로 세계 192개국에서 세계 평화 의지를 동시 선언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22일에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기아체험과 B-Boy 등이 참여하는 평화콘서트, 오카리나 앙상블 공연, 서울코다이싱어즈 혼성합창 등 음악공연이 열렸다. 23일에는 댄스페스티벌과 광명 농악, 경기소리긴잡가, 포천 메나리 등 무형문화재 공연, 플라멩고, 고양송포호미걸이 등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가 개최됐다. 24일에는 양주소놀이굿, 파주금산리민요 등 문화예술행사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평화 마라톤대회인 'One-Korea'가 진행됐다.

###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제1회 DMZ다큐멘터리영화제가 '평화생명과 생태환경을 통한 전 세계인의 화합'을 주제로 민선 4기인 2009년 10월 22일~26일 비무장지대(DMZ)·민통선·파주출판문화단지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 영화제는 경기도와 파주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공연영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UNESCO한국위원회·경기관광공사 등이 후원했다. 영화제의 전야제는 DMZ 내 대성동 마을에서 10월 21일 열렸고, 개막식에서는 DMZ평화생명선언 선포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제1회 행사인데도 33개국에서 60편(해외 32개국 52편)이 출품되어 국제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참여인원은 모두 3만9,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영화인 조재현이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윤도현·김제동 등 유명인이 홍보대사로 나섰다. 영화제와 동시에 자전거투어, 문화행사, 책잔치, 농산물판매,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보고 느끼고 참여하는 복합문화 축제'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참신한 이슈 발굴로 적은 예산으로 큰 홍보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열린 제2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도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37개국에서 85편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13개 섹션에서 모두 135회 상영했다. 관람객은 모두 1만4,0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주요작품으로는 <저달이 차기 전에>, <용산 남일당 이야기>, <체코에 평화를>, <귀를 기울이면>, <주차장 사람들> 등이 있다. 연례 영화제로 자리를 굳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아시아권 작품을 집중 발굴·소개하여 아시아 다큐멘터리영화제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굳혔다.

## 7. 문화산업

### 경기 디지털아트하이브

경기도가 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최초의 기구는 재단법인 경기 디지털아트하이브(GDAH)다. 경기 디지털아트하이브는 조직과 장비를 갖춘 종합지원센터로서 만화·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육성하기 시작했다. GDAH의 공식 설립일은 민선 2기 때인 2001년 8월 29일이고, 출범일은 2002년 3월 28일이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적극 육성 정책이 경기도에서는 경기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형태로 첫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조직이 2005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 및 확대 개편해 오늘에 이른다.

[설립 배경] 제조업 중심이던 경기도에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새

로운 대책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제기되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별로 IT 관련 신산업 육성책을 추진 중이었고, 경기도가 산업연구원에 문화산업 육성 실행계획 용역을 의뢰한 결과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게임·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 분야가 유망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1년 3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설립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부천시는 해당 분야를 특화시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 3월 부천시 송내역 부근에 위치한 동양화재사옥 6개 층을 임차해 (재)경기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했다.

GDAH는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들을 입주토록 하고 센터에서 공용장비실 운영, 투자조합 참여,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GDAH는 해외 견본시장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지원하여 입주업체가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하도록 도왔다. GDAH는 또한 우수 문화 콘텐츠 제작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조합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GDAH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창작콘텐츠의 수요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콘텐츠 생산기업에 대한 경영 및 컨설팅 제공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신기술·해외동향·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공 △애니메이션·캐릭터·컴퓨터그래픽 등의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실무중심의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운영 △문화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GDAH의 주요성과를 보면, 입주사의 주요작품으로 2003년 인디펜던스가 <원더풀데이즈>란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선보였고, 2004년에는 센터가 투자와 마케팅을 지원한 마고21의 <오세암>이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인 '안시 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레인버스와 드림픽처스21은 입주 당시 기획작이던 애니메이션을 완성해 2004년부터 레인버스의 <투모야 친구들>은 EBS에서, 드림픽처스21의 <레카삼국지>는 MBC에서 각각 방영하였다. <투모야 친구들>은 서울 YMCA 선정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과 정보

통신부 주관 4분기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KBS 2TV에서 방송한 <요랑아 요랑아>는 문광부 주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에서 TV부문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부천의 GDAH 창업지원센터는 허브라기보다는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에 가까웠다. GDAH가 2005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인 2014년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탄생했다. 문화창조허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화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플랫폼이다. 판교 경기문화창조 허브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공간지원, 창업 지원,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이어서 2015년에는 광고와 복부<sup>(의정부)</sup>에, 2018년에는 서부(시흥)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차례로 개소했다.<sup>53)</sup>

한편, 경기도는 GDAH 발족 외에도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부천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도비 5억 원을 지원하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지원하는 등 영상산업 지원을 강화했고, 부천 대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지원하여 애니메이션 장르 지원도 늘렸다. 향후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을 경기도의 차기 성장엔진 가운데 하나로 보고 GDAH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지원

부천시는 1990년대 말부터 만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만화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1998년 12월 제1회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sup>(PISAF)</sup>을 기념해 제1회 부천만화축제를 개최했고, 이미 부천만화정보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했다. 만화와 관련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부천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53) 2021년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 산하 문화창조허브는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서부권역센터(부천)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성과는 창업 2,100여 건, 일자리창출 6,300개, 스타트업지원 5만3,300여 건, 이용자 62만여 건이다.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은 만화산업의 기획·창작·생산·판매·소비 기능을 집적화하여 경쟁력을 배가하기 위한 만화영상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었다. 부천시는 문광부 주관 7개 지역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평가에서 2003년부터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추가사업비로 교부받았다. 민선 3기 경기도는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은 부천시 상동 529-2<sup>(도로명 부천시 길주로 부천영상문화단지 내)</sup>에 국비 300억 원, 도비 150억 원,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해 지어졌다. 2003년 11월 착공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박물관·만화도서관·기업지원관·PISAF 등 부천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만화 관련 시설들을 한 곳에 집적하고, 애니메이션 전용 상영관, 문화상품 판매관, 아카데미관, 만화산업 R&D 센터를 입주시켜 명실공히 한국 최대의 만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지 1만7,724㎡에 건축연면적 2만3,489㎡,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며, 디지털만화규장각, 한국만화박물관, K-Comic 아카데미, 국제만화가대회, 부천국제만화축제 등을 운영한다. 미션은 ‘만화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며, 비전은 ‘문화강국, 한국만화가 선도하겠습니다’이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전신은 전술하였듯이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다. 경기콘텐츠진흥원 (2011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은 설립일을 2001년 8월 29일로 잡고 있는데, 이 날은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가 출범한 날이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는 2005년 9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우수 문화산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품질 문화콘텐츠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조성으로 집약된다. 다시 말해, 고품질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견실하고 우수한 디지털 문화 산업체의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를 세계의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 중심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국내 창작콘텐츠의 수요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콘텐츠 생산기업에 대한 경영 및 컨설팅 제공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신기술, 해외동향,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공 △애니메이션·캐릭터·컴퓨터그래픽 등의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실무중심의 고급인력양성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운영 △문화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초기 성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초기 성과를 보면, 우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했다. 경기디지털진흥원 입주 회사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 사무 공간 임대 지원, 기숙사 지원, 인터넷 전용선 지원 등의 시설지원 사업을 벌였다. 장비지원 사업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사용되는 공용장비는 제작사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가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을 지원했다.

1차 공용장비<sup>(렌더팜)</sup>로서 최첨단 렌더링 시스템을 전담요원 배치와 함께 365일 서비스해, 입주 회사는 물론 외부의 애니 제작사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제작비용의 절감과 제작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06년 공용장비 운용실적을 보면, 렌더팜은 총 391건 6,000만 원, 종합편집실은 70건 7,7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주요 실적으로 (주)MK픽처스의 <아이스케키>, <구미호 가족>, 박찬욱 감독의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주)알지애니메이션의 <빼꼼>, <머그트레블>, 서울예술대학 HD영상의 <몬스터 베틀2006>, (주)레인버스의 <포도밭 그 남자> 등과 같은 작품의 렌더링과 편집·합성·색보정 등 후반작업을 지원했다.

다음으로, 스타기업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했다. 문화콘텐츠의 해외 판로 개척은 물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기업의 매출증진 및 수익성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입주사의 해외전본시장 참가를 지원해 해외시장 파악과 수출판로를 개척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마케팅 지원의 일환으로 캐릭페어, SICAF, BCWW 등 국내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입주사의 작품들을 홍보했다.

경기도내 스타기업과 우수 프로젝트를 육성하기 위한 영상 및 문화콘텐츠 투자조합도 결성했는데, 투자 규모는 187억 원이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영화·애니메이션·게임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20억 원을 출자하고, 출자금 2배수 이상을 경기도 문화콘텐츠 기업 및 도내 이전 예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투자조합을 통해 향후 해외 메이저 콘텐츠 제작사의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 메이저 제작사 프로젝트의 공동 참여 기업에 대한 투지지원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도록 했다.

경기도의 문화콘텐츠가 해외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해외수출 비즈니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정보 수집 및 디지털콘텐츠 관련 산업체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 추진을 통해 진흥원 내 아카데미 네트워크 교류를 형성했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 전문 문화산업행사들을 참관했다. 2006년 5개의 해외마켓에 80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231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고, 각 시군의 문화산업 관련기관과 참가단 모집에서부터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홍보 마케팅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중국 상해지역과 일본지역에 거점을 구축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체계를 형성했고, 남북 교류를 통한 애니 공동제작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10월 현재 총 3편의 애니메이션을 완성하는 시범사업을 벌였다.

또한 국내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의 경영자들이 대부분 제작자 출신이기 때문에 생기는 경영상 또는 법률 회계상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입주 회사에게 특허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창작활동에 대한 컨설팅에서

부터 공동제작 투자유치 및 기업공개 자문, 해외마케팅 및 수출에 관한 자문에 이르는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했다.

2006년 말 현재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광고엔터테인먼트의 <초록숲 이야기>가 KBS의 스타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제작비 9억5,000만 원을 투자 유치했다. <청의6호>, <암굴왕> 등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10개의 계열사를 지닌 일본의 빅5 애니 전문 그룹인 (주)GDH그룹의 한국현지법인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내에 유치했다. 제작센터를 통해 유치한 장편 ‘클레이 애니메이션’ <럭키서울> <sup>(제작비 35억 원)</sup>을 2008년 개봉목표로 동국대학교·싸이더스픽처스·광고엔터도이먼트가 산학관 협약 제작방식으로 진행토록 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의 효율적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디지털문화콘텐츠는 다른 산업에 비해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보와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해외 메이저업체의 제작기술과 노하우 습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의 디지털애니메이션 전문교육기관인 경기디지털콘텐츠아카데미를 2004년 3월 부속 교육기관으로 설립하였다. 경기디지털콘텐츠아카데미는 디지털애니메이션 전공 학생 16명을 선발하여 1년 2학기의 학제로 운영하였고, 2007년도부터는 2년 4학기제로 운영했다. 아카데미 교과과정의 특성은 다른 교육기관들과 차별화하여 실무 중심의 최신기술 체득을 위해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감독 등 업계 전문가들의 특강으로 체험교육과 산학협동 협약을 통한 공동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의 특징을 살린 최적의 로케이션 환경도 제공했다. 2005년 11월 경기영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영화·드라마·뮤직비디오 등 77편의 영상물 촬영을 지원하였다. 경기도내 촬영장소를 발굴하고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시스템을 바탕으로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행정지원은 물론 세트장 섭외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침으로써 영화·영상제작팀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야외영화제·영화가족캠프·사랑방극장 등 경기도민에게 영상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영상문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아울러 국가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상산업의 신진 영화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경기영상창작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게임산업 육성과 지원에도 힘썼다. 2006년 10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G스타 조직위원회'는 국내 게임전시회의 위상정립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sup>(MOU)</sup>을 체결하고, 킨텍스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국제 게임전시회 <G스타2006>을 공동주최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국제 게임전시회의 업무협약 및 공동주최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도모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게임산업 지원은 향후 아시아 최고의 게임전시회가 될 'G스타'와 함께 경기도 게임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업체 유치 및 해외 게임 바이어의 참가를 통한 한국 게임산업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이후 주요 실적] 2005년 12월 <아시아디지털콘텐츠마켓플레이스 2005>를 개최했다. 이듬해에는 중국 상하이시 다매체산업원에서 한-중 디지털콘텐츠 미래발전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2007년 1월 진흥원 본사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번지<sup>(춘의테크노파크Ⅱ)</sup>로 이전했다. 2008년 제6회 전국문화산업정책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어서 240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2009년 경기도 콘텐츠기업협의회를 발족했다. 그 해 9월 제1회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개최했고, 10월에는 제1회 DMZ 다큐멘터리영화제를 개최했다. 이 영화제에는 세계 30여 개국 62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2010년 콘텐츠기업 대출 보증제를 도입했고, 1인 콘텐츠기업을 위한 창업 마당을 부천시 춘의테크노파크 안에 개소했다.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신화창조 프로젝트 지원작인 <마당을 나온 암탉>이 극장 개봉하여 280만 명

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10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2년에는 DMZ 대성동마을에 최초로 개봉영화관을 설립토록 지원했다. ‘찾아가는 콘텐츠 상상버스’를 운영해 민통선 통일촌과 풍도를 방문했다. 그 해 6월에는 경기창조콘서트를 개최했다. 2013년 5월 개최한 국제임쇼 코리아 2013<sup>(현 플레이 엑스포)</sup>는 5만1,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1,6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다.

2014년 5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개소했다. 허브의 소재지는 성남시 공공지원센터다. 이어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드 문을 열었고, 부천·안양·판교에 UHD/HD 편집 및 3D 프린터 공용장비 지원 시설을 구축했다. 그 해 10월에는 성남 공공지원센터 내에 ‘빅파이센터’도 개소했다. 2015년에는 수원 광고비즈니스센터에 광고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개소했고, 2016년에는 의정부시 CRC 빌딩에서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개소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성장·혁신·균형을 핵심가치로, ‘첨단 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창조적 진흥기관’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2002년 매출액 목표는 33조 5,000여 억원, 사업체 수는 2만3,400여 개, 종사자 15만2,700여 명이다. 경기도 남부는 게임산업, VR·AR산업, 지식정보산업, 경기도 북부는 출판산업, 디자인산업, 방송·영상산업이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며, 전국 매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이러한 콘텐츠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콘텐츠 향유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류우드<sup>(고양관광문화단지)</sup> 조성

한류우드<sup>(한류-WOOD)</sup>는 민선 3기 경기도가 세계적 관광산업의 추세에 따라 추진한 관광전략사업이다. 한류라는 당시의 문화적 조류와 관광 분야의 흐름을 접목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류우드는 수도권 숙박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2000년부터 추진한 국가 정책 사업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한류문화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체계적 집적 육성과 관광상품화를 융합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기도는 고양시 대화동·장항동 일원 99만4,000평 규모의 부지에 테마파크·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영상·방송 등 문화콘텐츠 집적단지를 구축, 한류우드라는 세계적 문화관광 복합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한류와 한류월드] 한류<sup>(韓流)</sup>라는 용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일본·베트남·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 등 대중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대중음악 장르에서 시작된 한류는 곧 TV드라마·영화·게임·음식·패션 등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었고, 지역도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유럽·중동·남미 등으로 번져 나갔다. 한류는 한국인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안겨 주었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효과를 유발했으며, 국가 브랜드 파워를 높였다. 경기도가 한류의 중심을 꿈꾸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 흐름에 착안한 것이라고 하겠다.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별칭인 한류우드는 한류와 할리우드(Hollywood)의 합성어다. 할리우드가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것처럼 고양의 한류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라는 뜻이 담겼다. 하지만 한류우드라는 명칭은 어썩지않은 따라하기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래도 경기도는 한류우드를 고수했으나 결국 한류월드로 바꾸었다. 한류월드는 한류우드보다 어감이 낮고, 더 폭 넓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착수와 경과] 한류우드는 민선 3기인 2004년 1월부터 추진에 들어갔다. 2005년 11월 1구역 사업용지 공급 공고를 낸 결과 5개 컨소시엄 182개 업체가 사업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통해 1구역 사업자로 한류우드(주)가 최종 선정됐다. 2006년 5월에는 부지공급계약이 체결됐다. 1구역은 테마파크<sup>(24만여㎡)</sup>와

상업시설<sup>(4만2,000여㎡)</sup>을 2010년까지 개발, 연 관광객 60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한류우드(주)는 미국계 금융회사 Wachovia사와 외자유치 투자협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류우드(주)가 결국 사업을 포기했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선 6기인 2016년 CJ ENM이 사업자로 선정돼 ‘K-컬처밸리’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다가 민선 7기인 2019년 사업계획이 또다시 변경돼 VR·AR<sup>(가상·증강현실)</sup> 최신 기술과 결합된 최신형 탑승 놀이기구와 공연장으로 구성된 ‘CJ라이브시티’ 개발로 계획이 변경됐다. ‘CJ라이브시티’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

호텔과 상업시설,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EBS디지털통합사옥, JTBC스튜디오 오는 일단 먼저 들어섰다. 엠블호텔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북부 최초 5성급 호텔로 문을 연 소노캄 고양호텔, 한국방송전파통신진흥원 산하 기관으로서, 대형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 기존 TV 방송과 1인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는 시설이 들어선 빛마루 방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EBS디지털통합사옥은 2017년 EBS본사가 이전을 완료했고, JTBC스튜디오는 2019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축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주도하여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2008년 작성됐다. 이 로드맵은 경기도 문화산업 클러스터 특화 전략 및 문화산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선 문화산업 지표조사를 통해 도내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산업 선도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GCCR<sup>(Gyeonggi Cultural Contents Ring)</sup>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로드맵은 경기도 문화산업 실태를 파악하고 도내 시군의 문화산업 연계 및 산업 방향성을 제안하는 문화산업 발전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이 실행전략을 바탕으로 고양의 방송 영상 클러스터, 성남의 게임 클러스터, 부천

의 만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경기도를 콘텐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부천의 영상미디어센터, 고양의 한류월드 중심의 콘텐츠 육성체계, 성남의 게임캠퍼스 구상도 로드맵에 포함되었다.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기존의 문화 산업단지는 주로 도시 외곽의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써 문화상품 제조형 문화산업 공간 공급에는 적합하지만, 문화콘텐츠산업을 비롯한 여타의 문화산업을 위한 산업 공간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산업단지 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의하는 바 이외에는 입지조건, 사전행정절차 이행,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기존의 문화산업 육성정책들이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단지 등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이미 형성된 도시 및 산업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지구지정이 용이하여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효율적이다.

경기도는 민선 4기인 2008년 4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 592-2, 530~533, 544~546, 548번지 일원 부천 영상문화단지 및 인근상가 44만9,120㎡<sup>(92필지)</sup>를 부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였다. 부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업체를 유치하여 관련 산업 및 클러스터 조성을 활성화하였고, 조성자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4종의 부담금 면제 및 도로점용 허가 등 12종의 허가 및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폭 생략해 주도록 했다.

2009년 2월에는 고양시 장항지구 66만4,700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장항지구 일대에는 국내 최대 국제전시장인 킨텍스와 종합 전시 공

연장인 아람누리,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다. 이 지정으로 고양시는 방송영상산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280억 원을 투자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9년 말에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과 정자동 일원 124만6,000여㎡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성남시는 게임 및 IPTV 등 디지털콘텐츠 문화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있어 교통·통신·금융 등에서 특징점이 있는 서현동과 정자동 일원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지구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도 간주되게 되었다. 이 지정을 계기로 성남시는 성남 창조기업 육성센터 설립, 게임 분야 디지털콘텐츠 연구개발 및 상품화, 국제 기능성게임대회 개최 등 문화산업 기반을 구축했다.

###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경기도는 성남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유치를 계기로 도내 게임산업 육성 및 산업 트렌드 선도를 위해 민선 4기인 2009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Korea Serious Game Festival 2009)을 개최했다. 기능성게임이란 게임적 요소에 재미있는 학습·훈련·건강 등 특정 목적을 부가하여 제작한 게임형태의 융합 콘텐츠다.

경기도는 기능성게임이 향후 10년간 게임 산업 성장을 주도하리라는 게임 업계의 전망에 따라 기능성게임 콘텐츠와 기술을 기업과 대중에게 선보이는 마케팅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KSF2009는 신 성장산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반 확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출상담회·채용박람회 등도 함께 개최해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에도 KSF2010이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4일간 열렸다.

##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5년부터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상 지역을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2009년 부천시, 2010년 고양시가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영상·미디어 교육을 하고, 제작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21세기형 영상도서관으로서 공공 아카이브 운영, 전용 상영관 운영 등 다양한 시네마테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 내 학교나 문화기반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연계하기도 한다.

부천 영상미디어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복사골문화센터 내 6층에 연면적 893㎡ 규모로 2010년 개관했다. 부천 영상미디어센터는 부천문화재단·고리울 청소년 문화의 집 <꾸마>·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컨소시엄으로 시작했다. 고양 영상미디어센터는 덕양구 성사동 어울림누리 내에 2010년 말 개관했다. 고양문화재단과 고양지식산업진흥원이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 방송영상클러스터인 고양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송영상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한다.



## 4장

# 민선시대 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

민선 1기

민선 2기

민선 3기

민선 4·5기

민선 6기

# 1. 민선 1기

민선 1기 이인제 도지사는 문화 분야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다. 언론 인터뷰 기사를 하나 먼저 인용한다.

이천·여주·광주 등 전통적으로 도예문화가 발전했던 지역을 도예문화의 트라이앵글로 만들고, 이 지역에서 매년 세계도자기축제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9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연극제 기간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국제연극제를 연 뒤, 격년으로 국제연극제를 열 생각입니다. 이천·가평·수원·의왕 등 몇 개 도시가 벌써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립국악단도 내년에 창단, 남도민요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지닌 경기민요의 계승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96년도 예산 중 12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sup>54)</sup>

취임 직후의 이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정계와 법조계, 중앙행정부(노동부장관)를 거쳤지만 문화 분야는 사실 아는 게 많지 않다”고 전제한 다음 “문화의 비중을 회복시키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도백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인터뷰에서 제시했던 정책과 사업은 임기 중 모두 실현되었다.

이 지사는 도정 4대 방침 가운데 세 번째로 ‘문화근본’을 내세울 만큼 문화를 도정의 중요 정책 분야로 격상시켰다. 6공화국과 문민정부로 이어진 시기의 문화강국 담론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대선 출마를 위해 퇴임함으로써 이 지사의 재임 기간은 2년여에 불과하지만 경기도 문화 정책에 획을 긋는 일들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민선 1기 ‘문화근본’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54) “경기도/이인제 경기도지사(우리지역 문화청사진 13)”, <조선일보>, 1995년 9월 19일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5/09/19/1995091971403.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5/09/19/1995091971403.html) (검색일 2022년 4월 18일)

## 성과 1 - 문화예술 진흥의 토대를 닦다

[조례 제정과 재단 설립] 이 지사의 문화정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과라고 하면 단연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과 경기문화재단 창립을 꼽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는 경기도 문화정책의 방향을 민선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법적 틀이 되었고, 경기문화재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앞선 문화예술 기관으로 기록되었다. 이 지사는 앞서 인용한 인터뷰에서 “도민과 기업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가칭 경기문화재단을 설립, 문화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의 두뇌가 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과 경기문화재단 창립이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공론을 수렴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 지사 취임 직후 발족된 경기행정쇄신위원회에 문화분과위원회가 설치되고, 분과위원장과 위원들에 문화예술정책 전문가들이 위촉되었다. 문화분과위원회는 면밀한 검토 끝에 조례안을 작성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여러 차례 거쳤다.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행정 관료들의 간섭은 배제하도록 문화예술 민간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설립 직후인 1997년 하반기부터 문예진흥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해 1998년부터는 본격적인 문화예술 창작 촉진, 문화예술 향수 기회 증진,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연구 사업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경기문화재단의 초기 사업을 보면 지역문화재단의 취지를 살려 운영하려는 노력이 감지된다. 하지만 문화예산의 수립·집행권을 가진 경기도와, 문화정책을 실행하는 전문가집단인 경기문화재단 간에 ‘팔길이 원칙’이 확립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책임을 민선 1기에 물을 일은 아니지만, 경기문화재단의 독립성을 민선 1기에서 더 확고하게 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예술단 창단] 이 지사 시절에 경기도립 국악단<sup>(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sup>과 경기도립 팝스

오케스트라(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가 창단되어 4대 도립 예술단 체제가 완성되었던 점도 큰 성과로 꼽을 만하다. 새로운 도립 예술단의 창단은 경기도 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 지사는 경기도 정체성 재확립과 관련해 경기민요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립 국악단은 그 연장선상에서 구상되었다. 지사 취임 직후인 1995년에 이미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경기도립 국악단은 경기민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이준호 예술감독과 단원들이 국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온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도립 팝스오케스트라도 민선 1기에 대중적 공연을 주로 하는 오케스트라로 창단되었으나, 금난새 지휘자<sup>(3대)</sup> 부임 이후 본격적인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고, 이후 구자범·성시연 등 국내 정상급 지휘자들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 성과 2 - 새로운 국제문화행사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당시 영문 약어는 PIFAN, 현재는 BIFAN)는 민선 1기 경기도와 민선 1기 부천시가 모두 원-원한 국제행사다. BIFAN 이전에 경기도 내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제가 없었다. BIFAN은 원래 민선 1기 경기도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하지만 부천시가 1996년 지원을 요청했을 때 경기도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부천시가 제조업 도시로서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상동지구엔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고 문화산업 분야에 일찍부터 정성을 쏟아온 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1997년 제1회 BIFAN은 성황리에 진행됐고, 회를 거듭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장르 영화제로 성장했다.

[과천 세계마당극 잔치] 과천 <세계마당극큰잔치 '97 경기/과천>은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성사시킨 국제행사다. 민선 1기 경기도는 이미 1995년부터 2년 후

한국에서 열릴 <세계연극제>를 유치하는 한편 격년제 국제연극제 유치 혹은 창설을 적극 검토했다. 1997년 세계연극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여는 <세계연극제 '97 서울/경기>로 실현되었고, 그 일환으로 마당극큰잔치가 열렸다. 한국 특유의 전통 연희양식인 마당극을 해외에 알리고, 여러 나라의 거리극과 야외극을 감상하는 자리로서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과천 인구규모의 중소도시도 국제연극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를 계기로 과천에서는 마당극제 또는 한마당 축제가 계속 막을 이어 열리게 되었다.

[도예문화 트라이앵글 구상] 민선 1기에 국제 문화행사로 발돋움한 것은 아니지만, 민선 1기에 토대가 닦였다는 점에서 도예문화 트라이앵글 구상도 의미가 있다. 민선 1기의 추진력 덕분에 이천·여주·광주 도자기벨트가 현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1기 이전에도 이천과 여주는 도자기를 앞세운 지역축제를 이어가고 있었고, 광주에는 조선시대 관요가 있었다. 이를 엮어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 민선 1기 초에 등장했다. 민선 1기의 아이디어는 민선 2기에서 <세계도자기EXPO>로 결실을 맺었다. 한편, 근교 화훼산업이 발달한 고양의 장점을 살린 <'97 세계고양 꽃박람회>도 민선 1기가 내세운 '문화와 비즈니스 연계' 정책의 중점사업이었는데, 이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성과 3 - 박물관 정책

민선시대 경기도 문화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역대 도지사들이 문화기반 시설인 박물관 확충에 힘을 기울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박물관은 문화적 상징성이 높고, 도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인데다, 제대로 건립하여 운영하면 문화예술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도지사의 가시적 업적으로도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1기는 이 점에 착안하여 박물관 정책

을 펼쳤는데, 이후 도지사들도 박물관 확충 정책을 적극 이어나갔다.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은 엄밀히 말해 절반만 민선 1기의 성과다. 1988년에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민선 1기가 취임했을 때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의 콘텐츠를 어떻게 채우고 꾸려갈 것인가를 결정한 것은 민선 1기 때이므로 민선 1기 문화정책의 결실이라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수집·발굴·보존·전시하여 경기도민의 애郷심을 높이고 경기도의 정체성 재확립에 도움을 준다는 도박물관의 목표와 사명도 민선 1기 들어 확고해졌다.

[지역별 테마박물관과 문화의 거리 조성] 지역별 테마박물관 조성 사업과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행정쇄신위원회 문화분과에서 제안된 사업이다. 테마박물관 조성 사업은 지역의 특성<sup>(정체성)</sup>을 드러내기 위해 적합한 박물관 조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간적 상징성이 부여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관광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테마박물관 정책은 이후 사업명은 달라졌어도 시·군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경기도에 크게 부족했던 박물관을 대폭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역시 계속 이어지면서 훗날 지역 문화지도의 기본 선<sup>(線)</sup>을 그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선시대로 접어들자마자 시도된 ‘아래로부터’ 여론 수렴을 통해 수립된 문화정책의 성공사례라 하겠다.

#### 한계 - 새로움과 구태의연함의 혼재

민선 1기 문화정책이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경기도 정체성 재확립’ 정책의 중점사업이었던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은 과거 관선 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계몽 위주 운동이어서 계속 이어질 수 없었다. 신선하

고 개념이 뚜렷했던 ‘경기이미지형성<sup>(C.I.P)</sup> 계획’이나 ‘경기도사 편찬 사업’은 순조로웠던 반면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가 실패한 원인을 꼽자면 작위적이고 동원의 성격을 띤 도 행정의 관성이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에서도 여전히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처럼 실패한 축제도 있다. 민선 1기는 시·군민의 날 등 지역문화축제는 있으나,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축제 행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1995년 10월 2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한마음대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시가행진, 건강달리기대회, 연예인 축구단의 시범경기, 에어쇼, 전쟁경험 무훈용사의 경험담 발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1996년 10월 6일 제2회 한마음 축제는 한수이북<sup>(경기북부)</sup> 균형발전 계기마련 차원에서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2회 대회에서는 우리농산물 전시·판매,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연천과 파주 지역 수해복구에 앞장 선 장병들에 대한 대대적 포상과 위문공연도 진행됐다.

그러나 한마음대축제는 1997년 외환위기<sup>(IMF 사태)</sup>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제3회 대회를 이어가지 못했고, 이를 계기로 사실상 폐지되었다. 외환위기라는 예상치 못했던 외부 요인이 결정적이지만,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 역시 명칭이나 내용 면에서 구태의연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힘들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선 1기 문화정책은 새로운 문화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의욕도 충만했기에 관선시대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성취들을 이뤄냈다. 하지만 경기도의 문화담론과 문화행정은 중앙정부<sup>(문민정부)</sup> 수준을 따라갈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문화근본’이라는 도정 방침의 방향은 옳았고, 이를 구체화한 중점정책과 중점사업은 대체로 실천되었으나, 삶의 질 전반을 문화근본의 관점에서 살펴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2. 민선 2기

민선 2기 임창열 도지사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경제부총리였다. 임 지사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다 외환위기 직후 경기도정을 맡았기 때문에 경제회생에 최우선 역점을 두었다. 민선 2기 초기 문화부문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임 지사는 문화와 관련해 내세운 공약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선 2기 문화 분야 공약은 문화기반 구축과 문화의 생활화가 전부다. 임 지사의 연설문집과 인터뷰를 뒤져봐도 문화정책에 초점을 맞춘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임 지사는 문화를 언급하더라도 원론 수준에 그치거나 문화산업 발전만 강조했다.

그렇다고 민선 2기의 문화정책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외환위기의 충격이 가시면서 민선 1기에 구상되었던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시켜 진행하는 추진력을 보였다. 민선 2기에 이루어진 성과는 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민선 2기 말에 시작된 몇몇 정책은 민선 3기와 민선 4기에서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 성과 1 - 국제교류와 행사에 탁월한 면모

임 지사는 관록 있는 관료 출신답게 대규모 행사를 치러내는 데 탁월한 면모를 보였다. 세계도자기EXPO, 이천과 김포에서 개최된 국제조각심포지엄<sup>(1998년)</sup>, 가우디 특별전, 2000년 새천년 통일기원제<sup>(1999년 제야)</sup>도 성대하게 마쳤다.

[경기도 세계도자기EXPO] 여주·이천·광주를 도예문화 트라이앵글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민선 1기 이인제 도지사의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민선 2기는 그 연장선상에서 1998년부터 <경기도 세계도자기

EXPO>를 2001년에 개최하기로 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1998년 경기도는 제1회 광주 분원 왕실 도자기축제의 준비와 진행을 적극 지원했다. 이로써 전국 지역축제 가운데 드물게 흑자를 내는 축제인 여주와 이천 도자기축제에 더해 광주까지 축제를 갖추게 되었다. 1999년에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EXPO 사무처를 발족시켰다. 사무처는 여주·이천·광주에 도자기관련 종합단지과 관광벨트 조성에 착수했다.

2000년 개최된 프레 엑스포<sup>(Pre-Expo)</sup>는 관람객이 163만 명을 넘어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 2001년 본 엑스포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 동안 ‘흙으로 빛나는 미래’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다. 경기도가 주최한 국제행사로서는 최대 규모였고, 최장 기간 지속된 행사였다. <경기 세계도자기EXPO 2001>은 경기도·한국 도자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이자, 세계 유수의 도예인들이 교류하는 장이기도 했다. 엑스포 관람객이 400만 명<sup>(해외 20만 명 포함)</sup>에 이르렀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1조2000억 원으로 발표되었다.

엑스포 행사의 하나로 ‘제1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이 개최되었는데, 이 공모전에 이 총 67개국 2,019명이 4,206점의 작품을 접수했다. 국제도자기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도자비엔날레는 격년마다 계속 이어졌다. 세계도자비엔날레는 경기도 문화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중요 행사로 자리 잡았다.

[까탈루냐주 자매결연과 가우디 전] 민선 2기는 1999년 스페인 까탈루냐주와 자매결연을 했다. 이를 계기로 까탈루냐주 주도인 바르셀로나시의 몬주의 음악분수대를 모델로 한 노래하는 분수대를 경기도에 설치하기로 하고 희망도시인 고양시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2000년에는 바르셀로나를 근거로 활동한 세계적 명성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을 서울로 유치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우디전은 국내 최초로 열린 가우디의 전시였고, 그의 자연주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래 최대 입장인원을 기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경기도가 자매결연 도시의 대표 건축가 특별전을 도내 도시가 아닌 서울에서 개최한 점은 다소 아쉽다. 당시까지만 해도 경기도 도시들이 이 정도 규모의 전시를 성공으로 이끌 역량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경기도는 2000년 이후 카탈루냐주와 상호교류 사업을 연례적으로 진행했는데, 이는 민선 3기 들어서도 ‘한-EU 회의’라는 형식으로 열렸다. 한편 경기도는 바르셀로나 몬주의 올림픽 스타디움 앞에 마라톤 우승자 황영조 상징 조형물을 세우기도 했다.

## 성과 2 - 전통문화 발굴·계승을 위한 노력

민선 1기도 전통문화 발굴·계승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나 민선 2기는 몇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가시화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무형문화재 합동 전시·공연의 장을 처음으로 마련했고, 경기도 인정종가 제도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경기도 인정종가 사업은 1999년부터 전통종가의 독특한 의식주 생활문화를 인증하여 종가의 삶 자체를 박물관처럼 보존·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종가라는 역사문화 전통 속에서 경기도 정체성을 재확립해 나가자는 취지다. 1999년 의정부시 장암동 박찬호 종가 등 11개 종가가 경기도 인정종가로 공인되었다. 인정종가를 선정하는 작업은 연차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인정종가 사업은 2009년부터 진행된 불천위(不遷位) 조사사업으로 이어졌다. 대중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은 사업은 아니나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중요한 전통(宗家)을 공식 문화정책을 통해 보존·활용하려 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무형문화재들의 기능과 예능을 도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도 의미 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1999년 경기도를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처음 열렸다. 도민들과 유리된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공개

시연의 장이 꼭 필요했는데, 민선 2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시도가 없었다. 민선 2기의 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대한 통찰이 돋보인다.

한편 경기문화체험 가상현실<sup>(VR)</sup>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를 온라인 서비스하는 사업도 민선 2기에 구상되고 착수되었다. 2000년부터 3년차 사업에 들어가 2003년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수원화성, 남한산성, 경기도박물관 등 경기역사문화를 가상현실로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사업은 민선 1기에서 시작해 민선 2기에 완성된 <경기도 문화유산 CD롬> 제작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 성과 3 - 남한산성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남한산성은 삼국시대 이래 역사의 켜가 층층이 쌓인 귀중한 역사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 수축이 이루어졌고, 인조가 향전하다가 항복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일찍이 1971년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1990년대에 성곽 일부만 보수된 상태였다. 민선 2기는 남한산성의 역사 이미지를 바로잡고 휴식을 겸한 교육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남한산성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연차적으로 성곽을 모두 복원하고 성 안 행궁을 복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실 민선 2기에 종합발전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스터플랜에 따라 정비와 복원 작업을 진행하던 중 역사 기록을 실증해주는 중요한 유물과 유구가 상당수 발굴되었고, 이를 통해 남한산성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졌다. 시대별로 축성 기술이 집약된 산성이고, 산성 내에 고유 민속과 문화유산이 전승된다는 점까지 확인되면서 2010년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이 진행되었다. 민선 2기의 마스터플랜이 없었다면 남한산성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상당히 늦춰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민선 2기의 문화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꼽을 만하다.

#### 성과 4 -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문화기반 구축 시도

민선 2기는 1999년 경기도국악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악과 전통예술 활성화 기지 조성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민선 2기 말인 2002년에야 용인시 보라동 민속촌 옆에 경기도국악당을 건립하는 공사를 시작해 민선 3기인 2004년 7월 완공할 수 있었다. 경기도국악당은 민선 1기에 창단된 경기도립 국악단의 연습공간이자 상설공연장으로서 원래 경기도 문화의 전당(현 명칭 경기도 아트센터)의 부속시설이다.

경기도미술관은 민선 1기에 건립 추진 계획이 세워졌으나 외환위기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다. 민선 2기는 2000년 경기도미술관 건립 재추진을 결정했고, 2002년 안산시 초지동 화랑유원지내에 건립 부지로 확정했다. 그러나 민선 2기 중에 착공되지는 못했다.

민선 2기 말에 시작된 백남준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 건립 추진도 있다. 백남준 미술관 추진은 임 지사가 1999년 뉴욕 방문 당시 백남준과 우연히 만났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에 백남준을 기리는 미술관 건립이 추진되었다. 임 지사는 2001년 직접 뉴욕에 가서 백남준을 만나 미술관 건립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임 지사가 퇴직하기 직전인 2002년 6월에도 경기도와 백남준 사이에 양해각서가 다시 한 번 체결되었다. 그러나 퇴임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사업의 실제 진행은 민선 3기로 넘어갔다.

#### 성과 5 - 문화산업 지원시스템의 기초 형성

경기 디지털아트하이브(GDAH)는 디지털콘텐츠 생산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직이다. 경기도가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시도한 첫 번째 기관에 해당한다. GDAH는 2001년 8월 설립되고, 2002년 3월

공식 출범했다. 민선 1기 당시 경기도의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가 문화와 관광 혹은 문화와 비즈니스의 결합 수준이었다면, 민선 2기 후반기에 와서야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과 잠재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첫 발을 댄 것이다. GDAH는 민선 3기인 2005년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 체제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 한계 - 문화정책의 청사진 부재

임 지사는 경기도 문화예술 기반인 국악당 건립을 이뤄냈고, 미술관은 재추진을 시작했다.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를 출범시켜 문화산업의 지원 체계를 갖춘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경기도의 정체성 분야에서 인정종가 사업, 남한산성 종합계획 수립 등의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임 지사 시기 문화정책의 결정적 한계는 문화청사진이 없었다.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확고한 상황이어서 문화정책은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문화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위기가 지나자마자 도립 미술관 건립 재추진에 착수했고, 인정종가 제도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남한산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이뤄낸 점으로 미루어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다고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초기부터 문화청사진이 있었다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백남준미술관의 건립은 임 지사의 아이디어였다. 백남준이라는 세계적 거장은 경기도와 인연은 전혀 없지만 그의 미술관을 건립하면 훗날 현대 문화예술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는 임 지사의 직감은 주효했다. 다만, 현대미술관인 경기도미술관도 어렵사리 재추진에 들어간 상황에서 백남준미술관 건립 지시는 즉흥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혼란과 시행착오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 3. 민선 3기

민선 3기 손학규 도지사의 문화정책 중심 키워드는 △문화경쟁력 제고 △정신문화유산의 계승 △전통으로서의 문화 △산업으로서의 문화 △생활로서의 문화 △건강한 삶과 여가문화였다. 당시 경쟁력은 어느 분야, 어느 부문에서나 강조되는 ‘덕목’이었으므로, 문화와 경쟁력을 결합한 ‘문화경쟁력 제고’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그러나 다양성, 다원성을 본질로 하는 문화에서 경쟁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개념화하기 쉽지 않다. 나아가 문화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며, 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다. 민선 3기는 스스로 설정한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문화정책들을 시도했다.

#### 성과 1 - 정신문화유산과 미래가치의 축제화

[실학축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003년부터 경기실학현양위원회를 구성하고 10년에 걸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실학축전 2004 경기>가 개최되었다. 실학은 매우 높이 평가되는 역사 유산이지만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생활 속의 문화도 강조했던 민선 3기는 전통 문화유산인 실학이 현재의 삶으로 연결되고, 미래의 대안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실학축전을 기획했다. 이듬해 실학축전에서는 ‘연암마당’ 같은 체험공간, ‘다산선생과의 하루’ 같은 마당극도 공연되는 등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 <실학축전>은 가시화하기 힘든 학문적 사유를 문화예술적으로 대중성 있게 구체화하려고 한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효 사상 고취 사업] 민선 3기가 추진한 ‘정신문화유산의 계승’ 정책 가운데는

효 사상 고취 사업도 있다. 민선 2기 때 시작된 일련의 사업이 이어진 것인데, 민선 3기는 효를 실학 못지않게 강조했다. 해마다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효를 인습적인 ‘효’ 관념을 바탕으로 한 사업들이 없지 않으나, 효를 문화적으로 재 해석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민선 2기 때 추진되었다가 부지 문제로 무산된 효 박물관 건립 사업을 민선 3기가 이어받았다. 민선 3기는 효 문화의 산 교육장이자 실천의 장으로서 ‘효행원’을 짓겠다고 밝혔다. 기존 효 박물관보다 오히려 확대된 규모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민선 3기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고, 실무를 맡은 경기문화재단이 2007년까지 효 관련 유물 수집과 특별전시회 등을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 사업을 접었다.

[세계생명문화포럼] 민선 3기는 취임 이듬해인 2003년 국내외 석학과 활동가 등 1백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적 차원의 생명 위기에 어떻게 함께 대응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계생명문화포럼’이라는 국제문화포럼을 열었다. 지구가 직면한 환경과 생태, 생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21세기의 절박한 화두였으므로 시의적절한 시도였다.

세계생명문화포럼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해마다 파주출판단지외와 고양 종합전시장에서 발표와 토론, 문화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지구적 현안에 대해 저명한 사상가, 학자, 문인, 시민운동가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의견 교환의 장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생명문화포럼은 의의가 있다. 하지만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특정인에게 의존하는 방식이었던 점은 포럼의 확장성과 지속성에 한계로 작용했다.

[세계평화축전] 생태와 생명 못지않게 중요한 21세기의 가치가 평화다. 세계평화축전은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임진각과 도라산역 등 DMZ 일대에서 열렸다. 국내외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경기도 정체성의 한 마디인 ‘분단의 땅’에서 진행된 평화축전은 2005년도 국가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행사로 선정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6년에도 세계평화축전이 개최되었다. 이후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민선 4기인 2009년 개최되는 등 DMZ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는 계속되었으나, 세계평화축전은 지속되지 못했다.

## 성과 2 - ‘한류 열풍’ 활용 한류우드 추진

한류우드는 ‘한류’라는 당시 대중문화 분야의 조류와 관광 분야의 흐름이 접목된 시도다. 중앙정부는 2000년부터 수도권에 문화콘텐츠와 대규모 숙박 시설을 융합한 인프라 구축을 모색했다. 경기도 민선 3기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고양시 대화동과 장항동 일대 328만㎡에 이르는 부지에 테마파크와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그리고 영상·방송 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세계적 문화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2004년 1월 본격 추진에 들어간 한류우드는 2005년 1구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부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한류우드라는 명칭은 한류에 헐리우드(Hollywood)의 ‘우드’를 마치 접미사처럼 댄어 붙인 이름이다. 초기부터 유치한 모방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경기도는 그 이름을 계속 밀고 나갔다. 손 지사는 임기를 마치면서 한류우드 착수를 자신의 성공적인 문화정책 중 첫 손에 꼽았다. 하지만 한류우드는 1구역 사업자가 결국 사업을 포기하면서 오랫동안 진척되지 못하다가 2016년 CJ ENM이 테마파크 사업자로 선정되어 ‘K-컬처밸리’로 이름이 바뀌었다. 호텔과 상업시설, 방송사의 사옥과 스튜디오는 이 무렵 모습을 갖추었다.

한류우드 구상 자체는 시대를 앞서갔다고 해도 될 정도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대범한 구상이었다.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한류가 이후 전 세계적인 조류로 확대되었고, 장르도 가요와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 전반이 한류의 바람을 일으킨 과정을 고려한다면, 한류우드가 예정대로 진척되었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다. 민선 3기는 한류우드의 구상과 착

수까지 진행했으므로, 사업의 지연이 민선 3기의 책임은 아니다. 여전히 미완성이므로 정확한 포점은 미래의 몫이라 하겠다.

### 성과 3 -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전환

민선 3기 취임 직후 경기문화재단은 설립 5주년을 맞았다. 손학규 도지사는 경기문화재단을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첫 번째 대표이사로 송태호 전 문화부장관을 임명했다. 민선 3기는 전임에 비해 경기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대적으로 넓게 보장했다.

2004년은 한국 문화예술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였다. 2004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체제가 시작되었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2005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전환의 방향을 정리하면 첫째, 문화예술 공모 지원의 원칙을 장르별 다건 소액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 지원 방식으로 변경했다. 둘째, ‘문화예술인 창작촌 프로젝트’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 창작 기반을 실질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셋째, 단순한 감상자 수준에 머무르던 문화예술 수용자들을 문화생비자<sup>(Prosumer)</sup>로 전환하기 위해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사업’, ‘이주 노동자 문화체험 행사’ 지원, 사회적 소수자가 어울려 만드는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 등을 새롭게 시도했다. 넷째, 소극장 등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은 문화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모세혈관 문화운동]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민선 3기가 2003년부터 시작한 문화나눔 정책이다. 실핏줄까지 산소를 나르듯 문화의 향기를 경기도 구석구석에 퍼지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의 향기를 읍·면·동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예술무대’, ‘직장인을 위한 이동 예술무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터 음악회’ 등 4가지 형식으로 진행된 운동은

경기아트센터가 진행했다. 이전부터 여러 형식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기획·실행되었어도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민선 3기가 자랑할 만한 호평을 받으며 성과를 거두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모세혈관 문화운동이 경기도예술단들의 공연 위주라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은 공연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문화예술 소외지역에서 공연토록 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은 민선 3기인 2004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되어, 민선 4기부터 활성화되었고,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예술교육 멘토 프로그램] 민선 3기는 이른바 문화 소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예능 레슨을 통해 예술 감성과 소양을 길러주는 예술교육 멘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예술교육 멘토 프로그램은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주관하고 도립 예술단원과 객원 예술인들을 예술강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문화나눔 사업의 한 모델로서도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입시 위주 교육이라는 절대적 한계에 갇혀 더 확대되지 못했다.

#### 성과 4 - 다양한 박물관 건립 동시 추진

[실학박물관] 2003년부터 실학박물관 건립 준비에 들어가 역사성과 접근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남양주 다산유적지를 부지로 결정했다. 실학박물관은 2005년 부지매입과 설계 현상공모에 이어 2006년 5월 민선 3기 임기가 끝나기 직전 기공식을 개최했다.

그런데 민선 4기 들어서자마자 실학박물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 유출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중지되고 말았다. 박물관이 들어설 다산유적지는 문

화재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터파기를 깊게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실학박물관은 중단 위기를 맞았다가 설계를 일부 변경하는 선에서 1년 2개월 후에야 재개될 수 있었다.

[백남준미술관과 어린이박물관] 민선 3기는 들어서자마자 전임 시기에 재추진된 경기도미술관 건립 계획과 역시 전임자가 백남준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백남준미술관 건립 계획을 일단 보류시켰다. 재검토 결과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미술관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백남준미술관도 이미 세계적 작가와 약속한 사항이므로 이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미술관은 2005년에 착공되어, 민선 3기 임기가 끝난 후인 2008년 10월 개관했다. 백남준미술관은 2003년 건축설계를 국제 현상공모하여 당선작을 선정했다. 백남준미술관은 백남준아트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민선 3기 말인 2006년 5월 기공식을 가졌다.

경기도미술관과 백남준아트센터가 전임시절 정책을 승계한 것이라면 민선 3기에 구상되어 착수된 문화기반 시설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다. 가족 문화 복지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2003년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2005년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했다. 박물관 준공과 개관은 2010년대에 이뤄졌지만, 민선 3기에서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을 구상하고 착수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도립 박물관 중에서 이용률이 최상위급인 박물관이 되었다.

[회암사지박물관과 전곡선사박물관] 양주 회암사지는 민선 1기인 1997년부터 시굴과 발굴 작업이 진행되어 2002년에는 5차 발굴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연차적인 발굴 과정에서 금탁 등 주요한 유물이 발견되어 회암사의 역사적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고, 2002년에는 문화재청에서 ‘불교 유적권 정비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민선 3기는 이를 계기로 회암사지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

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05년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다. 회암사지 복원과 정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연천 전국선사박물관도 민선 3기에서 도립 박물관 건립 방침이 확정되었다. 민선 3기는 특히 경기도의 박물관이 110곳에 불과해 절대 부족한 형편이고 경기 북부는 20곳에 그쳐 더욱 열악한 형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2005년 전국선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006년 4월 국제설계공모가 진행됐다. 전국선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사로 통하는 문’은 구석기유적지와 자연환경이 시간박물관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된 우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물관 건축은 민선 4기인 2009년 시작되었다. 한편 남한산성 정비·보수도 민선 3기에서 2단계 사업이 진행되었다.

#### 한계 - ‘유시무종<sup>(有始無終)</sup>’의 아쉬움

민선 3기 문화정책 가운데는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기획이 돋보이는 정책이 많았다. 경기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해 문화예술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대처하도록 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전임 시절부터 시작된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을 이어받아 우여곡절 속에서도 추진해 나갔고, 여러 유형의 박물관 건립에 새롭게 착수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선 3기에서 시작한 여러 정책과 사업이 맥을 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학축전, 세계생명문화포럼, 세계평화축전 모두 민선 4기 초까지는 이어지다가 사라졌다. 이에 대한 책임을 민선 3기가 모두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지사들이 자신만의 문화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전임자의 정책을 계승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생명과 평화 등 중요한 시대적 가치들을 담은 문화정책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폐지되고, 승계되는 정책도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민선 3기가 문화 전반을 통찰하고 흐름을 제대로 파악했다더라면 같은 재원과 노력으로 연속

성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수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 4. 민선 4·5기

엄밀하게 정리하면, 민선 4기와 민선 5기는 별도로 서술해야 한다.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할 때 중앙정부는 참여정부였고, 취임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으며, 민선 5기 중반에는 박근혜 정부였다. 세 정권의 문화정책 기조가 달랐기 때문에 김 지사의 문화공약도 민선 4기와 민선 5기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민선 5기 들어서면서 문화담론의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공약이 더 다듬어진 형태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김 지사 재임 8년 동안 진행된 문화정책의 특징은 기수별로 나누어야 할 만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선 4·5기의 특징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 성과 1 - 박물관 미술관 통합 운영과 지원 확대

[박물관·미술관 통합] 민선 4기는 2008년 3월 1일자로 도 직할 기관이었던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조선관요박물관을 경기문화재단이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당시 건립 중이던 실험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경기문화재단 소속으로 편제시켰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이 10년 동안 문예진흥 외에도 다양한 도의 문화정책 사업과 위탁사업을 수행하기는 했어도,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큰 박물관과 미술관 경영까지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민선 4기의 문화기관 통

합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06년 민선 4기가 출범할 때 내세운 문화예술 공약을 보면 △문화정책의 방향 정립 및 21세기형 문화 인프라 구축 △도민에게 다가가는 박물관 미술관 운영은 명시되어 있었으나 통합 운영은 제시되지 않았었다. 21세기형 인프라 구축이 통합 운영이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운영을 하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사후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으나, 2006년에 이런 해석은 나오지 않았다.

2007년에 당선되어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공공성의 원칙’과 ‘효율적인 운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김 지사 역시 경기도의 공공기관 통폐합을 2007년부터 밀어붙였는데, 광고테크노밸리 산하 3개 기관의 통합과 박물관·미술관 통합이 대표적이다. 김 지사는 통합의 명분으로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통합을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sup>55)</sup>

박물관과 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하면서 경기도가 내세운 또 다른 명분은 경기문화재단의 위상이 경기 문화예술의 허브이자 대표기관으로 격상된다는 것이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함으로써 탄력적인 사업운영으로 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도 했다. 통합되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도 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법인화와 통합은 관 주도 문화를 민간 주도로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하지만 기존 공무원 조직을 민간 조직인 경기문화재단에 통합시키는 데 따르는 난점도 컸다. 더구나 경기문화재단이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을 통합하게 되면 문화예술 지원 중심이던 그동안의 성격과는 궤가 다른 ‘문화예술 시설관리공단’ 성격이 짙어질 우려도 컸다.

김 지사는 2010년 민선 4기를 마무리하면서 박물관과 미술관 통합을 성

55) '산하기관 통폐합 전실행정 전행 매크', <경기일보>, 2007년 9월 7일자.

공적인 문화정책으로 꼽았다. 하지만 경기문화재단 내부에서는 혼란과 시행착오가 계속 되었던 게 사실이다. 2017년 무렵에야 명실상부한 통합을 이뤘다는 평가가 재단 내부에서 나왔다. 통합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 후다.

[박물관·미술관 지원 확대]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의 인터페이스로서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지표로 사용된다. 민선 1기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에 힘을 기울인 것은 이 때문이다. 민선 4기는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문화정책을 폈다.

우선, 2008년 6월부터 도내 모든 공공 박물관과 미술관을 연중무휴로 열도록 하고, 야간에도 개장하도록 했다. 이어 8월에는 모든 공공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전환했다. 무료화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더 많은 관람을 유도해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한 의도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2009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박물관·미술관이 169관<sup>(등록 114관, 미등록 55관)</sup>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가운데 공립이 33관<sup>(29%)</sup>, 사립이 72관<sup>(63%)</sup>, 대학부설이 9관<sup>(8%)</sup>이었다.

민선 4기는 전임 시절에 제정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를 2008년 대폭 개정했다. 그리고 박물관·미술관의 특별전·기획전,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 2009년 경기도는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43관을 지원했다. 이는 3년 전인 2006년 8억 원에 18관 지원과 비교하면 지원액으로 75%, 지원 대상 수로는 140% 가량 증가한 것이다.

## 성과 2 -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문화유산 보존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남한산성 정비·복원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것은 민선 2기 때다. 장기 계획에 따라 진행되던 남한산성 발굴과 정비 사업은 민선 4기인 2007년에 이르러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다. 첫째, 8차 발굴조사가 이뤄지던

중 하궐 복원 예정지에서 통일신라 유물과 유구가 무더기로 발굴되었다. 이는 남한산성이 신라 문무왕 때 축성된 주장성이라는 기록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남한산성 1000년의 역사가 실증된 것이다. 둘째, 남한산성이 국가 사적 제480호로 지정되었다. 남한산성은 경기도의 도립공원 수준을 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라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경기도는 광주시에 맡겨졌던 남한산성 위탁관리를 도 차원으로 변경한 다음, 2009년 경기문화재단에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을 두었다. 사업단은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했다. 이에 발맞추어 문화재청은 2011년 국내 잠정목록 가운데 우선 등재추진 대상에 남한산성을 포함시켰다. 2013년 ICOMOS<sup>(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sup>의 실사 작업을 거쳐 2014년 6월 22일 남한산성은 대한민국의 11번째 세계유산이 되었다.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추진 과정은 김문수 도지사의 재임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 취임 초인 2007년 목표가 정해졌고, 퇴임하던 달에 공식 등재되었다. 등재 확정까지 우연적 요소도 없지 않았으나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문화재청이 합심 노력한 결과이자 민선 4·5기가 거둔 문화 분야 최대 성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개발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개발 주체는 곤혹스러워하기 마련이다. 공사를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개발과 난개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늘어나면서 문화재 주변의 개발 가능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자주 불거졌다. 민선 4기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사업을 펼쳤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이란 문화재별로 지형, 용도지역, 주변 개발 정도, 기존 건물 층수 및 높이, 문화재의 성격을 고려하여 어떤 행위를 허용하고, 불허할지 기준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일컫는다. 허용기준이 미리 고

시될 경우 일일이 심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민원이 줄고,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민선 4기는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정책을 문화재 정책의 큰 성과를 꼽는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경기도처럼 개발에 가속도가 붙은 지역은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문화재 주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층위의 유구와 유물이 산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 경쟁] 민선 4기는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는 1999년 시화호 지질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200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민선 4기는 2009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이곳이 국립자연사박물관 입지로 최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했고, 이 곳 일대에 세계적 영화사인 유니버설의 스튜디오도 유치해 문화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공표했다. 하지만 국립자연사박물관 입지는 민선 5기 때인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로 결정되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실현되지 못했다.

### 성과 3 - '문화명품' 추구하고 문화복지 강화

[백남준아트센터 개관과 전시] 민선 2기 때 기획되었던 백남준아트센터가 민선 3기 말인 2006년 5월에야 기공되었고, 민선 4기인 2008년 10월 개관했다. 민선 4기는 추진과 건립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은 아니나, 개관 이후 운영에 있어서는 백남준아트센터를 세계적 현대미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 과정을 민선 4기는 '문화명품'이라 명명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개관 기념으로 국제적 페스티벌 <나우 점프>를 열었고, 제1회 국제예술상 수상자로 국내외 예술가<sup>(이승택, 안은미, 씨엘 플로이에, 로버트 애드리안 엑스)</sup>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듬해부터 국제학술심포지엄<sup>(백남준의 선물)</sup> 개최, 학술지

『NJP Reader』 발간 등 백남준아트센터가 세계적 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일련의 기획 전시와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2013년에는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에 초청받았다.

[경기창작센터 개관과 운영] 민선 4기는 2007년 11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경기창작센터 조성에 들어갔다. 구 경기기술학교를 리모델링하여 2009년 10월 개관한 경기창작센터는 국내외 작가 22명<sup>(국내 14명, 해외 8명)</sup>이 입주하도록 했다. 경기창작센터의 목적 첫 번째는 ‘예술창작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였다.

경기창작센터는 탈장르 복합 문화 공간, 도내 예술대학 및 문화 산업체와의 산학 연계, 해외 기관과의 프로그램 및 작가 교류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했다. 이를 세계적인 명사와 입주작가와의 교류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등을 위한 국제 썸머 페스티벌 등을 진행했다. 개관 이후 경기창작센터는 국내외 작가들이 입주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문화바우처 사업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일환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이 2011년 준비에 착수해,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은 ‘가가호호 문화교감’, ‘활생 문화공명’, ‘낮달 문화소풍’으로 구성되었다. ‘가가호호 문화교감’은 문화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을 예술가가 직접 찾아가 공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활생 문화공명’은 환경미화원, 돌봄 노동자, 기간제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신적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낮달 문화소풍’은 사회복지시설 등을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연계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민선 4·5기는 이들 사업을 문화나눔의 대표적 성과로 자평했다.

#### 성과 4 -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민선 2기인 2001년 설립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는 민선 3기 들어 2005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민선 4기인 2007년 1월 본사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번지(춘의테크노파크Ⅱ)로 이전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2008년 240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화산업 지원활동을 벌여나갔다. 2009년에는 제1회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시작했고, 10월에는 제1회 DMZ 다큐멘터리영화제도 개최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구축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민선 4·5기의 대표적 문화산업 정책이라고 하겠다.

[로드맵 구축]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2008년 작성됐다. 로드맵은 경기도 문화산업 클러스터 특화전략을 세우고 문화산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문화산업 지표조사를 통해 도내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문화산업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GCCR<sup>(Gyeonggi Cultural Contents Ring)</sup>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로드맵은 경기도 문화산업 실태를 파악하고 도내 시군의 문화산업 연계 및 산업 방향성을 제안하는 문화산업 발전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이 실행전략을 바탕으로 고양의 방송 영상 클러스터, 성남의 게임 클러스터, 부천의 만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경기도를 콘텐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부천의 영상미디어센터, 고양의 한류월드 중심의 콘텐츠 육성체계, 성남의 게임캠퍼스 구상도 로드맵에 포함되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영업활동,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기존의 문화산업 육

성정책들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문화산업진흥지구는 기 형성된 도시 및 산업공간을 활용하므로 효율적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민선 4기는 2008년 4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원을 부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였다. 2009년 2월에는 고양시 장항지구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장항지구는 방송영상산업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2009년 말에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과 정자동 일원을 게임 산업 중심의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 지구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기도 했다.

### 한계 5 - '관리자형' 문화정책

김문수 도지사가 8년 임기 동안 거둔 성과는 적지 않다.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켜 전통문화 발굴·계승에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남겼다. 쉽지 않은 박물관·미술관 통합을 이뤄내기도 했고, 박물관·미술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문화기반과 문화향유 양 측면에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전임자들이 착수한 백남준아트센터를 개관토록 하고 현대미술의 국제적 공간으로 육성해 나갔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건립공사를 마무리지었고, 전곡선사박물관을 완공·개관했다. 문화산업에서도 발전 로드맵을 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민선 4·5기를 대표할 만한 문화정책이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 전임자들은 자기 임기 중 마무리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경기도 문화의 흐름에 족적을 남기는 정책을 제시했다. 설령 그 문화정책이 문화예술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도로서는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민선 4·5기에는 그러한 문화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노력이 성사되었다라면 민선 4·5기의 큰 성과로 남았을 텐데, 불발되고 말았다.

기관 통합, 국제 공인, 기준 작성, 로드맵 수립 등 민선 4·5기의 문화정책은

관리자적 성격이 강하다. 문화예술은 이전의 성취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4·5기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 더구나 유지·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한층 더 성공의 충위를 쌓아간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정책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은 시기에 최고의 점수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 5. 민선 6기

### 성과 1 - 경기도에코뮤지엄 프로젝트

민선 6기 문화정책의 최대 성과로 경기문화재단이 시작한 경기도에코뮤지엄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에코뮤지엄이라는 참신한 발상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 첫 프로젝트인 경기만 에코뮤지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에코뮤지엄을 통해 문화자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주요 근거다.

에코뮤지엄은 경기도의 문화·생태 유산을 발굴·조사·연구·기획·실행·보존하는 전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공부문<sup>(경기도, 경기문화재단)</sup>과 분야별 전문가가 주민들과 협업을 통해 박물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다. 전통적인 박물관 개념과는 뚜렷이 다르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특색을 발굴, 지역문화유산을 실생활과 연계해 능동적으로 활용,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자긍심 고취, 지역문화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만<sup>(京畿灣)</sup>은 경기도의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지역이다.

경기문화재단은 2016년 경기만의 문화·생태 자원을 1차 선별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우선 시흥시·안산시·화성시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도시에 거점공간을 마련했다. 거점공간에서는 해안문화와 생태유산, 지역 역사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2016년에 <경기만을 걷는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 <선감학원>, <2016 매향리 스튜디오 이기일전>, <2016 시흥 에코뮤지엄 지난 이야기>, 2017년에 <섬에 사는 남자, 섬에 사는 여자 - 에코뮤지엄 누에섬>, <우리들의 농섬>, <제부도 아트파크 보고서 2017>, 2018년에 <섬마을 에코뮤지엄 축제>, <대부 선감지역마을 연구조사>, <여부, 소금밭에 돌아오다>, <호조별 전통문화자원조사>, <마을, 예술로 태어나다> 등을 진행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지역은 민선 7기 들어 평택시와 김포시로 확대되었다. 또한 경기만 프로젝트 외에 경기 북부의 비무장지대<sup>(DMZ)</sup> 프로젝트도 시작되었다.

## 성과 2 - 상상캠퍼스 조성

10년간 방치되던 서울농생대 자리에 ‘상상캠퍼스’를 조성한 것도 민선 6기 문화정책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서울농생대는 2003년 수원 캠퍼스를 관악으로 이전했다. 서울대는 2007년 이 터를 재정경제부에 넘겨주었고, 재정경제부는 2012년 경기도 소유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와 농생대 터를 맞교환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을 이전하고자 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실행이 무산되었다. 유서 깊은 농업교육의 요람이자 수목 울창한 농생대 옛 캠퍼스는 10년 동안 방치되었다. 민선 6기는 취임 직후 이곳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소 투자와 민간 창의성 최대 활용 방식으로, 일단 1단계로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 2단계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3단계로 국제교류 등 외부 협력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한 플랫폼인 ‘경기청년문화창작소’가 본격 추진되었다. 경기도는 농생대의 부지와 건물들을 청년, 예술인,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화재생을 시행하기 위해 2015년 4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조성 및 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해 11월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2016년 5월 ‘경기청년문화창작소’를 개관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은 농원예학관 리모델링에 이어 농화학관, 농업공작실, 농공학관 등의 리모델링 사업을 잇따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생활 1980’, ‘청년 1981’, ‘공작 1967’, ‘생생 1990’, ‘공간 1986’, ‘교육 1964’, ‘디자인 1978’ 등 새로운 문화예술공간 7개동을 마련되었다. 민선 7기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문화재단을 아예 상상캠퍼스로 이전토록 했다.

### 성과 3 - 경기 정명 1000년 행사

경기도는 민선 5기인 2014년 ‘경기도 600년’ 행사를 치렀다. 조선 태종 14년<sup>(1414년)</sup> 경기좌도와 경기도도를 통합하여 경기도가 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그런데 600년 행사를 치른 직후 경기 1000년을 기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고려 현종이 개경의 외곽지역을 ‘경기’라고 칭한 시점이 1018년이므로 2018년이 1000년이 되는 해라는 주장이었다. ‘밀레니엄’이 주는 역사의 무게를 살려 경기도 도약의 계기로 삼자는 게 주장의 골자다.

민선 6기인 2016년 하반기에 ‘경기천년 기념사업 태스크포스<sup>(TF)</sup>’가 발족되었다. 경기천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경기천년 대축제<sup>(2018년)</sup>, 경기지역학 네트워크<sup>(2016~2018년)</sup>, 경기도 현대 지역사회 기록화 사업<sup>(2015~2018년)</sup>, 경기 아카이브전<sup>(2018년)</sup> 등이 결정되었다.

상상캠퍼스에서 2개월간 열린 경기 아카이브전은 ‘경기천년기록관’에 총 6,000점을 전시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6종 139회 진행했다.

경기천년 대축제 릴레이축제는 20개 기관이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

축했다. 우선 10월 새천년 미래비전 선포식을 겸한 경기 천년 대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생태예술전, 오두막캠프, 숲 체험 행사 등으로 꾸며졌다. 이밖에 경기문화의 우수 콘텐츠를 담은 인문교양도서 100권을 선정해 <경기 천년 빛나는 정신문화>를 발간했다.

#### 한계 - 문화산업에 치우친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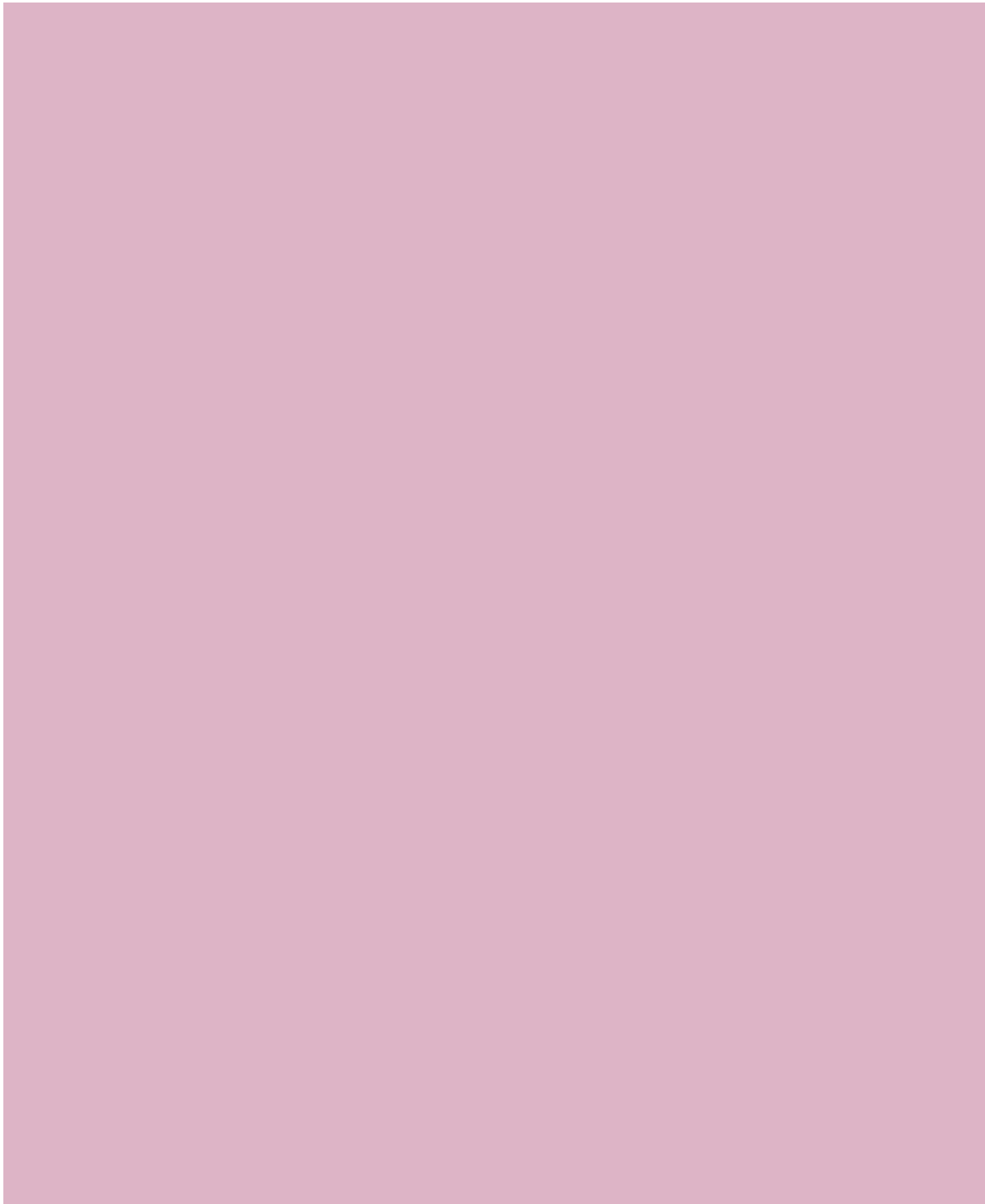
민선 6기 1년 성과에서 문화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한류월드, K-Culture Valley 추진 △G-Next 게임생태계 조성 △서울농생대 부지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 명소화 △K-디자인 빌리지 조성이 전부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은 서울농생대 부지 활용이다.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이자 예술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이 상상캠퍼스 내에 많다. 하지만 민선 6기 성과에서 서울농생대 부지활용은 문화관광 차원의 성과로 언급된다. 나머지는 모두 문화산업 분야이다. 앞선 기수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공약과 언급이 빠지지 않았다.

물론 문화산업도 중요한 문화정책의 분야이고, 위의 내용만으로 민선 6기 남경필 지사가 특별히 문화예술을 경시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남 지사 시기에 경기문화재단은 설립 20주년을 맞았고, 문화예술에 관한 한 절대적 역할을 하는 수준이 되었다. 앞서 민선 6기의 성과로 언급한 경기에코뮤지엄 프로젝트, 경기정명 1000년 사업 역시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 사업이다. 상상캠퍼스 조성 and 운영에도 경기문화재단의 비중이 컸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교육, 문화복지, 생활문화는 경기문화재단이 알아서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민선 6기에서 별도로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계획 2014~2018>을 보면 주요한 문화정책 담론과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과 융합 △문화민주주의 확대 △안정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창작 공간 및 생태계 조성 △문화공간의

재난에 대한 안전망 및 대응체계 정비 △인문정신문화, 문화정체성의 제고가 전략으로 제시되고, 핵심사업이 전략별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민선 지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은 문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마련이다. 도지사가 문화산업과 문화관광에 관한 비전만 강조하고, 문화와 예술마저 경제논리로 접근해도 괜찮은 것인지 새삼 자문하게 된다. 민선 6기에 경기도 문화예술이 퇴보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고 문화정책 영역에서 도민의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는 증거도 보지 못했다. 다만, 민선 6기가 문화와 예술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했더라면, 경기도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 5장 에필로그

경기도 문화정책 어디로?

1995년 민선 시대가 열린 이래 경기도의 문화정책이 거둔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 우선 경기도 정체성 재확립을 위해 역대 민선 도지사들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외부의 문화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경기도 정체성 재확립은 문화적 주체성과 직결되는 근본 문제였기에 민선 시대 내내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민선 1기의 『경기도사』 편찬 계획에서 민선 6기의 <경기에코박물관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처럼 캠페인성 기획이 참여형 문화·생태 사업으로 성큼 진화했다고도 할 수 있다.

민선 시대 문화재 정책도 뚜렷한 성취를 이뤄냈다.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복원 완료, 양주 회암사지 발굴과 보전, 연천 전국선사박물관 건립 등 관선시대 작업을 몇 단계 도약시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박차를 가했다. 남한산성의 경우 민선 1기부터 이어진 발굴과 복원이 민선 4·5기에 이르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쾌거로 결실을 맺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은 개발의 열풍이 불던 시기에 슬한 현장에서 조사와 발굴을 통해 문화재를 지켜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문화기반시설도 몰라보게 확충되었다. 1997년 현재 성남시·안산시·의정부시 같은 규모가 큰 도시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없었다. 그 무렵에야 부지를 마련 중이거나 설계에 들어간 게 고작이었다. 2020년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문화예술회관이야 관선시대였어도 계속 지어졌겠지만,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시설은 민선시대였기에 결실을 볼 수 있었던 문화공간이다. 경기국악원, 경기도미술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도 민선시대에 부응한 측면이 있다.

문화예술 진흥은 민선 1기에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차원이 달라졌다. 예술인 지원,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예술 교육, 생활문화 보급 등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감당한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비판도 없지 않았으나,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았더라면 경기도 문예진흥이 오늘날 수준에 이르렀을지 의문이다.

역대 민선 도지사들이 성공시켜 경기도의 문화적 위상을 높인 국제행사도 여럿이다. 세계도자기비엔날레가 대표적이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세계 마당극 축제 등 그 시기에 의미 있는 행사들도 기억된다. 물론 세계생명문화포럼이나 세계평화축전처럼 취지도 좋았고 행사도 잘 치러졌으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문화산업의 경우 민선 시대 들어서 그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 문화산업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 고양의 방송영상단지<sup>(한류우드)</sup>도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의미있는 진전이다. 부천시와 성남시·고양시 등에 문화산업진흥지구도 지정되었다. 대중음악과 게임,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배경에는 분명 경기도 문화산업정책의 효과도 있다고 본다. 문화산업은 이제 전통적인 문화정책의 범주를 벗어난 듯 보이지만, 민선 시대의 시도들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

그렇다면 역대 민선 도지사들의 문화정책의 성과에 도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은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이란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창조자와 향유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역대 문화정책의 성과와 의의를 도민들의 만족도 하나로 환원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겠으나, 공들인 문화정책들이 직면한 도민들의 솔직한 의견은 성찰과 고민의 출발점으로는 충분하다. 경기연구원 연구팀<sup>(책임연구원 김성하)</sup>이 2019년에 수행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 2020~2024』에는 참고할 만한 조사가 실려 있다.

이 조사에서 2018년 현재 경기도민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sup>(행복감)</sup>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밑에서 3번째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경기도의 만족도는 38.9%로, 전국 평균 40.8%를 밑돈다. 서울 41.1%보다도 낮다. 특히 2009년의 만족도 22.3%에서 16.6%p 높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경기도민의 만족도는 22~43% 사이에서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

일 뿐이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도민의 비율도 2018년 현재 28.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경기도민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7.7%<sup>(매우 만족+만족)</sup>으로 전국에서 9번째였다.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고, 스트레스는 높으며, 여가 불만이 큰 반면 경기도의 지역문화관련 기반은 탄탄한 편이다. 전국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 관련 지역문화진흥기관 333곳 가운데 47개 기관이 경기도에 있어, 전국 1위다. 문화예술관련 조례 제정건수도 경기도는 7.2건으로, 전국에서 2위다. 문화기반시설 수도 단연 1위다.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의 비율은 2.47%로 전국 평균<sup>(2.08%)</sup>보다 높고 전국 6위다. 역대 민선지사들의 문화정책에 힘입어 법과 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갖춰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들은 문화예술 여건이 나쁘다고 인식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기획 및 운영한 평균 공연 수는 17.3건으로 전국 2위이나 인구 1만 명당 공연으로 보정해서 산출하면 0.6건으로 전국 9위인 중하위권에 불과하다. 또, 경기도의 총 박물관 수는 전국 1위이나 인구 1백만 명당 박물관 수는 10.89개로 17개 시도 중 10위로 내려가고 만다. 미술관 수, 문예회관 수, 지방문화원 수, 문화의 집 수, 생활문화시설 수도 마찬가지다. 단순 숫자는 최상위권이지만, 인구수로 나누면 최하위권 혹은 하위권이 된다.<sup>56)</sup>

민선 시대가 개막한 1995년 경기도 인구는 774만 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3년 1000만을 넘어서고 서울을 추월하더니, 2017년에는 1279만 명이 되었다. 22년 사이에 500만 명이 증가했다. 인구밀도는 1995년 km<sup>2</sup>당 765명에서 2017년 1255명으로 늘어났다. 1995년 19개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도시는 2020년 현재 28개다. 민선 시대 내내 인구가 1년에 30만 명씩 늘어난 꼴이니 경기도는 도시화의 몸살을 피하기 어려웠다.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의 기회를 넓혀도, 여건이 이 같이 변하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56) 경기문화재단-경기연구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반기 종합계획 ; 2020~2024』, 2019, 50-51쪽.

민선 1기 이인제 도지사는 ‘문화예산 1%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보다 앞선 약속이었다. 그런데 2017년 현재 경기도의 문화예산은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그나마 관광 분야 예산까지 합해서 그렇다. 또한 경기도의 문화예산은 2017년 이래 2.08~2.49% 사이에 갇혀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꼴찌다.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은 2021년 11월 문화예산 증액과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sup>57)</sup> 문화예술의 창작자들이 처한 현실과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이야기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달라지는 점도 문화정책에 한계로 작용하는 요소다. 민선 시대가 막을 열 무렵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는 자율화·분산화·대중화·일체화·세계화였다. 자율화는 규제에서 자율로, 분산화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대중화는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 일체화는 분단에서 통일로, 세계화는 보다 넓은 세계로 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 흐름이 지금은 더욱 가속되었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의 영향으로 2000년대 한국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더욱 커지고 다양화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경기도 2020~2024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은 향후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키워드로 문화자치, 문화다양성, 문화유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장애인, 고령사회를 꼽았다. 다양화한 사회변화에 맞추어 계층별·영역별로 구체적인 문화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다.

향후 민선시대 경기도 문화정책이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문화와 문화예술, 문화정책을 보는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도지사의 문화 비전이 확고할수록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도지사의 문화에 대한 비전과 구상은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마련이다. 역대 민선 도지사치고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도지사는 없었으나 문화를 도

---

57) “2% 부족한 경기도 문화관광 예산”, <인천일보>, 2021년 11월 23일.

정의 우선순위에서 어느 위치에 두느냐는 민선 기수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문화와 예술 영역의 중요 현안은 이미 충분히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도민들의 문화권 신장을 위해 어떤 부문에 역점을 둘 것인지, 문화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문화산업과는 달리 빈사상태인 예술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고 예술가들의 복지를 어떻게 향상할 것인지, 문화영역과 예술영역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새로운 문화유산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민선 도지사는 명확하게 답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문화비전이 확실한 민선 기수가 이어져 경기도의 문화정책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이 건강해야 경기도 문화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먼저 경기문화재단이 설립 6년째에 펴낸 백서의 ‘반성’을 인용한다. 다소 길지만 재단이 설립 25주년을 앞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곡을 찌르는 자기 진단이라 본다.

재단은 그 설립의 시초에서부터 전지구적 규모의 문화적 충돌과 융합, 그리고 그 미증유의 혼란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도도하고 거시적인 물결의 영향력을 심분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조직 모델의 합리적 운용과 사업 목표의 전략적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과감히 단순화하여 말한다면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던 문화예술 부문을 ‘간접적인 행정수단’인 재단을 통해 ‘대리’수행하도록 하는 측면이 오히려 강했을 뿐, 지구적 규모의 문화적 혼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의 문화적 향체를 길러낼 것이며, 그 구체적 목표로서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도출해낼 것인가 하는 거시적 판단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그러나 재단은 바로 그러한 한반도의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문화적 프리즘’에 의한 고민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화가 음풍농월의 한가한 놀이가 아니라면, 문화가 당대의 삶의 조건과 유리된 박제된 어떤 것이 아니라면, 문화가 정치 업적을 과시하는 들러리 신세가 정녕 아니라면, 당연히 재단은 이 거센 문화적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어떻게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참된 문화적 삶을 실현할 것인가를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고민했어야 옳다. 그 대원칙은 오늘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sup>58)</sup>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하느냐는 경기도 문화정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다. 인용문에서 내부 집필진은 스스로의 통찰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는 저 지적에서 자유로운가? 경기도 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거듭 되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

58) 『경기문화재단백서 1997-2002』, 경기문화재단, 2003, 15~16쪽.

경기그레이트북스 45

**경기도의 민선도지사와 문화정책**

초판 1쇄 발행 2022년 11월 30일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생 1990

**기획**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집필** 양훈도

**편집** 오성전산 (031-292-1940)

ISBN 978-89-999-0445-5

ISBN 978-89-999-0109-6 (세트)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